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일시 : 2008. **10.2**(목) 13:30~17: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nvitation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모색은 미래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08년도 1년간 한국사회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으로 협동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은 향후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과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우리 사회가 다민족·다문화사회로 순조롭게 전환하여 서로 다른 문화가 상생·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 현

Program

13:00~13:30	등 록	
전체사회: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연구실장)		
13:30~13:40	개회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3:40~13:50	축 사	홍두승 (한국사회학회 회장)
제 1세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사회 :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3:50~14:20	주 제 1	다문화사회의 전개 양상과 문화정책 방향 발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엄한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4:20~14:50	주 제 2	다문화사회에서의 학교 교육 발표: 오은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토론: 홍원표 (고려대학교 강사)
14:50~15:20	주 제 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지형과 쟁점 발표: 최종렬 (계명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박선웅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15:20~15:30	휴 식	
제 2세션 사회통합적 다문화정책		
사회 :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5:30~16:00	주 제 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 및 정책과제 발표: 이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김성미경 (인천 여성의 전화 부회장)
16:00~16:30	주 제 2	진정한 통합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민여성 문화교육 발표: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토론: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16:30~17:00	주 제 3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발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7:00~17:30	종합토론	

Contents

제 1세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 ◆ 주제 1 다문화사회의 전개 양상과 문화정책 방향 3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주제 2 다문화사회에서의 학교 교육 29
오은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 주제 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지형과 쟁점 65
최종렬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 2세션 사회통합적 다문화정책

- ◆ 주제 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 및 정책과제 95
이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주제 2 진정한 통합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민여성 문화교육 125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 ◆ 주제 3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151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 1 세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주 제 1 다문화사회의 전개 양상과 문화정책 방향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 제 2 다문화사회에서의 학교 교육

오은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주 제 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지형과 쟁점

최종렬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제 1

다문화사회의 전개 양상과 문화정책 방향

김 이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 차

- 1. 다문화사회의 유형과 정책적 접근의 비교
- 2. 다문화사회의 전개단계와 문화의제의 형성
- 3.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계획 및 법률에 나타난 문화정책의 성격
- 4. 결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 이주의 증가와 함께 인구 구성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변화와 모순되는 사회적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주민의 사회적 위치와 한국사회와의 관계성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문제는 정치, 경제, 주거,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화적, 민족적 단일성을 전제할 수 없는 이주민의 존재를 다루는데 있어 문화적 단일성 내지 다양성은 핵심적인 의제로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문화적 차이를 둘러싸고 대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움직임의 전개에 있어 세계 각국의 정부나 시민사회의 정책적, 사회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 문제의 양상이나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성격은 이주의 역사와 이주민의 존재 양상, 주류 집단과의 관계의 성격, 사회 통합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구체적 발전 과정 등 세밀한 맥락 속에서만 그 의미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어 논의의 폭과 깊이가 제한된 한국사회로서는 기술적 차원에서 이주민 집단의 존재와 한국사회에서의 위치, 이들이 직면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져오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환경 등을 점검하고 이들의 존재와 함께 전개되는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작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가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고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간에 일정한 대안을 찾기 위한 기반으로 이념적 지향을 모색해야 하는 지점에 봉착해있다. 결국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켜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 명시적 차원의 틀을 발전시켜온 주요 국가의 사례가 역사적, 제도적 맥락이 전혀 다른 한국사회의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당장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지지대로서, 정책결정의 합리화 근거로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 역사적 맥락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형성, 발전되어온 정책적 대안을 탈맥락화, 단순화, 이상화하고 심지어 한국사회의 현재 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팽배한 가운데, 현안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까지 있으며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공허한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문화’ 논의를 둘러싼 혼란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지극히 최근 들어 형성된 것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리되어야 할 과제를 드러내주는 것일 뿐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단순히 이주민 집단이라는 특정한 대상에 한정된 것이거나 제한된 문제만을 다루는 작업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기초로 핵심적 의제를 파악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주민의 존재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의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요구와 대응이 교차되면서 문화적 역동성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는 문화 의제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문화사회가 전개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민의 수적인 증가와 이주의 환경, 이주자의 존재 양태와 한국사회와의 관계성 등의 변화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을 둘러싸고 새로운 의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관심의 초점이 이동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로서 한국사회는 이주민의 유입과 거주에 대해 상당히 제한적인 제도적 틀에 입각해 있으며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극히 일부의 이주민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실과 제도의 괴리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이주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모색하는 등 상당한 변화의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주와 이주민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 간의 관계 역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것이며 그에 따라 문화 의제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제기되는 문화의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틀과 이주민의 위치, 관계 양상 뿐 아니라, 향후 전개 가능성을 포괄하여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라 이미 가시화된 의제 뿐 아니라 조만간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는 의제의 방향을 전망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 정책의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다문화사회의 유형과 정책적 접근의 비교

이주의 증가는 가히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Castles and Davidson 2000: 54-59),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 간의 관계와 문화적 다양성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논의와 실천적 움직임은 단순히 특정 사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형성과정이나 국가내 집단간 관계, 이주의 역사적 전개, 이를 둘러싼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은 상당히 다양한 만큼,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문화의제의 구체적인 쟁점과 논의 방향, 이에 대한 실천적 움직임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비교론적 접근을 통해 주요 국가의 다문화 논의와 정책적 접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와 비교되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달리하는 주체들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의 형성 과정과 주체들간 관계의 양태, 주요 의제를 둘러싼 사회적 역동성 등의 다양성을 포착하는 데에는 소수자 집

단의 존재 양상과 국가로의 통합 방식, 주류사회와의 관계의 성격과 상대적 위치 등에 따라 다문화사회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와 관련해 Kymlicka(1995: 10-11)는 문화에 기초한 소수자 집단을 민족(국가)적 소수자(national minorities)와 종족 집단(ethnic group)¹⁾으로 구분하고 집단 구성의 성격에 따라 국가 유형을 비교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민족(국가)적 소수자는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이들이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의 통치제도를 갖추고 있던 공동체가 보다 큰 국가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소수자들로, 자신들의 독특한 사회 구성과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하며 지배집단과는 구분된 사회로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치를 추구하는 경향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이주자들로 구성된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결사체인 종족집단은 주류 사회에 대한 통합과 완전한 성원권의 확보에 주된 관심이 있다. 이들에게서는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고, 다만 문화적 다양성을 둘러싸고 자신들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제도와 관행, 주류사회의 시각과 태도를 해결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두어져 있다.

서로 비교되는 문화적 소수자 집단 가운데 어떠한 집단이 특징적으로 부각되는지에 따라 개별사회에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이 제기되고 논의되는 양상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²⁾ 등 세계적인 이민국가에서는 국가 형성 이전부터 일정한 지역 내에 자체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어느 정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역사 공동체³⁾가 존재했다. 국가 형성과정에서 이들은 침략이나 식민지배 등 비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국가로 통합되면서 주류사회와 지역적으로 분리되고 수적으로나 권력 면에서 제한된 소수자 위치에 놓이게 되었지만, 국가 체계 내에서 자신들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 토지사용권, 정치적 권한 등에 있어 다소 간의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국가는 특정 민족과 국가의 본질적이고 전면적인 관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민족국가(nation-state)라기 보다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multinational state)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을 침해할 만한 집단이 부각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민족 국가 형성과정 자체가 단일성에 대한 신념을 형성, 재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를 발달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단일성에 도전하며 다양성을 제기하는 이주민 집단은 공식적 국가문화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자발적 적응과 결과적 통합을 인정하거나 적어도 부인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들 역시 자신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구현할 수

1) 국가 구성원으로서 문화공동체인 민족과 정치공동체인 시민 개념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형성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nation과 ethnic 등 관련 개념의 번역 문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잠정적 대안으로 nation을 민족으로, ethnic을 종족 또는 소수집단으로 번역하였다.

2) 이밖에도 핀란드, 벨기에, 스위스, 구공산권, 제3세계 일부 국가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3) 구체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원주민이나 캐나다의 퀘벡주 프랑스인, 점령에 의해 통합된 집단 등이 포함된다.

있는 권리를 추구하지만, 일정한 영토와 내적인 응집력, 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민족(국가)적 소수자와 달리 다종족국가(polyethnic state)에서 종족집단의 관심은 주류 사회의 통합 하에서 느슨하게 집단화된 하위문화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실제 사회 구성을 보면, 특정 국가 내에 원주민을 비롯한 토착적 소수자와 이주에 따라 형성된 종족집단이 모두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 특징적인 집단의 존재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대응양상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나 호주 등 전형적인 다민족국가에서는 국가 성립과정에서 민족(국가)적 소수자가 형성되면서 국가 형성을 위한 노력 중 상당 부분이 소수집단과 다수자 집단 간의 협상과 타협에 두어졌으며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다루기 위한 공공정책이 긴요한 국가적 관심사가 되어 왔다. 토착적 소수자 집단이 제기하는 다민족성(multinationality)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단일 민족, 단일 문화에 대한 신념을 재생산하는 기제 보다는 다양한 민족적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서의 성원권과 소속감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발달되었다. 토착적 소수자의 위치와 권리를 다루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정책적 개입의 가능성은 이민자의 다종족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에도 토대가 될 수 있었다. 1970년대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 이민자의 증가, 다양화 추세에 맞춰 ‘다문화주의’를 국가 공식 이념으로 채택하고 강력한 다문화주의(마르티니엘로 2002: 105-108)의 전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

이들 국가의 다문화주의는 역사와 국가발전에 있어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공식 국가문화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포괄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에서도 모든 소수자 집단의 문화가 제도적 차원에서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국가문화의 일부로 인정받는 토착적 소수자 집단과 달리 이주민 집단은 주류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만 공적인 교육, 경제, 정치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종족사회의 이주민 집단과 비교하면 다문화주의 정책 하에서 이주민 집단 역시 가족과 자발적 결사 차원에서 자신의 문화 생산권 및 세대간 재생산권을 인정받고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식적 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착적 소수자 집단의 요구와 더불어 이주민 집단 역시 자신들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천적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⁴⁾

이에 비해, 이주민에 의해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도전이 제기된 국가에서 ‘다문화’가 지니는 의미와 이를 둘러싼 실천의 움직임은 단일성에 대한 전제의 형성 자체가 힘들고 다양

4) 동화 정책의 폐기와 다문화주의 모델로의 전환에 있어 이주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고 공식 교육에서 인정하는 제2외국어를 비롯해 제한적이거나 공식문화의 구성에 있어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된 다민족국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민족사회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다양성의 인정 보다는 공적으로 인정되는 다양성의 범위에 놓여 있으며 소수자 간의 다양성 가운데 어떠한 부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비해, 다종족사회에서 ‘다문화’논의는 단일성에 대한 전제에 도전하여 다양성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수자 간의 다양성 보다는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문화적 단일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특수성을 일방적으로 고수하기 보다는 주류사회에 대한 통합을 상당 수준 추구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적 특수성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요구하게 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에 대해 동화 압력이 부과되는 가운데 차이에 대한 주류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배제가 지속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된 종족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둘러싼 다수자와 소수자 간 요구와 논란이 제기된다. 문화적 다양성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정부에서는 단일성에 대한 믿음 하에서 유지해왔던 주류 중심적인 동화 모델을 다소 유보하고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주류사회의 기본적 틀은 유지하면서 소수자의 적응 과정을 원활히 하여 결과적 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가족이나 자발적 결사 차원에서 제한적이거나 문화적 다양성도 인정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움직임 역시 ‘다문화주의’로 통칭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의 공식 언어, 역사, 문화를 재구성하는 수준까지 포괄하는 다민족국가의 다문화주의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2. 다문화사회의 전개단계와 문화의제의 형성

이상과 같이 각국에서는 문화적 소수자의 존재 양상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의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소수자 집단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이러한 관심과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단일성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사회일수록 소수자 집단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부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유럽 각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이주민의 증가 현실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손님 노동자’와 같은 일시적 체류자 내지 국가 주변부에 위치한 부수적 존재로 간주되어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국사회에서도 오랜 기간 화교집단이 존재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는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조선인(조선족)’으로 살던 한국계 중국인을 비롯해 한국계 외국인들이 대거 입국하였지만, 이들은 혈통과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한민족’으로 간주되어 세대를 거쳐 차이를 발전시켜온 이들의 현실은 간과되어왔다.

1) ‘새로운’ 이주민들의 주류문화에 대한 접근 · 통합 욕구

이주민의 존재와 함께 형성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주민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일시적 체류자 내지 부수적 존재로만 간주하기 힘든 새로운 성격의 이주민 집단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데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20C. 말 인간과 자원, 상품, 정보, 지식, 문화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는 초-국가적 세계에서는 이주와 함께 출신사회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나야 했던, 국가를 단위로 한 배타적 질서 속에서 움직이던 구시대의 이주민과는 다른 성격의 이주민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출신국가와도 일정 정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국가에서 장기적,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특정 국가에 배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국과 일본처럼 동질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유지해온 국가에서조차 귀화나 국제결혼의 증가, 해외동포의 귀환 등으로 특정 국가에 배타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채로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니면서 국내에 정주하는 이들이 가시화되면서 단일성과 공유의 핵심을 이루던 ‘국민’ 내부에서도 다양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이다(Castles and Davidson 2000: 156-159; 한영혜 2007: 374-375).

전 세계적인 이주의 네트워크에서 상당기간 주변화 내지 소외되어 있던 한국사회로서는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였다.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의 끈으로 묶여 차이를 인정받지 못하던 한국계 외국인과 달리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한 결혼이주자, 특히 중국과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외모에서부터 차이가 두드러졌을 뿐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존재들이었다. 일시적 체류자로 간주되던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한국사회에 장기적 내지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인과 가족, 친족, 이웃 등으로 전면적 관계를 맺게 될 ‘최초의 외국인’(김이선 외 2007:17; 김이선 2008: 25-27)을 발견한 한국사회는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믿음을 재구성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더해,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배우자 사이에서 탄생한 자녀들이 학교라는 공적인 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졌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계기를 제공한 외국인 이주민은 한국사회와 보다 본격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가야 하는 존재들로 주류사회로서나 이주민 자신들로서나 일정한 과정을 통해 주류사회에 통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주자들은 출신문화의 특수성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거나 유지하기 보다는 사회통합의 전제 조건이 되는 문화의 습득 또는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재문화화를 위한 노력은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소수민족 공동체 형성과 문화의제 전망

이처럼 주류사회와 전면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주민들이 주류사회로의 통합에 우선적 관심을 둔다고 해서 일방적 동화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들은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동화 압력을 가하는 주류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문화화의 한계를 겪는 자신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나아가 일방적 동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화적 배경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일례로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한국문화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며 자신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자신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재문화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한국인 가족들 역시 자신의 출신문화를 존중하고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추도록 요구하며, 가족원들과의 갈등을 불사하고서라도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와 전통문화를 가르치고자 하는 등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일정 정도 지켜내려는 면모도 보이고 있다(김이선 외 2006: 182-187).

주류사회에 대한 통합 요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출신문화의 존재와 의미는 주류사회와의 관계 보다는 이주민들 간의 관계가 우선시되고 이를 중심으로 집단이 형성되면서 관심의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주류사회와 가족관계 같은 전면적 관계 가지지 않은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같은 국가 출신자, 언어 사용자,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집중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종교나 전통문화 등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일상의 현실서 흩어져 있는 이주민들은 종교나 전통문화 행사, 출신국가와의 관계 등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주류문화와 구분된 문화적 요소는 집단적 상징으로서 공동체의 의미를 형성하고 공유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주민 공동체의 발전 양상과 성격, 이와 관련된 문화 다양성 의제에는 이주민의 사회, 경제적 위치와 이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도적 제약과 주류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배제가 강해질수록 특정 지역, 직업군에 집중되면서 외부로부터 구분된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류사회의 방식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동시에 외부와 구분된 공동체의 상징으로서, 차별과 배제에 대한 저항의 자원으로서 독특한 문화의 가치가 중시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화된다. 주류사회와 뚜렷이 구분되는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내적인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도 두드러진다.⁵⁾

5)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 조총련계의 민족학교를 중심으로 일본주류사회와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양식의 공연과 스포츠경기 등 민족 문화 계승 움직임(정병호 2002: 273-276)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물론 올드커머인 재일조선인은 자발적인 동기에서 이주한 이주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본사회에서의 경험이나 구조적 위치, 이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제기와 실천 등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자신들의 삶과 정체성에 있어서 이주민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 집단적 상징이 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구가 발전하는데, 합법적 이주민이 대부분인 공동체에서는 자신들의 공동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로부터의 전면적 인정과 지원 요구가 직접적으로 제기된다. 이에 비해, 제도적 틀을 벗어난 이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는 출신문화에 대한 지원 요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며 그 보다는 공동체성의 핵심인 종교관습이나 복장규정 등의 문화적 요소의 구현을 저해하는 제도적 차별이나 부정적 시각에 대한 대처 요구가 우선시 된다.

이주민 공동체가 이미 상당 수준 발전되어 있는 유럽 등에서는 이주민 공동체들의 출신 문화나 종교에 대한 지원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정부 정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재일한인 등 올드커머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인정 요구가 제기된 바 있으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를 다루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주민 공동체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계나 결혼이주자처럼 한국인과의 혈연관계나 혼인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고 있는 이주 정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순환원칙을 고수하는 한 외국인 이주자의 수가 증가하여도 문화적 특수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류사회로의 통합 요구가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제의 지형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주민 공동체 형성에 있어 한국사회를 예외로만 취급하는 것 역시 무리이다. 한국사회에서 영주권을 인정받는 유일한 외국인 집단으로서 화교 공동체의 존재는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 발달에 있어 한국사회 역시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순환원칙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실질적 정주자화되는 과정에서⁶⁾ 특정 국가 출신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이나 상점 등이 분포하면서 등 한국문화와 구분되는 특수한 문화가 지리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 이와 함께 주말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종교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또는 이주민으로서 한국사회에서 겪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결사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물론 미등록 체류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대부분의 결사체가 친목도모차원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지만, 일부 공동체⁸⁾는 자체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자국

6) 2006년 6월 현재 외국인 노동자 중 48.0%가 체류기간을 넘은 상태일 정도로(법무부 내부자료)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사회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다.

7) 가리봉 지역에는 한국계 중국인이, 광진구에는 몽고 출신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거주자의 45-60%¹⁾ 정도가 외국인인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서는 구역별로 중국 출신, 동남아 출신, 필리핀 출신, 러시아 출신 등 특정 국가 출신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관련 상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선화 2007: 58).

어로 된 소식지나 신문을 발간하고 회원에게 채류문제나 금전, 건강 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제공할 정도로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다문화사회교육원 2007). 정부의 발표대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면⁹⁾ 현재로서는 관심의 표면 아래 가려져 있는 이주민 공동체가 부상하면서 문화의제에 대한 논의 역시 국가별, 종교별 특수성을 둘러싸고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가족단위의 이주나 단신 이주자의 가족 결합이 본격화된다면 이주민들의 출신문화가 이주민 자신이나 사회 전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의미는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개인 단위의 이주가 진전된 상태에서도 상당기간 동안 가족 결합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유럽에서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일본에서는 1990년대 들어 가족단위 채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Castles and Davidson 2000; 한영혜 2007: 374) 출신문화에 대한 이주민 공동체의 관심은 주류사회의 인정과 지원, 차별에 대한 대처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에서 모어, 모문화 교육을 비롯한 출신문화의 세대간 재생산 문제로 확대된 바 있다.

주류사회가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신념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모어, 모문화 교육은 통합 실패의 결과이자 원인으로 받아들여져 공적으로 인정받기 힘들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어, 모문화 교육은 주류사회의 공식 제도와 구분된 이주민 공동체 중심의 대안적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¹⁰⁾. 그러나, 탈-국가적 이주가 상시화, 일반화된 세계에서 특정 국가나 민족문화에 배타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복합적 정체성을 지닌 이들의 객관적 존재를 부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족단위 이주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주류사회 내에서도 이주민들의 모어, 모문화 교육 요구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1990년대 들어 이주민 자녀에 대한 모어, 모문화 교육을 출신국가의 성원으로 재생산하는 ‘민족교육’으로 규정해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접근에서 탈피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후속세대의 학습발달과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다문화공생 교육’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학교 교육 내외부에서 이중언어, 이중문화 교육의 형태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한영혜 2007).

이러한 사례와 비교해보면, 가족단위 이주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가족이주가 제한적 차원에서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녀에 대한 모어, 모문화

8) 네팔 출신자들이 결성한 NCC, 필리핀인들이 결성한 AFC 등이 그 예이다.

9) 정부는 200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나 전문기술인력의 영주권 부여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숙련기능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너무 높은 자격기준 등의 문제로 9월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10) 1980년대까지 제일 조선인학교를 비롯한 ‘민족학교’가 그 대표적 예이다. 이 학교의 교육은 일본사회와의 관계 보다는 모국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었으며 모국 국민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이밖에 1972년 오사카시에서는 공립학교 내에 민족학급을 개설하기도 했으나, 이는 정규 과정이 아니라 과외수업의 형태로 시행된 것이다(한영혜 2007: 370-374).

교육 내지 이중언어, 이중문화 교육이 사회적 관심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다만 한국사회와 특수한 관계를 지닌 결혼이민자 자녀 집단의 정체성 차원에서 이중언어, 이중문화 교육에 대한 실험적 논의가 제기되는 수준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주민 자녀 일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여부는 가족단위 이주에 대한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달려 있다. 즉, 현재의 제도적 상황이 계속되는 한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나, 영주권 확대 추세와 더불어 가족단위 이주에 대해서도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주민 자녀 일반의 모어, 모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 출신문화의 세대간 재생산 문제가 정책의제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주류사회 수용성과 문화 주체간 소통의 의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주민의 가시화와 더불어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한 사회에서는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주체들 간의 관계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의제가 소수자 집단의 성격과 존재 양상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 전개된다. 주류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새로운 이주민이 등장하여 사회적 관심을 둘 만한 존재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다문화사회 초기 단계에서는 주류사회와 특정한 관계를 지닌 이주민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문화적 적응과 주류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이주민들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단일성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재생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만큼, 주류사회로서도 큰 논란을 거치지 않고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가 비교적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요구는 단순히 주류사회로의 통합에 제한되지 않으며 주류사회로의 통합과 동시에 재문화화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에 대한 주류사회의 개방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주민 공동체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하면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집단적 차원의 문화적 특수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초점이 두어진다. 이러한 단계에 접어들면 다문화사회의 문화 의제는 이주민 공동체의 구조적 위치와 주류사회의 수용성, 집단간 관계의 양상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다문화사회가 발달되어 이주민 공동체가 공고해지고 집단 차원의 문화 재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주류사회의 수용성과 다문화사회 주체간 관계의 양상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류사회에서 이주민을 향한 구조적 차별과 배제가 완화되지 않은 채 문화적 다양성 인정에 대한 이주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면 주류사회와 구분된 이주민 공동체가 내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집단성을 강화하게 되고 문화적 다양성을 둘러싼 집단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반면, 다양성에 대해 개방적인 수용성이 확산된다면

다문화사회 주체들 간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서 문화 다양성, 특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성과 이에 기초한 주체들 사이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역동성을 둘러싼 핵심적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오랜 기간 비-이민 전통을 유지하면서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신념을 발전시켜온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해 한국사회는 다분히 이중적인 태도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특정한 집단의 이주민 개개인의 주류사회로의 통합을 넘어서 이주민 공동체의 부상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질서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부정적 태도가 본격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김이선 외 2007), 다문화사회로의 전개 과정 속에서 주류사회의 수용성과 차이를 둘러싼 주체들 사이의 소통이 무엇보다 우선적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계획 및 법률에 나타난 문화정책의 성격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의 대면 과정에서 부상하는 문화의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포괄범위와 접근 방법, 정책자원의 투입의 우선순위,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은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관주도형 다문화주의’(김희정 2007)라고 까지 지적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는 정부 정책이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 간 관계의 틀을 구성하고 문화적 역동성을 구현하는데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주의 허용/제한, 체류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 부여 역시 주류사회와 이주민의 관계, 이주민 공동체의 발달 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광범위하게 보면 문화 의제에 관련된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역동성이 구현되는 일반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직접적으로 문화의제를 다루는 정책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여기에서는 소수자와 주류사회 간 이해와 소통, 소수자의 문화 적응, 소수자의 문화권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면서 문화적 차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협의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서 문화정책

다문화사회의 전개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의제가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일련의 정책계획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이 출발할 당시

부터이다. 2006년 4·5월 들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교육지원대책’,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 외국인 일반 또는 특정 집단의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주민의 문화 적응, 이주민에 대한 일반 시민의 태도 등의 문제가 통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련의 정책계획에서 이주민의 존재와 관련된 문화 의제는 이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 요인 내지 일종의 수단으로 위치 지워졌을 뿐, 다문화사회의 전개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정책목표로서의 의미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물론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듯 ‘열린사회’ 내지 ‘문화적 용해의 장’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점검과 주요 정책과제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어 장식적 수사를 넘어서는 정책목표로서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 의제가 사회통합에 부수되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문화적 다양성을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 특정 집단의 적응 내지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에서는 “중국 동포 이외에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보고,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서는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즉 결혼이민자의 거주와 취업 관련 제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 및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 부족 및 한국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습부진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 정서장애도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식으로 문화적 차이를 부적응, 장애 등의 직접적 원인으로 귀착시키고 있다.

이처럼 각종 정책계획에서는 이주민의 존재와 함께 가시화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주민 자신에게 상당한 부적응을 불러일으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주민에게는 재-문화화의 부담을 야기하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안정적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인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교사나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는 등 ‘이주민으로 인해 생긴 다양성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이주민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표〉 관련 정책계획에 나타난 문화정책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발표시기	2006. 4.	2006. 5.	2006. 5
관련부처	14개 부처 및 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외국인정책위원회
비전과 목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 차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화 민주적 통합(Cultural Democratic Integration)으 로 한국을 문화적 용해의 장 (Cultural Melting Pot)으로 전환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 -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 - 우수 외국인력 유치 지원
이주민의 문화 부적응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 한국문화교육 실시 · EBS 교육방송 실시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읍면동 단위로 한글교육 실시 · 국가별 교재개발, 양국어사전 발간, 미디어자료 제작 - (학교의 다문화교육기능 강화 중)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지도, 교과지도, 문화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KSL)지도, 교과지도, 문화체험 교육 실시 - 교사대상 한국어(KSL) 및 한국문화교육 연수 활성화 - 한국어(KSL) 교육 능력을 가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보호 및 정착지원 중) 한국어 교육 강화 및 법률 · 생활정보 책자 제공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의 교육 강화 · 권리보호 관련 절차와 생활 관련 정보를 담은 책자 제작, 배포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 교과서의 인종차별적 교육요소 발굴하여 수정 ·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요소 반영 · 사회복지, 가족복지학과에 다문화관련 내용 포함 - 학교의 다문화교육 기능 강화 중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를 위한 교원연수 강화 - 집단따돌림 예방 · 학교축제 등 집단따돌림 예방행사 개최 · 학생, 교사, 외국인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 교사, 급우, 대학생과의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국민의 다문화주의의식 제고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 현행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적, 문화적 배타성 완화 · 차기 교과과정 개정시 다문화 · 다인종 교육요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포용, 사회통합 -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환경 조성 - 외국인의 자녀(혼혈인 포함)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과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실시 -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 외국인의 날 지정 선포, 외국인 전용사이트 개설, 저소득 외국인 위한 바자회, 자원봉사단체운영, 다문화사회교육, 외국인 인권관련 법제정비 추진, 대학에 이민학강좌 확대 개설, 무료법률구조확대추진, 사회통합을 위해 “1외국인 1국민 형제자매 갖기” 운동 전개

일련의 정책계획에서 다문화사회의 전개 속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민의 부적응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주민을 향한 사회적 편견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가 교육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집단 따돌림 또는 차별적 경험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이로 인해 자녀의 건전한 성장이 저해되는 바가 주요한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순혈주의에 입각한 배타적, 차별적 의식으로 인해 인종차별 문제가 확대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외국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이로 인해 인권 침해 상황이 전개되고 국가 이미지도 추락 시킬 우려도 있다”(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는 점도 한국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류사회의 수용성은 다문화사회 전개의 전개 양상을 가늠할 핵심적인 요소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요 정책계획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순혈주의’라는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모호하고 피상적인 개념을 언급하고 있을 뿐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이주민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며 변화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분석 자체가 피상적인 상황에서 주류사회의 수용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외국인의 날 지정, 축제를 비롯한 행사, 멘토링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다분히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방안만으로 시민적 차원의 수용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 개선, 교사 교육 등도 문제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과 합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일정한 방향성을 향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¹¹⁾ 결국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 각종 정책계획에서는 이주민을 향한 사회적 편견 문제를 다루면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로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적합한 주류사회 수용성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회통합의 틀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서의 성격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사회통합정책 차원에서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가시화되고 있는 다양성은 다분히 부정적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주민은 단일성을 전제로 한 사회 구성에 다양성을 야기한 존재, 단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이나 지원의 대상으로서 설정되고 있다. 또한 현실의 변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한국사회 전반을 재구성하기 위한 정책은 사회통합의 부수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의미의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11) 실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축제나 멘토링, 교육과정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현장에 맡겨져 있다. 이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은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운 목표를 지닌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사회통합정책은 임의 계획 수준을 넘어 법적 근거를 갖는 정책으로서 제도적 위상을 공고히 했지만,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들을 위한 한국어와 대한민국의 제도와 문화 등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양과 지식 교육, 다언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가능한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0조, 11조; 다문화가족지원법 6조, 10조, 11조). 또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 제도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다문화가족지원법 5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8조)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계의 날 주간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임무를 정부와 지자체에 부과하였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조).

이밖에 2006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제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도 속속들이 제정되고 있는데, 2008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32개 기초 지자체 중에는 총 146개 지자체에서 거주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차원에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과 문화·체육 행사 등을 주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울 것을 지자체의 책무로 적시하는 등 지자체 조례 역시 이주민의 증가와 문화 다양성의 가시화에 따른 사회통합에 있어 이주민의 부적응이나 사회적 편견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 요소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일련의 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이주민을 둘러싼 정부 정책의 위상은 한층 공고해졌다. 그러나, 기존의 접근은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가시화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규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정책적 패러다임에서 이주민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를 야기한 존재이자 부정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설정될 뿐이다.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되는 다양성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인가 조차 불분명할 정도이다. 이처럼 기본적 지향과 목표가 혼란스러운 정책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로 구성된 사회 자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일관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정책은 사회통합을 지향하면서도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으로서 성격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주민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 각종 교육을, 일반시민과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축제 참여 등을 통한 의식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한국어 교육을 위시한 이주민 지원에 비해 일반시민의 의식 개선이라는 과제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채 부수적인 차원으로 주변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계획과 법에서 공통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적응 지원과 일반 시민의 의식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간에 연계성이 뚜렷하지 않아 서로 소통하면서 다양성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사회 주체로서가 아니라, 각각 별도의 문제를 지닌 이주민과 한국인이라는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해낼 뿐이다. 일련의 정책계획과 법, 조례는 이주민과 한국인이라는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두 방향의 목표를 설정한 수준으로 통합적인 정책목표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구분하고 결혼이민자 내에서 또 다시 중국 동포와 베트남, 필리핀 출신자를 구분하는 식으로 한국사회와의 관계성과 문화적 단일성/다양성을 기준으로 이주민 역시 구분하면서 정책 대상에 포괄-배제하는 파편적인 접근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존의 정책이 다문화사회의 전개 양상과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총체적 전망에 기초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상식적 차원에서 문제로 지적된 몇몇 현상에 대한 대중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정책목표나 수단이 전반적 의제와의 연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에서는 단일성을 전제로 한 기존의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대안적 비전으로는 기존의 사회질서와 전혀 다른, 많은 부분에서 대조적인 정책 기조, 전혀 다른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발전되어 이미 폐기된 정책 패러다임인 ‘문화적 용해의 장(Cultural Melting Pot)’을 제시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서 ‘동일국가 출신 결혼이민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응과 관련한 상호 조언과 원활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명시한 것 역시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징적 게토화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 공동체의 형성 가능성과 의미, 사회통합에 있어서 공동체가 지니는 기능적 가능성과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 완화를 위한 자조모임’이라는 다소 임의적이고 단편적인 전제에 입각한 것으로 파편적이고 공허한 정책 대응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 문화다양성 중심의 정책 형성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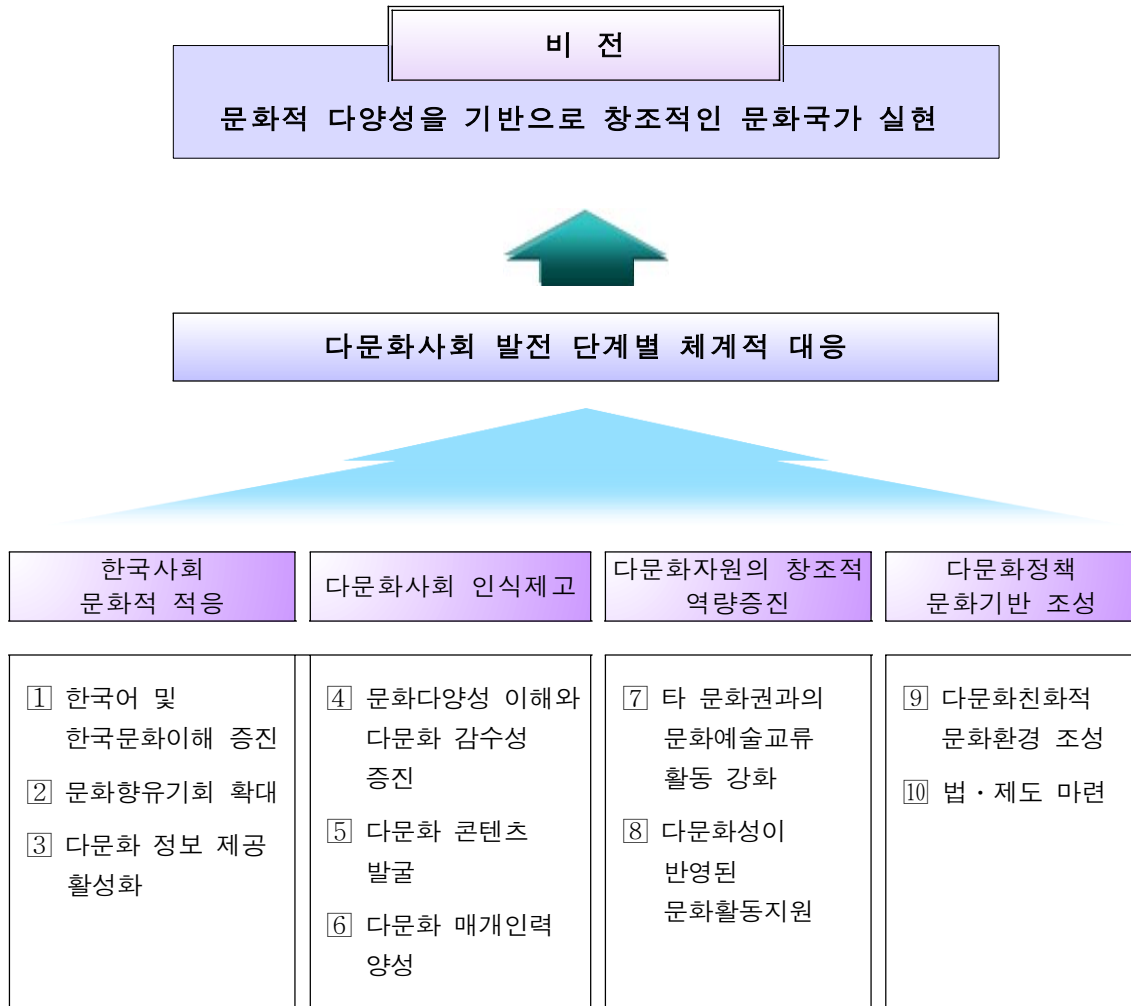
이처럼 결혼이민자를 위시한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단지 주변적 의제 내지 정책 수단으로 위치지우며 형식적으로 다룰 뿐 아니라, 다양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결정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문화관광체육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움직임은 기본적 접근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2008년 5월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안 공청회, 7월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정책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이하 문화지원법률안)’과 정책계획 성격의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정책방향과 과제(이하 문화지원정책과제)’에 따르면,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가시화된 문화 다양성 자체를 다문화사회의 기본 요소로 인정하고 기존의 질서를 전제로 한 사회 질서의 회복 대신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창조적 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창조적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소수자의 문화권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견지에서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를 상호 교류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며, 사회구성원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문화향유와 문화창조를 지원’(제1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천명하였다.

사회 비전과 기본 이념의 전환 속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간주되던 문화적 다양성은 사회구성원의 일반적 의무와 권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신이 갖는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4조 3항)”는 원칙 하에 문화창조와 향유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갖을 수 있는 권한과 다른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할 의무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각자의 고유문화를 표현·향유·교류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였다(11조). 이상과 같은 원칙과 목적 하에 문화지원법률안과 문화지원정책과제에서는 이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이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다문화성이 반영된 문화활동 등 지원), 다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의 접촉 확대, 문화다양성 이해·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림〉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정책방향과 과제’의 주요내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 정책방향과 과제(2008.7)

문화 다양성을 기초로 한 법률안이나 정책계획에서 이주민은 더 이상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적 집단이 아니라 문화 향유와 창조, 교류의 권한을 지닌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 위치 지워지게 되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집중하던 기존의 정책과 달리 문화활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이고 다문화 콘텐츠 발굴, 다문화 마을 사업 등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는 것 역시 기존의 정책계획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추진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법률안이나 정책계획에서는 정책 지원대상자의 범위, 정책에서 보장하는 다양성의 범위에 대한 적극적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편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순환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적 틀 속에서 미등록 체류자가 상당수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민의 존재 양상이나 문화의제에 대한

이주민이나 사회 일반의 관심도가 지원 대상이 되는 이주자나 다양성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만큼 발전되지 못한 점에서도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법률안과 정책과제에서는 ‘국가별·지역별 소수민족 커뮤니티 문화활동 지원’,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새터민의 자발적 문화예술모임 및 문화활동 지원’과 같이 문화적 고유성을 기초로 형성되는 민족공동체를 전제로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외국인 이주를 둘러싼 현재의 제도적 환경 속에서는 고유문화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형성 자체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형성된 결사체들은 문화의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오경석 2007: 6) 적극적인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제로 하고 있는 문화의 단위와 다양한 문화요소간의 상호작용 방식 하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기초로 한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창조적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법률안과 정책계획에서는 ‘타국가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다양성을 고취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주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별’ ‘고유문화’라는 집단적 차원의 고정된 문화를 설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컨텐츠를 발굴하는 것을 ‘다문화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의 변이와 논쟁가능성, 변화가능성 등 역동적 측면을 간과한 채 정형화된 몇몇 문화적 요소만을 집중 발굴, 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기계론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한계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그 위에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자유롭게 발현하고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위 ‘다문화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실 정책은 소수자 집단, 보다 정확히는 출신국가별 집단 차원의 전통문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정책 수단은 몇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문화적 차이의 단위로서 민족 집단을 공고히 하는 접근으로는 공인된 몇몇 요소를 반복적으로 강조할 뿐, 다양성 자체는 간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를 출신국가별 집단과 동일시하고 집단 내부적으로는 다양성이나 이견 없는 완성된 결과물로 접근함으로써 결국 소수자 집단 내 지배층의 이해에 적합한 요소를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로 전환시키는 한편,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계층별, 세대별, 종교별, 성별 갈등과 역동성은 오히려 사장시켜 권력의 위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Okin(1998)과 Shachar(2001)의 지적 역시 집단 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에서 주목하는 문화란 결국 출신국가별 몇몇 전통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어 집단 내적인 변이와 이견, 집단 내·외부적 관계에 따른 문화의 역동성과 변화가능성을 무시한 채 문화를 토근화, 물상화, 화석화함으로써(Phillips 2007) 현실을 살아가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를 기초로 다문화사회에 걸맞는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발달은 오히려 저해하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우려도 크다. 더욱이 공동체와 몇몇 문화적 요소를 동일시하는 접근은 본질주의적 해석을 확산시켜 문화적 차이를 절대시하면서 인종이나 민족 대신 문화, 유산, 전통, 차이를 중심으로 한 배제 담론을 유포하는 소위 ‘인종 없는 인종차별주의’, ‘차이 중심적 인종차별주의’(Stolcke 1995:4)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문화사회의 문화의제를 단지 각국의 정적인 고유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수준으로 다루어 가는 것은 이처럼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오히려 그 보다는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문화의 역동성을 증진하는 소통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문화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형성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함께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역동적 과정의 일환으로 문화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책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다문화사회 구성원을 포괄하여 창조적인 공동체를 구현할 것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지원법률안이나 지원정책과제에서도 여전히 이주민과 국민은 서로 구분된 대상으로서 각각 한국어 교육과 문화활동 지원의 대상, 다문화교육이나 문화적 다양성 이해 교육 내지 홍보의 대상으로 설정될 뿐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현재의 문제를 고민하고 소통하고 대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은 아직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한국사회는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세계적 이민국가와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켜 왔지만 이미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와 가족단위 이주가 일반화된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상당한 특수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비교해 현재 한국사회는 한국인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이주민’의 발견으로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그간의 믿음에 대해 질문을 제기해야 하는 초기 단계로서 주류문화에 대한 이주민의 적응과 통합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이주민과 다양성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성을 재구성하고 다문화사회 주체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회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장기적 작업을 출발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6년 일련의 정책계획을 통해 출발한 사회통합정책은 형식적으로는 이

주민의 한국문화 적응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는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정책을 포괄하는 듯 보이나, 기본적으로 단일성에 기초한 기존의 사회질서를 고수한 채 이주민의 등장과 함께 가시화된 다양성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적응과 혼란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안정적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정책대응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다분히 형식적이고 지극히 부수적인 차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로 구성된 사회는 긍정적인가,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이주민은 긍정적인 존재인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조차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공허하고 무능력한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와 관련해 최근 들어 이주민의 존재를 계기로 문화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목표와 의제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문화다양성 중심의 정책 수립 움직임 속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간주되던 다양성은 창조적인 사회를 향한 기반으로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이주민 역시 더 이상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 집단이 아니라 문화 향유와 창조, 교류의 권한을 지닌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 위치 지워지게 되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집중하던 기존의 정책과 달리 문화 활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이고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구를 시도하는 것 역시 기존의 정책계획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그러나, 문화 다양성 정책을 향한 움직임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출신국가별 집단을 문화의 주체로 상정하고 집단적 차원의 문화 활동과 교류를 토대로 문화적 다양성이 일반적 가치로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문화주체들의 소통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역동성이 긍정적 방향으로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현재의 이주제도 하에서는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 자체가 제한될 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문화의제에 대한 관심도 낮은 상황이어서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차원 이상의 정책적 위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의 지원대상이 되는 문화주체를 흔히 소수민족 내지 종족 공동체(ethnic community)로 불리는 국가별, 종교별 공동체로 설정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문화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실 정책인 이주민 집단의 출신국가별 고유문화, 전통문화 활동이나 교류행사 지원 프로그램은 공적으로 인정되는 몇몇 요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는 촉진하는 반면, 공적 인정의 대상되지 못하는 다양한 요소와 문화에 대한 집단 내의 이견과 경합은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국가별 집단과 문화를 기계적으로 동일시하는 접근으로는 문화 다양성을 기초로 다문화사회의 역동성이 발현되기 보다는 오히려 정형화, 화석화된 몇몇 요소로 대표되는 출신국가별 집단들로 구성된 정적인 사회질서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우려도 크다. 더욱이,

본질주의적 해석과 연결되어 문화적 차이 자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배제 담론을 확산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화의 주체가 개인인가 집단인가 하는 것은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근본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¹²⁾.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개인의 실천을 통해 재생산되지 않는 집단 차원의 문화는 생명력 없는 화석에 불과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며 일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과의 소통과 공감에 없는 개인의 행동과 태도 역시 파편화된 습관에 불과하다. 결국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개인과 집단 중 지배적 단위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것 보다는 환경 변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인적 경험과 집단적 역학의 관계성을 정립하고 이를 발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실천 지향적 문화 개념에 토대를 둔 비판적 다문화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화적 차이 자체를 낭만화하고 절대화하는 ‘백과사전식 다문화주의(encyclopedic multiculturalism)’와 달리,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본질적으로 경계지어진 개인이나 집단 대신 서로 침투하고 변화 가능한 주체들 간의 소통과 교류, 이를 통한 새로운 공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를 지향한다(Turner 1993; 한건수 2008: 161-164).

다문화사회의 역동성 구현에 적합한 정책은 다양성에 대해 몇몇 요소를 선정하고 이미 정해진 정답을 실행하기 보다는 ‘복잡한 문화적 대화’(Benhabib 2002; 103; Phillips 2007:28 재인용)의 과정을 촉진하는, 집단 간 대화와 함께 집단-개인 간 역동성, 개인적 차원의 소통을 지향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사회 일반적으로도 공동체 차원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집단적 차원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정책 요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집단-개인 간 역동성과 개인적 차원의 소통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의 질서에 적합한 문화적 역동성의 기초를 쌓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흔히 집단으로 규정되는 단위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과 변이가 보장되는 사회 환경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신국가나 민족 이외에 성별, 계층, 지역 등의 요소에 따른 다양성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관련 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이외에 다양성 인지·소통 능력을 토대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주위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민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이주민/일반시민, 국적별 집단 등 문화와 집단을 내부적으로 완전히 통합되

12) 소수민족집단을 문화의 주체로 상정하는 대표적 학자는 Kymlicka(1995)로 인간행동의 전 영역에서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양식을 제공해주는 ‘사회적 문화(societal culture)’를 제시하며 다문화주의의 고려 대상으로 공통의 언어와 영토에 근거한 소수민족, 소수문화집단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가 지닌 집단주의적 전제는 자유주의 계열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일례로 Phillips(2007)는 문화적 권리가 집단의 권리라기 보다는 개인의 권리임을 강조하고 집단주의적 문화 개념에 기초해 집단에 권한을 배부하는 식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비판한다.

고 외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고정된 실체로 규정하고 다차원적이고 유연한 정체성을 부인하는 ‘당구공 모델(the billiard-ball conception of culture)’(Tully 1995:10; Phillips 2007:21 재인용)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육이나 일부 학교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소위 ‘다문화교육’은 이주민과 일반시민을 구분하고 한국문화, 베트남문화 등 서로 구분된 단위로서 각국 문화를 전제로 하여 문화별 특수성에 대한 단편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한경구 2008: 125)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다소 넓힐 수는 있지만 문화에 대한 매우 고정적이고 정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는 계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집단간 이해와 교류를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멘토링이나 다문화 축제 역시 철저하게 이주민/ 일반시민간 구분, 출신국가별 집단 구분에 입각한 당구장모델을 실현하는 기제일 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출신국가나 민족정체성 등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문화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신들 사이의 다양성과 공유의 요소를 직접 경험하면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를 찾는 한편, 다양성을 둘러싼 현실의 과제를 발견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정책 지원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미. 2008.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쟁점과 정책방향.”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포럼(2008. 2.27) 자료. pp. 1-14.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오경석 외. pp. 57-79.
-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아카데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안 공청회 자료집.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다문화사회교육원. 2007.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조사 연구. 다문화지도제작. 문화관광부.
-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pp. 21-56.
-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동녘.
- 한건수. 2008. “비판적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을 위한 인류학적 성찰”. 유네스코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pp. 135-165
- 한경구. 2008.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pp. 86-134
- 한영혜. 2007. “일본의 글로벌화와 공교육의 변화: ‘다문화공생교육’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76집: 365-398.
- 행정자치부. 2007.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 Castles, Stephen and Davidson, Alastair. 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Routledge.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Clarendon Pr.
- Okin, Susan M. 1998. “Feminism and Multiculturalism: Some Tensions”. *Ethics* 108(4): 661-684.
- Phillips, Anne. 2007. *Multiculturalism without Cultur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char, Ayelet. 2001. *Multicultural Jurisdictions: Cultural Differences and Women's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 Pr.
- Turner, Terence. 1993. "Anthropology and Multiculturalism: What is Anthropology that Multiculturalists should be Mindful of It?". *Cultural Anthropology* 8(4): 411-429.

주제 2

다문화사회에서의 학교 교육

오 은 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목 차

- I. 서 론
- II.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 III.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
- IV.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 V.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VI. 결론

I. 서론

최근 외국인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며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켜 왔던 우리 사회와 학교가 다문화 교육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부족, 농어촌의 국제결혼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2006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910,149명으로 인구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 1.88%에 이르며, 이와 같은 현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가 하면, 2006년 국제결혼은 39,690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말 현재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93,786명으로, 이전 해에 비해 25%의 증가를 보였다(법무부, 2007).

특히,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수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수는 각각 1,209명과 13,445명에 달하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해가 거듭 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학령기인 19세까지의 새터민 입국현황도 2007년 5월 기준으로 156명에 이른다.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가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더불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그들 가정의 자녀 교육이다. 대다수의 다문화 가정 학생은 한국 교육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근로자 자녀 10명 중 3명이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이라서(46.7%)’, ‘특별한 이유 없이(40.4%)’,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33.3%)’ 등이다(김정원, 2006: 99).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연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국어, 사회, 역사 과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수학, 과학 등은 비교적 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 교우관계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미숙, 2005; 김정원, 2006; 김정원 외, 2005; 배은주, 2006; 오성배, 2005, 2006; 조영달 외, 2006). 이 점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새터민 학생도 비슷하다. 그들 역시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생활 문화가 매우 낯설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적응 양상에서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특정한 경향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출신국가, 한국 체류 기간, 부모의 한국어 능력, 한국사회로 온 나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들은 일정한 규칙성을 보여주지는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적응 양상은 사실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일반 학생과는 다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적응 양상을 고려하여 교과 프로그램은 물론, 이들만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적응 양상에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나

지 않는 것이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특성들을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적시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오은순 외, 2007).

다문화 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 유럽에서 다문화 교육이 시작된 이래 각국의 다문화 유입 양상에 따라 많은 시행착오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초기에는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나 건전성, 그리고 교육체제 내에서의 관리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하지 못했다. 충분한 계획과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여러 과정과 프로그램들을 입안하여 선택 과정으로 제공한 것이다. 당시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소수 집단이 자신의 전통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나 문화에 흡수되거나 혼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소위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 주의 혹은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 점차 학자들의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실천가들의 노력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 소수집단을 우선으로 하되 소수집단과 일반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교과 및 범교과 혹은 간학문적 교육과정적 접근 등이 강조되는 현대의 다문화 교육에 이르렀다(Banks & Banks, 2004, 2007; Bennett, 2007; Coelho, 1998; Salili & Hoosain, 2001).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 의한 지원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2006년 5월 1일) 이후 시도 및 지역청수준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적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연구학교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앞서 설명한 외국의 다문화 교육 초기와 다를 바 없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고려가 부족한 채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서둘러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국가 수준의 다문화 교육 센터를 지정·운영하는가 하면, 다문화 관련 연구기관들이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원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연구들에서 다양성 존중의 관점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견지하면서, 교과별로 다문화 교육 관련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문화 교육을 국가·사회적 요구로 인식하여 교육과정 총론, 재량활동 등에서 다문화 교육 방침을 제시하였다. 교과별로는 도덕과와 사회과 등의 교육과정 해설에 다문화 내용 요소와 교수상의 유의점을 상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본원은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 수업에서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I)’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적응을 우선으로 하는 동화주의와,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원주의, 이 두 관점 모두를 지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에는 미래 다

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한국 문화를 창조해 가야함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일반 교과와 범교과를 포함하는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학교생활 적응과 언어 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이를 협력하여 지원하는 추진체제에 기대하는 역할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기초연구로서의 지난 해 연구는 다문화 교육의 교과 및 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각각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도출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해의 1단계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고, 관련 이론 및 국내외 프로그램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하며, 국내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실태와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교과 교수·학습 프로토타입(prototyp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적 접근, 특히 범교과 프로그램이 다문화 교육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는 관련 연구들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의 개발 방법과 절차, 재구성 및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범교과를 본보기로 하여 다른 교과에서는 물론, 다른 상황에서도 응용하여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범교과 프로토타입 프로그램과 활용 지침은 다문화 교육을 위한 모든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하나의 본보기일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현장이 이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어느 교과 혹은 어떠한 다문화 교육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교육적으로 적절히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 중,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중심의 다문화 교육이 지향해야할 방향과, 구체적으로 어떤 교수·학습의 실행이 가능한지를 간단히 보여주고자 한다.

Ⅱ.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1.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교육적 접근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일련의 교육적 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전략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오은순 외, 2007).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는 문화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바라본 베넷(Bennett, 1995: 13) 등의 주장을 근거

1) 프로그램(program)이란 사전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 계획이나 순서’ 혹은 ‘a series of actions or events that are planned to be done’로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교수·학습 실행 계획’을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로 한다. 즉, 그는 다문화 교육을 민주주의의 가치와 믿음에 기초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문화 세계와 상호 독립된 세계에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때 다문화 교육은 평등주의 운동, 다양한 교육과정 접근, 다문화주의 실현 과정, 편견과 차별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을 좀 더 실천적으로 정의한 술레만(Suleiman, 2004: 13-17)에 의하면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의 학문적, 사회적, 언어적 욕구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다학문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때,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배경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깊은 이해를 도모하게 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장인실(2006: 29)은 다문화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인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평등 관계를 중시하고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을 좀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했던 니에토는 다문화 교육을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Nieto, 2005: 401-404).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기본적 교육이며 종합적 학교개혁 과정이다. 다문화 교육은 학교에서 인종주의뿐만 아니라 차별의 다른 형태를 거부하고,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가 수용하는 다원주의(민족, 인종, 언어, 종교, 경제, 성 등)를 지지한다. 다문화 교육은 교사 간, 학생 간, 가족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과 교수전략에 반영된다. 다문화 교육은 철학에 기초한 비판적 교육학이며, 사회 변화의 기반으로 지식, 성찰(reflection),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한 민주주의 원리를 고양시킨다.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의 정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초기 다문화 교육의 관점은 배척주의(nativism), 동화주의(assimilation), 용광로주의(melting pot) 등 소수집단이 자신의 전통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나 문화에 흡수되거나 혼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다문화 주의(multiculturalism)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은 공존하는 문화 집단이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며, 사회 전체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것을 요구할 때 소수민족 집단이 순응하는 한, 자신의 문화적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인종주의와 불의를 지적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문화 주의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은 물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일반 학생들과 많은 시간 동안 생활하게 되는 학교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에 더하여 사회교육 또한 나머지 부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모든 교육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리리와 후세인(Salili & Hoosain, 2001: 9-10)은 다문화 교육 실현을 위한 전제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간단히 논의하였다. 첫째,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철학의 다양한 전제에 기반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교육은 소수집단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다. 셋째, 교수 방법은 간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 교육은 한 단위의 과정이나 교수방법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교육과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체제는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 교육의 전과정이 지배 중산층에게 유리하게 구성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수집단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며, 깊이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철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와 교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다문화 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을 강조했던 베넷(Bennett, 1995: 14)은 소수민족 학생이나 주류 학생 모두가 문화의 차이와 역사, 동시대의 인종 집단이나 국가의 공헌 등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적 접근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교육과정에 다인종적·범국가적 관점을 통합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 목표를 학생과 현직 교육자들을 위해 구분하여 설명한 술레만(Suleiman, 2004: 14-16)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상세화 하였다. 첫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개발, 둘째, 다양성을 인식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셋째, 자민족 중심주의에 의해 조장되는 부정적이며 통상적인 이미지의 근절, 넷째, 이해와 공감 을 통해서 차이를 메움, 다섯째, 다민족사회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개발, 여섯째, 민주주의 기능과 다원주의적 시민 가치의 개발, 일곱째, 민주주의 체제의 역동적 사회변화의 인식, 여덟째, 다문화 대상에 대한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 개발, 끝으로, 모든 사회에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인구 요인과 문화 요인에 대한 탐구이다.

위와 같은 제안들은 코엘료(Coelho, 1998: 54-270)가 제시한 다문화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방안들에 매우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코엘료는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적응을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학교 운영과 교실의 교수·학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교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inclusive school)과 다

문화 가정 자녀만의 적응을 위한 지원 서비스로서의 적응 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반인종주의 교육(antiracist approach to education)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 둘을 종합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다문화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체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뱅크스(Banks, 2004: 4-6)도 초기의 다문화 교육은 협의의 교육과정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지적하면서 다문화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야함을 역설하고 다문화 교육의 차원을 내용 통합(content integration), 공평한 교수법(equity pedagogy), 지식의 구성 과정(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 선입견 해소(prejudice reduction),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에 능력 부여하기(empowering school culture and social structure)의 다섯 가지로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차원이 실제적인 수업에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요소로서 그는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교육과정(curriculum), 교수 자료(teaching materials), 교수·학습방법(teaching and learning style), 교사와 행정가의 태도(attitudes)·인식(perceptions)·행위(behaviors), 학교목표(aims)·규준(norms)·문화(culture)가 그것이다.

이후, 그는 다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다문화 교육의 장이 되는 학교를 하나의 사회 체제로 설정하고, 좀 더 세분화된 다문화 교육의 실천 방향을 안내하였다. 한 학교 내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학교 정책 및 정치, 학교 문화와 잠재적 교육과정, 학습 양식, 학교의 언어와 방언,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 상담 프로그램, 평가와 시험 과정, 교수·학습 자료,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교과과정, 교수 양식과 전략, 교직원의 태도·인식·신념·행동 등의 11가지 요소에 변화가 일어날 때 다문화 교육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Banks, 2005: 24).

그는 전체적인 학교환경은 많은 변인과 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제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학교 문화, 학교 정책 및 정치,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교과과정 등의 요소들을 예로 들면서, 이 요인들 중 몇몇은 학교 개혁 초반에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으나, 결국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유지되려면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교 외의 지원과 교육이 학교교육에 앞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역시 교육정책 보다 앞서 입안되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를 수행한 조영달 외(2006b: 175-276)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행이 이미 정부 각 부처와 시·도 교육청, 사회의 민간단체들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학과 관련 연구기관들의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수 년 내에 이들을 위한 학교체제 외의 지원 환경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학교 체제 밖의 환경은 활발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학교 수업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학교 밖의 각종 지원과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중심이 되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해야함을 강하게 요구 받고 있다.

2.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체제

다문화 교육의 교수·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지원 체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업’ 대신 사용한 교수와 학습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수·학습 관련 요인을 규명하며, 관련 요인의 관계와 범주를 체계화하였다.

본래 교수·학습은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지만, 교육적으로 그 관계를 규명하기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교수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teaching과 instruction이 사용된다. 학자에 따라서는 instruction을 교수로 번역하여 수업과 구분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teaching을 교수로 번역하기도 한다. 영어권에서도 두 용어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교수설계 관련 서적들과 연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instruction’을 교수로 사용하면서 수업(teaching)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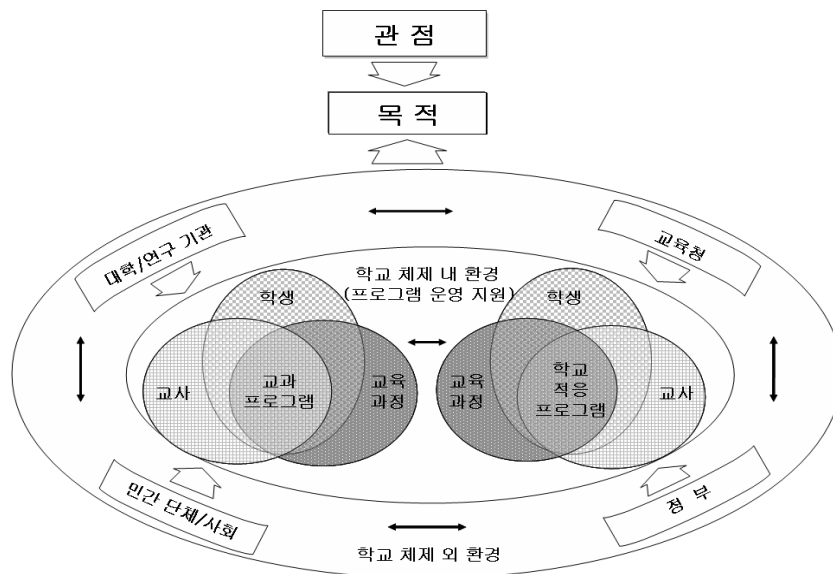
교수와 수업의 용어를 굳이 구분하자면 양자 모두 교육의 핵심 활동으로서 ‘가르치고 배우는’ 현상과 과정을 지칭하지만, 교수는 좀 더 넓고 일반적인 경우로, 수업은 보다 협의의 특수한 작업으로 논의할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교육학대백과사전, 1988: 87). 라이거루스(Reigeluth, 1983)도 교수를 수업에 비해 포괄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설계, 개발, 실행, 관리, 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변영계, 1999: 26, 재인용). 결국 교수(instruction)는 수업(teaching)의 설계, 개발, 실행, 관리, 평가를 포함하며, 수업은 교수의 일부분으로서, 설계, 개발, 실행, 관리, 평가 중, 주로 실행에 중점을 둔 개념이며, 그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볼 때, 교수의 개념에 수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업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의 나머지 부분인 설계, 개발, 관리, 평가 또한 수업에 반영되어 학습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 구조 속에서 학습을 재조명해보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효과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업자체 뿐만 아니라, 수업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전체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학자들은 그 밖의 외적 지원 요인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Frazee & Rudnitski, 1995: 11).

즉, 교수·학습은 매우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는 교수·학습을 구성하는 요인은 교육과정, 학생, 교사로 대별되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여 설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교육을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통합적인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프레이지와 러드니스키(Frazee

& Rudnitski, 1995)의 제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요인 속에 포함된 요소들과, 요인과 요인간의 관계 등은 매우 복잡하게 드러나 있지만, 이를 간명하게 재조명해 보면, 결국 교수·학습은 교육과정, 학생, 교사의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며, 각 요인의 나머지 요소들도 수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3가지 기본 요인 밖에는 학교 사회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 밖의 사회 환경이 있다.

이와 같은 프레임지와 러드니스키(1995)의 모형은 다양한 목적의 교육적 접근의 체계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교수·학습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를 위해 앞서 논급했던 연구들(조영달 외, 2006b: 11-77, Banks, J., 2004: 4-6; Banks, J., 2005: 24; Bennett, 1995: 342; Coelho, 1998: 54-270). 코엘료(1998), 뱅크스(Banks, J., 2005)의 제안을 프레임지와 러드니스키(1995)의 모형에 따라 [그림 II-1]과 같이 재구조화해 본다.



[그림 II-1] 다문화 교육의 교수·학습 지원 체제 개념적 모형

이와 같이 구조화된 위의 ‘다문화 교육의 교수·학습 지원 체제 개념적 모형’은 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 주고 있지는 않다. 즉, 모든 변인 각각은 전체 속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 교육의 교수·학습 지원 체제를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한 사회가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수·학습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설정한 후, 다문화 교육의 교수·학습을 실천적으로 설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두 가지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하나는 다문화 가정 학생 및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 프로그램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만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공교육 체제 내에서는 이 두

유형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하나의 학교 체제 내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 주체인 학교는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Ⅲ.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

1.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의 방향

사회 구성주의자 비고츠키(Vygotsky, 1978)에 따르면, 아동 개개인의 발달적 변화는 사회와 문화에 기초한다(오은순, 2002, 68). 즉, 아동은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1세 이전에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점차 자기 자신과 분리된 타인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학령기가 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특성과 정체성, 삶의 역사와 미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인지는 그들의 삶의 세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미래와 같은 추상적인 세계로까지 확장하여 발달하게 된다. 다문화 교육학자인 뱅크스(Banks, 1988)는 일찍이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의 차이를 포함하는 민족성 태도 발달을 설명하였다. 장영희(1997)는 뱅크스의 민족성 태도 발달을 근거로 하고, 인종 및 민족성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6단계의 문화 발달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첫째, 문화적·심리적 거부 단계: 자신의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믿음을 내면화하는 시기, 둘째, 문화적 고립기: 인종적 배타주의의 단계, 셋째, 문화적 정체감의 명료화 단계: 자신의 인종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넷째, 이중문화 단계: 둘 이상의 문화에서 요구하는 가치, 태도, 지식, 기술 습득, 다섯째, 다문화 단계: 다문화주의와 반영적 국가관의 형성 단계. 여섯째, 세계화의 단계: 긍정적인 세계적 동질성 습득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지속되면서 구성원들은 새로운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아가야 함을 제안하였다.

즉, 한 개인 내부에서의 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은 한 개인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면서 문화에 대한 태도도 다문화와 세계 문화, 나아가 미래 사회 문화로 넓혀 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귀우(1999)는 이러한 입장의 다문화 교육을 자유주의적 혹은 다원주의적 다문화 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²⁾. 이와는 달리, 비판적 다문

2) 이귀우(1999)는 다문화주의를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수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다원주의적 다문화주의, 본질적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주의로 구분하였다. 이 때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보수적·자유주의적·다원주

화 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는 문화에 대한 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다양성 이해와 존중을 길러주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고 믿는다(Banks, 2004, 240, 재인용).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평등과 정의의 관계를 억누르면서 억압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도모하여, 다문화적 상황에 바람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맥라렌(McLaren, 1993) 등의 비판적 다문화 주의 주창자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것만으로는 평등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가정한다(Banks, 2004, 240, 재인용). 따라서 비판적 다문화 주의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거나 격려해 주고 편견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인종주의와 불의를 지적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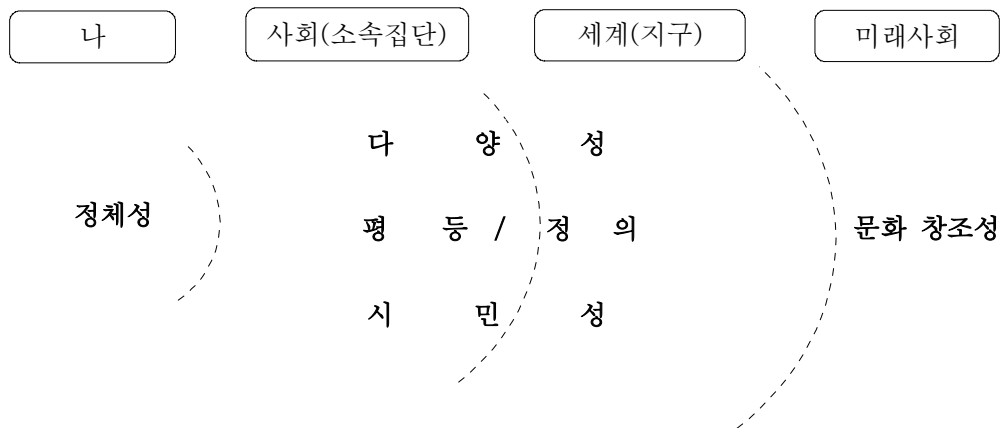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슬리터(Sleeter, 2008)는 한국의 다문화 교육 과정을 위한 그의 제안에서 다양성과 공평·정의의 세로축과 국내적 입장(Nation-Bound Perspective)과 국제적 입장(Global Perspective)의 가로 축을 격자로 하는 4개 영역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적 다양성과 국제(지구)적 다양성, 국내적 공평·정의와 국제적 공평·정의로 구분하여 각각의 교육과정이 가정하는 바와 교수전략, 그리고 관련 집단의 특성에 대한 담론을 펼쳤다.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동향을 살펴보면, 어느 한 관점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온전히 한 관점을 추구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다문화 교육을 위한 대개의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은 기울기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부분 이 둘의 관점을 절충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박선영(2005)은 문화적인 다양성, 공동체 의식, 정체성, 민주적인 시민의 자질과 능력,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 등을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가치 내지는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인 오은순 외(200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적응,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 문화적 편견 해소, 평등 사회 도모, 미래 사회를 위한 새문화 창조를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한 바 있다. 그 밖에, 조오(Zaw, 1996)는 차별, 부정의와 같은 사회악에 대한 대항을, 베넷(Bennett, 2007)은 문화 의식, 복합적인 역사적 관점, 간문화적 능력, 사회적 행동 기술, 인종·성 등의 편견과 차별 극복, 우주적·지구적으로 역동적인 상태에 대한 의식 등을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제안하였다. 아동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춰 목적을 제시한 램시(Ramsey, 2004, 10-12)는 좀 더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목적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정체성, 연대감, 사고력, 문제해결력, 학문적 기능 발달과 희망적인 미래 창조 등이 그것이다. 최근 뱅크스(Banks, 2008)도 다문화 사회 적응, 문화적·민족적·언어적 다양성, 소수민족집단의 고통과 차별 감소, 자문화 이해와 존중, 자신이 속한 크고 작은 문화 공동체(지역 문화, 국가적 시민 공동체)와 전지구적 공동체

의적·본질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다문화주의를 정의하기 위하여 유형화하려는 과정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설명하였다.

생활을 위한 기초 능력 등을 다문화 교육의 주요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가치(value) 혹은 궁극적 목적(goal)들은, 위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수준과 범위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가치들은 앞서 논의한 아동의 사회 인지 발달과 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 다문화 교육에 대한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 다문화 교육 관련 선행 연구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학생 자신의 정체성, 학생이 속한 크고 작은 사회에서의 다양성, 평등, 정의, 세계 시민성, 그리고 새로운 미래 사회를 위한 창조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교과 교수·학습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III-1)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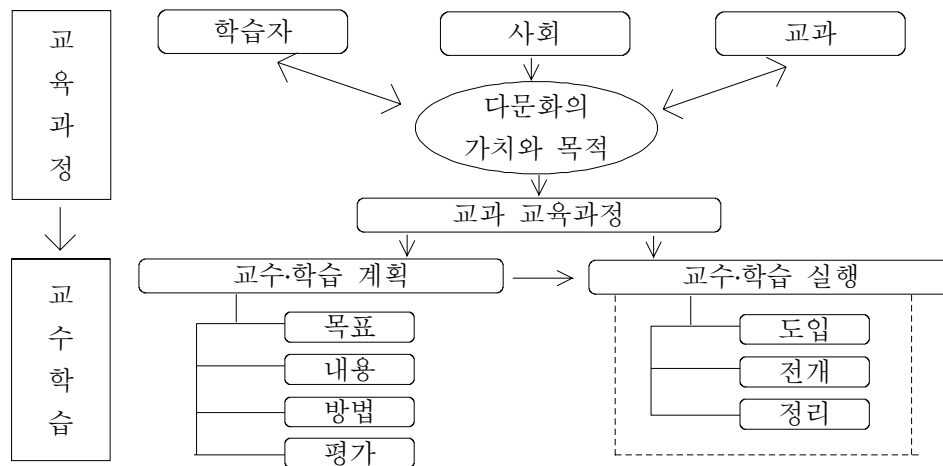
2. 교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교수·학습은 매우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결정되지만, 이를 단순화하면 교육과정, 학생, 교사의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제시한 교수·학습 지원 체제 모형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무엇을 강조하여 설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교수·학습은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수 있다(Frazee & Rudnitski, 1995). 이와 같이, 교수·학습은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교육과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가 예외일 수는 없다. 다문화 교수·학습을 설명하기 위해, 베넷(Bennett, 2007)은 교육과정 설계자인 포즈너(Posner)와 러드니츠키(Rudnitsky)를 근거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즉, 학습자, 사회, 교과에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 목적을 설정하게 되는 구조 속에서, 교육목적 설정 이전에 다문화 교육의 가치 혹은 목적이 결정되어 교육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교수·학습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구현된다고 보았다. 교육과정 이론가들의 관점을 반영한 베넷(Bennett, 2007)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는 미국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교육과정의 목적 내지는 기준(standards)이 국가 수준에서 개발되어 학교에 주어지고, 학교가 구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수·학습을 실행하는 체제를 매우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교육과정이 구체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개발되고 보급되어 개별 학교에서는 약간의 재구성 과정을 거쳐 거의 국가 교육과정을 그대로 교과서라는 그릇에 담아 교수·학습의 실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베넷(Bennett, 2007)의 구조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 및 운영 체제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이를 교실에서 구현하게 되는 교수·학습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수식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림 III-2)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 구조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다문화 담론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게 되었다. 즉,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국가·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교과별로는 다문화 교육 내용을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한국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한계점들도 심도 있게 고려하였다. 예컨대, 다문화적 감수성의 결여(장원순, 2006), 문화적 우위를 기준으로 한 편향된 내용 선정과 왜곡된 서술(이희수, 2007; 한건수, 2007), 유럽과 중국 중심의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시각(이영효, 2000; 정재훈, 2005), 한국사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민족 중심주의적 접근(문동석, 2003; 박철휘, 2007; 이준희, 2000) 등이 그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개정된 국가 교

육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을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나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범교과 학습에서 제시한 34개의 주제 중 하나가 다문화 교육이다. 교과 교육과정 중에는 국어, 도덕, 사회(역사포함),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 8개 교과의 개정 교육과정이 다문화 교육을 국가·사회적 요구로 반영하였다(조난심, 2007).

IV.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의 가치나 목적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설정되고 나면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이 교수·학습 계획의 근거가 되는데 학교 수준에서 교사는 국가 교육과정을 근거로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 선정과 조직, 방법 및 평가 방안을 계획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교수·학습의 계획 단계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교수·학습을 실행하게 된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 구조 속에 나타나 있듯이,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계획과 실행으로 구분되는데, 계획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체제로 이루어진다. 한편, 실행은 교사 혹은 내용에 따라 도입, 전개, 정리의 3 단계의 수업 과정 모형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띤다. 본 연구의 목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여기에서는 계획에 해당하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범주화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1.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학습

가. 목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목표는 연구자 혹은 이론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앞서 논의했던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다문화 주의적 관점에서 선행 연구와 관련 이론(김복영, 2008; 박선영, 2005; 박정문, 2006; 배의숙, 2006; 신영민, 2005; 오은순 외, 2007; 이민경, 2007; 이승미, 2007; 정선희, 1997; 조영달 외, 2006; 한영혜, 2007; APCEIU, 2006; Coelho, 1998; Iowa State, 1989; Ramsey, 2004; Schier, 2005)에서 제기된 목표들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교수·학습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단위 시간 혹은 단원 계획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V-1〉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목표

구분	지식	기능	태도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맥락에서 활동하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자신과 타인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확립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 태도 고양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문화에 대한 이해 다문화 사회 이해 다문화적 사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 제공 국가와 세계의 다양성 인식 문화적인 다양성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간 차이 인정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 인종, 민족, 성, 문화, 능력 집단 간의 효과적인 사회적 행위와 상호작용 기술 비판적 사고력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문화에 대한 관용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 흥미, 관심 다양한 문화의 가치 인식 및 수용 타문화 존중과 관용의 정신 함양 타문화에 대한 편견 불식
평등/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평화, 화합, 평등, 정의의 필요성 인식 다양한 맥락 속에서 불평등을 인식하는 방법 차별, 왜곡, 편견, 고정관념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간 갈등과 충돌 해결 방안 모색 불평등, 불의, 인종주의, 편견을 인지하는 능력 계발 일상생활 속의 편견적, 차별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 한 사회 내의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인권침해 방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존중, 대등한 관계 형성 문화적 편견 해소 평등 사회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윤리 타인의 권리 존중 일상생활 속의 편견적, 차별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바꿀 수 있는 관심 고양 평등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재확인 타문화 이해와 정의, 평등의 이념 교육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 원리 터득 집단 의식이 가치, 태도, 행동 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식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화 시대에 대비 시민성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능력과 상대주의적 태도의 발전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행동 민주적인 시민의 자질과 능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학문적 기능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 함양 타인과 타인의 문화에 대한 존중,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태도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능력과 상대주의적 태도의 발전 평화적으로 협력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 및 연대감
문화 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 할 수 있는 창의력 미래 사회를 위한 새문화 창조 희망적인 미래 창조 	

나. 내용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뱅크스(Banks, 2008)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문화, 언어, 종교 등 다양한 것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문화의 하위 요인 혹은 다른 형태를 열거했을 뿐, 결국 문화에 관한 것들이면 무엇이든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문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다(<http://krdic.naver.com/search.nhn?dic>). 한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 활동의 과정 또는 성과. 특히, 예술·도덕·종교·제도 따위 인간의 내면적·정신적 활동의 소산을 일컫는다.’ 라고 정의하기도 한다([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 subtype](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subtype)). 요약컨대,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의식주 문화는 물론,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 내면적·정신적인 가치 등이 될 수 있다.

〈IV-2〉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내용

연구	내용
김갑성(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라의 전통의상 및 인사 • 외국의 노래 • 전통의상, 주식, 특색품
김원호(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 • 음식
신영민(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민주적인 교육내용 •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강조 •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내용
오은순 외(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경험 • 자문화와 타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 다문화적 주제와 사건 다루기 및 문제해결 등
장영희(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적인 사건, 주제, 문제 • 문화·인종·성·민족·종교·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다양성 • 문화적으로 복합적인 사회에서 사회·정치·경제적 실체
장용석(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음식, 전통문화 • NGO, 환경, 국제 평화
조영달 외(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시민 교육 실시
APCEIU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 놀이 • 역사 • 풍습
Coelho(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행사로써 아프리카 전통의 달, 동남아시아 역사의 달
마츠모토(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 외국음식

다. 방법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만을 위해 고안된 교수·학습 방법은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문화가 다른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예컨대, 일반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이 더불어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교육이나 협동학습이 그것이다. 그 외에는 학생의 특성이나 수준, 특히 언어 수준을 고려한 각종 활동 중심 학습이나 놀이 학습 등이 있을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토론학습이나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한 학습 등이 저학년 학생들에 비해 좀 더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사들이 교수·학습 설계 단계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점은 어떤 교수·학습 매체 혹은 자료를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거나 혹은 개발하여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오은순 외, 2007). 이에 더하여 교실의 물리적·심리적 환경 역시 다문화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IV-3〉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

연구	방법
김갑성(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물건 전시회 • 외국인 교사가 자국 문화 소개
김원호(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축제 • 미국인학교와 교류(상호 수업참관, 체육 대회, 교환수업 등) • CCAP 통해 원어민과의 만남 • 국제이해교육 위해 휴일과 홈페이지 활용 • 국제이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반 운영
박선영(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듣고 경험하기→친밀감 가지기→편안함 갖기→연계성 느끼기→공감/감정 이입하기→인식과 행위 통합하기
박정문(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주변의 소재를 주위의 다른 문화와 비교 • 역할극 • 보다 많은 문화적 경험 제공 • 다양한 교과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내용 통합 • 외국인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교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 자원 활용 • 감각적이고 멀티미디어적인 자료 • 다문화 관련 교과 개발
손소연(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학부모 참여 위해 ‘근로자의 날’에 체육대회 개최
양영자(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주제로 하는 신문 스크랩 및 관련 글쓰기 등의 활동
오은순 외(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교육 • 방과 후 프로그램과 교과 교육 연계 • 도움 친구 활용 • 학부모 참여 교육 • 학교 행사 • 각종 활동(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캠프활동) • 지역 행사 참여 • 외국인과의 접촉과 교류 등

연구	방법
장영희(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 중심 • 포괄적·통합적 • 다른 색에 대한 긍정적인 연상과 의미 부여의 기회 제공 • 다양한 인종과 민족 집단으로부터의 긍정적 대리경험 기회 제공 • 다문화 도서의 활용 • 다른 인종의 얼굴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학습 기회 제공 •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동학습
정선희(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교실환경: 언어, 블록, 극놀이, 음악 및 게임, 요리 • 교사들의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 제공 • 다른 인종이나 민족, 나라에 대한 교사의 풍부한 지식 • 다문화 교육에 관한 교사의 확고한 신념 • 시각적·심미적인 환경구성, 책, 극놀이자료, 미술자료, 인형, 조작놀이자료 • 유아들의 선경험과 문화적 배경 파악 •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담지 않은 대화 방법 • 수용적이고 관대한 분위기
조영달 외(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학습
APCEIU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활용 교육 • 교육 연극
Coelho(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행사 마련
Goodman et. al(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수전략과 자료들 사용 •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력, 교과내용을 의미 있게 만드는 활동 • 자기주도적, 반성적 학습 •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 • 공정과 존중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Harris(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하기 • 자서전 쓰기
Nancy Hansen-Krening et.al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읽고 반응하기
Ramsey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속에서 다양한 인종 골라내기 • 다양한 인종의 사진, 인형 등 활용해 짝 지어보기 • 친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족 활동(예. 요리, 식사, 등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 보여주기 • 다른 언어로 된 노래나 이야기 들려주기 • 친숙하지 않은 음식 먹기 • 다양한 문화 집단을 나타내는 옷, 도구, 재료들 가지고 놀기 • 자신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친구들과 놀기 • 다양한 신체, 얼굴색, 눈동자 색, 머리카락색 등에 초점을 두어 활동 • 자기 가족만의 전통적인 일상 묘사해 보기
Shlievert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theme)’를 통해 수업(예) 가면 •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예술의 중요성 인식시킴 • 다양한 문화의 퀴트 • 예술을 활용한 사회적 쟁점 살펴보기

라. 평가

다문화 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내용이나 방법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관심을 끌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연구 실태는 아마

도 특별한 평가 내용이나 방법을 고안해 내기보다는 일반 평가에서 활용하는 내용이나 방법을 학생들의 상태에 따라 변용하는 수준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활발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굳이 다문화 교실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V-4〉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평가

연구	평가
김갑성(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문화를 반영한 물건으로 보상
박정문(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영역 평가 • 지구촌적인 시각과 타인지향적인 가치 인식, 지구촌의 문제를 공감하고 같이 해결해보고자 하는 자질과 능력을 평가
오은순 외(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치 인식 평가 • 실천도 평가 • 과정 중심 평가 • 개인 내 진전도 평가 • 절대평가 • 학생 특성을 고려한 평가 • 다문화 가정 학생의 자국 문화 요소 반영 • 모국어 활용 • 모국어 사전 사용 허용 • 학생의 언어 수준 고려
Banks(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필 평가와 표준화 검사 사용 지양
Coelho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 • 관찰, 협의, 학생 저널 등 교실 기반 평가 • 수행평가 • 포트폴리오 평가 • 쓰기 평가에서 모국어 사용 허가 • 평가 문항에서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 사용 • 시험에서 사전 사용 허용 • 학습 과정 평가 (예. 관찰 체크리스트 활용)

2.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관련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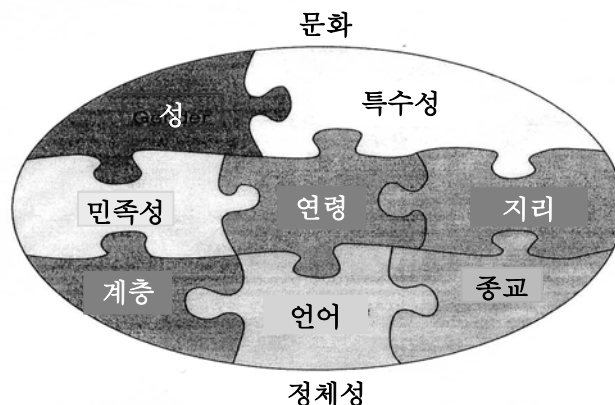
교육은 많은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결과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교육의 과정 혹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들 변인들을 고려하여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실천가들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학자들의 관심사이다. 다문화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다문화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수·학습에서 고려해야 할 변인들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다문화 교육을 오랜 동안 연구하고 체계화한 뱅크스(Banks, 2004, 5)는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교사는 학생의 인종, 문화, 사회적 계층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교사는 이러한 집단으로부터 온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을 다양하게 적절히 수식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의 중요성도 지적하였다. 학교 문화는 이러한 학생들의 집단 편성, 명칭 사용, 운동 참여,

학업성취에서의 불공정, 교직원과 학생의 상호작용 등과 관련이 있다.

최근 그는 워싱턴 대학의 다문화 교육 센터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국제협의위원회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의 원칙과 개념’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는 다양성의 변수로 사회계층, 민족 정체성, 인종 집단, 언어, 장애와 비장애, 종교, 성적 기호를 제시하고, 이들은 복잡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성과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다(Banks, 2008, 모경환(역), 35). 따라서 한 학생 내에서도 성, 민족, 계급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골릭과 친(Gollnick과 Chinn, 2009, 18)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집단의 구성원들에 기초를 두고 발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이러한 집단들 속에서 발달하는 정체성은 주류 집단과의 상호작용과 집단간의 권력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민족, 인종, 계층 및 사회경제적 지위, 성과 성적 기호, 특수성(장애 및 영재), 언어, 종교, 지형, 연령이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IV-1) 문화적 정체성 관련 변인(Gollnick과 Chinn, 2009)

한편, 베넷(Bennett, 2007, 227)은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기대되는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성, 계층, 민족, 개인의 특별한 요구(특수교육)를 고려할 것과, 교수·학습 접근으로 통합교육과 수준별 수업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을 위해, 램시(Ramsey, 2004, 16-67)는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가 제안한 ‘인간 발달 생태학’ 체계에 따라 환경적 변인을 설명하였다.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발달 단계나 개인적인 특성은 학생의 사회생활 장면에서만 의미 있게 된다는 전제하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를 제시한 후, 학습 환경과 관련된 인종, 계층, 문화, 성, 능력과 장애 등의 요인과 관련된 차이, 분배, 불공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예컨대 문화적 요

인에 관해서라면 문화적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생들에게 문화가 미치는 영향과 또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고찰해 본 후, 학생들이 문화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배우고 생각하며 느끼는지를 배우는 방법을 논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기존의 가정에 도전하고 관점을 확대하는 활동들을 소개하도록 한다.

소수자의 적응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코엘료(Coelho, 1998, 31-53)는 소수자 적응 요인으로서 연령, 사회 계층, 가족의 역동성, 인성을 들었다. 또한 교사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위기 요인과 강점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우선 위기 요인으로서, 가족 분리, 선택의 주체, 준비 및 지원, 국제 학생(한시적 이주), 생활환경의 변화, 문화적 고립, 언어 유창성, 사전 교육 경험, 학교 문화,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내 권력 변화, 학교와 가정의 문화적 갈등, 학부모 참여, 피난소 경험 등을 들었다. 한편, 이들의 강점에는 주도성, 공동체 의식, 문화적 의식, 적응력, 교육에 대한 존중감, 대가족, 근면성, 시민성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학교는 환영하는 분위기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과, 교사는 간문화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경험적인 지식, 다른 문화 집단의 기대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가정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다문화적 사회에 좀 더 반응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 학교와 가정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개방적인 협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들의 적응 실태를 연구한 오성배(2007)에 따르면, 이들은 이주 형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언어 학습과 정체성 형성, 그리고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모와 피부색이 다른 학생의 경우 소극적인 대인관계로 이에 따라 파생되는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 가정 학생들 중 일시 이주 상태나 불법체류자인 경우엔 학습 동기가 낮고 지속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부적응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새터민 가정 학생의 적응과 관련하여, 이수정(2007)은 탈북과정에서 겪은 아픈 경험들로 인한 불안, 긴장, 우울 등의 심리적 외상이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밖에 몇 가지의 적응 실태를 제시하고 요구되는 지원을 설명하였다. 즉, 학업 유지, 교우 관계 형성, 연령과 학령차로 인한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학력인정제도, 유연한 학급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관간의 분담 및 연계, 교사 교육, 교육 목표 및 내용 재확립, 다수자에 대한 평화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본 원에서 수행한 오은순 외(2007, 105-128) 연구도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적응 실태를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즉, 학업성취도, 언어유창성을 포함하는 인

지적 측면, 자아개념, 정체성의 정의적 측면, 교우관계, 사제관계의 사회적인 측면, 이민 형태, 학부모 적응 등의 가정환경, 그리고 신체적 특성 및 발달 수준 등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실태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경우, 인지적으로는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부적응과 환경적,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학습 부적응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는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겪는 상처의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이 다양한 형태의 비행과 부정적 태도로 드러났다.

또한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학습 태도도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다른 피부색을 지니거나 낮은 경제적 위상에 있는 부모의 출신국 등에 대해 한국사회가 차별적인 시선을 보냄으로 급우들과의 갈등, 충돌, 위축된 태도 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어느 정도는 공통의 양상을 띠나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지도 과정에서 전반적인 경향과 개인적인 특성 모두를 조심스럽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수·학습 관련 변인은 일반적으로 학생, 교사, 교육과정, 환경으로 대별된다(이성호, 1999; 전성연, 2001; 최승현 외, 2005; Frazee와 Rudnitski, 1995). 이는, 교수·학습은 학생과 교사가 교육과정을 내용으로 하여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구분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역시 같은 논리로 관련 변인을 범주화하면 이를 교수·학습 과정에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 변인을 제외한 학생, 교육과정, 환경 변인만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에서 연구자들이 제안한 변인들을 학생, 교육과정, 환경 변인으로 구분하여 요약·정리한다.

〈표 IV-5〉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관련 변인

변인	영역	하위요인
학생 변인	학생의 일반적인 요인	인종, 문화, 계층, 민족, 언어, 종교, 특수성(장애나 영재성 등), 성적 지향, 지형, 연령(학령), 발달 단계, 능력(학업 성취도 포함)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적응 수준	언어유창성, 자아개념, 자아정체성, 교우관계, 사제관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어려움	부모의 국적, 가족 분리, 선택의 주체 여부, 준비 및 지원, 가족의 역동성, 이주 형태(국제 학생 포함), 생활 환경의 변화, 문화적 고립, 사전 경험,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내 권력 변화, 학교와 가정의 문화적 갈등,
	다문화 가정 학생의 강점	주도성, 공동체 의식, 문화적 의식, 적응력, 교육에 대한 존중감, 대가족, 근면성, 시민성
교육과정 변인	인종, 문화, 계층, 민족, 언어, 종교	
환경 변인	학교 문화, 사회 구조, 주류 문화, 거주지 문화	

요약컨대,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을 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변인들은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생 변인과 교육 내용인 교육과정 변인, 그리고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교사가 고려해야 할 학생 변인은 다문화 가정 학생 뿐 아니라 일반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요인과 다문화 가정 학생 개인의 적응 수준,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강점과 어려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교사는 일반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 모두의 인종, 문화, 계층, 민족, 언어, 종교, 특수성(장애나 신체적 특이성 등), 성적 기호, 연령, 발달 단계, 능력(학업 성취도 포함)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 개인의 언어유창성, 자아개념, 자아정체성, 교우관계, 사제관계 등, 적응 수준을 파악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이를 반영한다.

한편, 다문화 가정 학생 부모의 국적, 가족 분리, 선택의 주체 여부, 준비 및 지원, 가족의 역동성, 이주 형태(국제 학생 포함), 생활환경의 변화, 문화적 고립, 사전 교육 경험,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내 권력 변화, 학교와 가정의 문화적 갈등, 학부모 적응 및 학교 참여, 피난소 경험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강점으로 주도성, 공동체 의식, 문화적 의식, 적응력, 교육에 대한 존중, 대가족, 근면성, 시민성 등에 더욱 능력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 밖에도, 교육과정 내용 중, 인종, 문화, 계층, 민족, 언어, 종교 등을 다문화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문화, 사회 구조, 주류 문화, 거주지 문화 등의 환경 변인도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V.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1. 범교과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발 방법 및 절차

다문화 교육을 위한 범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란 교사가 학생과 함께 수업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다문화 교육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위한 범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는 문화의 다양성과 자아 정체성, 반편견/관용/인권,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문제해결 능력 등의 3개 범주이다. 다음으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해당 주제와 관련이 되는 학년, 교과 및 단원을 각각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주제 중심의 통합 교과 형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다수의 교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주제별 관련 학년과 교과 및 단원은 다음과 같다.

주 제	학 년	관련 과목	7차 개정 교육과정 관련단원 및 목표	현행 교육과정 관련단원 및 목표
다 양 성 과 정 체 성	3,4 학 년	사회 음악 도덕	(사회) (6) 다양한 삶의 모습들 -② 고장, 지역, 국가의 서로 다른 학생 들의 문화를 알아보고 유사성과 차이점 을 조사한다. (음악) 2) 노래 부르기-다른 나라 동요 부르기 -여러 지역의 동요를 부르는 활동을 통 하여 인간 삶의 보편성 및 악곡들이 속한 지역의 개별성·특수성을 경험할 수 있다. (도덕) 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나) 소중한 나의 삶-자신을 소중히 여 기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 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한다.	(사회) 6학년 2학기 2.함께 아가는 세계 (지식·이해)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환경 과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가치·태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관 심을 가지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음악) 6학년 24.여러 나라의 음악-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각 나라의 민요를 그 나라 음악의 특징을 살려 노래할 수 있다.
갈 등 해 결	5 학 년	도덕 국어	(도덕) ②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다) 대화와 갈등해결-삶에서 발생사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대화와 합리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는 능 력과 자세를 기를 수 있다. (국어) 5-말-(4) 학교안팎에서 일어나 는 일을 소재로 하여 존극을 한다.	(도덕) 5학년 7. 서로 다른 주장-민주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반성하며,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국어) 4학년 2학기 4.꿈을 찾아서-글에 나오는 인물에 어울리는 표정과 목소리 로 말할 수 있다. 6학년 2학기 4.문제와 해결-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 해 보고, 생각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반 편 견 과 인 권	6 학 년	도덕	(도덕) ③ 국가·민족·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가) 편견 극복과 관용-문화에 대한 올바 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를 지닌다.	(도덕) 10.평화로운 지구촌-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추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 해하고, 이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전체 프로그램의 형식은 위의 세 개의 주제가 각각 큰 모듈이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주제에는 다수 개의 하위 주제를 두어 다수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하였다. 한 개의 하위 모듈은 한 차시 수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직접 제시하는 내용을 20분 분량으로 개발하고,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제안하여 그 활동을 하는 데 나머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하위 모듈의 형식은 그 자체가 기승전결을 갖춘 완결된 프로그램의 형식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하위 모듈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순서	학습단계	내 용
1	생각해 봅시다.	-문제 상황 제시 -Or 관련 시각/영상 자료 제시
2	무엇을 공부할까요?	-목표 제시
3	함께 공부해 봅시다.	-생각하기: 생각한 후 발표, 토론 등 -And/Or 활동하기: 그리기, 만들기 등
4	정리	-앞선 활동에 대한 정리: 모범 결과물 제시
		-목표와 관련한 학습 내용 정리(텍스트 설명)

프로그램 개발은 크게 프로그램 원고 집필과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로 나누어진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 4인으로 이루어진 개발진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검토진에 의해 프로그램 원고 집필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개발진 워크숍- 원고 의뢰(개발진별 학년 및 개발 내용 선정)- 1차 원고 집필- 개발진내 교차 검토- 2차 원고 집필- 1차 외부 검토- 3차 원고 수정 보완 집필- 2차 외부 검토 및 부분 수정- 최종 원고 수정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기획진과 개발진이 스토리 보드 작업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프로그램 원고의 의도가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프로그램 개발 내용

모 듈	목적	모듈명	하위 모듈명	목표	내용	관련학년 /교과
1	다양성, 정체성, 문화창 조성	문화의 다양성과 자아 정체성	다양한 문화, 알면 알수록 낯설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낯선 문화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1)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2)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존중하기 3) 다양한 문화 속에 존재하는 보편성 알기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다양한 문화의 사례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문화의 사례	3,4학년 사회/ 도덕
			‘나’, ‘나만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삶의 주체로서의 ‘나’와 특정 국가에 속해 있는 문화가 아닌 ‘나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1)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 갖기 2) ‘나’와 ‘나의 문화’ 찾아가기 3)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 형성하기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 정체성 찾기	3,4학년 사회/ 도덕/ 미술
2	시민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문제 해결 능력	방법을 알면 해결이 어렵지 않아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 1) 상황을 통해 문제 상황 인식하기 2) 문화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해결 방법 생각하기 3) 대화를 통해 문제 상황 해결하기	-국제결혼 사례 1: 외국인 엄마 사례 -국제결혼 사례 2: 외국인 아빠 사례	5학년 도덕/ 국어
			직접 경험해 보면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 상황 해결 경험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1) 상황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 인식하기 2) 이해와 대화를 통한 해결 경험하기 3) 다양한 문제 상황 해결하기	-‘베트남 큰 엄마’ 사례 -태국인 직원과 한국인 사장 사례	5학년 도덕/ 국어
3	평등/ 정의	반편견과 인권 존중반	우리도 존중받고 싶어요!	우리와 다른 생김새와 문화를 가진 타인에 대해 알고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존중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 1) 낯선 문화와 인종에 대해 알고 그들이 겪는 문제점 인식하기 2)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 갖기	문화적,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는 외국인 근로자	6학년 도덕/ 국어
		인권주의	무지개는 왜 아름다울까 요?	피부색, 국적, 종교,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의 부당함을 알고 반 차별적인 태도를 갖는다. 1) 인종 차별의 부당함 인식하기 2) 차별받는 집단의 심정을 이해하고 반 차별적인 태도 갖기	-외국에서 차별받는 한국인 -인종 차별의 사례	6학년 도덕

2. 사회과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발 방법의 및 절차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는 실제 교수·학습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때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다문화 교육을 목표로 개발된 일련의 수업 자료를 의미한다.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형식은 해당 학년과 학습 내용, 목표 등을 고려하되 내적으로 기승전결의 완결된 다수의 모듈로 구성하였다. 또한 한 개 모듈은 한 차시 수업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오프라인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20분 내외 분량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하나의 모듈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한 차시 동안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이나 학습 활동 등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과 형식, 혹은 차시 구성 방안 등에 대한 활용 지침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교사들은 개별 수업 조건과 학생들의 처지, 수업 목표에 따라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회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상 학교급과 학년을 초등학교 3학년~6학년으로 설정하였다. 무엇보다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은 사회적 요구가 빈번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 분석에서도 초등 사회과에서 다문화 교육과의 접점을 보여줌으로써, 교과 교육과정 상에서 다문화 교육을 시도하고 실행하는데 이와 같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사회과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3학년부터 마감학년인 6학년까지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면서 다문화 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단원을 선정하여, 다문화적 초점으로 학습 활동을 구상하였다. 이처럼 각 단원의 내용을 수업에서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다문화교육의 주제 및 행동 목표로 다양한 문화 이해, 자기 문화의 정체성 이해 및 탐구, 비판견, 관용, 인권, 다문화 이해에 바탕을 둔 미래사회에 적합한 문제 해결 능력 및 문화 창조력 등을 설정하였다. 특히 다양한 문화 양상의 이해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제 이해교육과의 차별성을 주지하였다. 또한 일반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이 공존하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 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외국인노동자 자녀, 결혼 이주 가정 자녀, 새터민 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문화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문제시하거나 소재에서 두드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사회과 프로그램 개발은 크게 프로그램 원고 집필과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로 나누어진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 4인으로 이루어진 개발진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검토진에 의해 프로그램 원고 집필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개발진 워크숍- 원고 의뢰(개발진별 학년 및 개발 내용 선정)- 1차 원고 집필- 개발진내 교차 검토- 2차 원고 집필- 1차 외부 검

토- 3차 원고 수정 보완 집필- 2차 외부 검토 및 부분 수정- 최종 원고 수정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기획진과 개발진이 스토리 보드 작업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프로그램 원고의 의도가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과 프로그램의 각 모듈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도입 혹은 엮이기 단계에서는 다문화 주제 학습을 위한 문제 상황 제시, 주제 확인, 동기 유발과 선수 학습 확인 및 본시 학습 소개 등이 이루어졌다. 각 주제에 적절한 도입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전개 혹은 들여다보기 단계에서는 학습할 개념이나 사실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읽기 자료나 관찰 학습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생각해보기 혹은 경험하기로 구성된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학생의 활동이나 과제 등을 제시하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모듈은 무엇보다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통해 명시된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 활동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나. 프로그램 개발 내용

사회과 프로그램 개발은 개정 교육과정 분석 자료와 개발진의 교수학습 내용 분석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에 걸쳐 사회과 단원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학년	모듈	제목	다문화 교육 주제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학습 활동	내용
3	1	의식주 문화	다양성	(6) 다양한 삶의 모습들	학습지& 막대 인형놀이	고장, 지역, 국가의 문화를 의, 식, 주, 놀이 문화로 나누어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봄
	2	놀이 문화	다양성	② 고장, 지역, 국가의 서로 다른 학생들의 문화를 알아보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조사한다.	다른 나라의 놀이 체험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 발전함
	3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의 만남	다양성, 정체성		학습지	
4	1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1)	다양성, 평등/정의	(6)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① 현대사회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본다.	마인드맵&모둠 활동	다양한 가족 유형과 가족 형성 방법을 살펴 봄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2)	다양성, 평등/정의		학습지&역할극	바람직한 가족의 의미와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한 가족의 역할을 알아봄
5	1	흥선대원군 역사에 등장하다	정체성, 세계 시민성	(5)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① 개항 전후 시기부터 일제 강점까지 외세의 침략 과정과 그에 대한 조상의 대응을 파악한다.	사료 수업&역할극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를 바라보는 조선 내부의 인식의 차이
	2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세계 열강들	정체성, 세계 시민성		사료 수업&신문기사 작성	서구 열강의 접근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외교정책을 통해 서구와 우리의 시선의 차이를 알아봄

학년	모듈	제목	다문화 교육 주제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학습 활동	내용
6	1	다르지만 같은 우리,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1)	세계 시민성	(4)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⑥ 관용, 태도, 타협, 절차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문제해결 수업& 학습지	다문화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함
	2	다르지만 같은 우리,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2)	세계 시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사항 발표

Ⅵ. 결론

지금까지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의 기초가 되는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교육적 접근을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모형화하여 제시하였다. 모형은 우리 나라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 프로그램과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 체제 내외 환경에서 협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 중심의 교과 교육이다. 이에 따라, 교과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다문화 주의적 관점에서 정체성, 다양성, 평등과 정의, 세계 시민성, 새로운 문화 창조를 설정하였으며, 교과 교육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교육과정과 이를 구현하는 교수·학습의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실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 관련 이론과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요소들을 추출해 보았다. 한편, 어떤 변인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 다문화 상황에서 고려할 변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관련 이론과 연구물로부터 추출하였다. 그 밖에도 본 발표 원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다문화 교육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수업 관찰 및 심층 면담, 외국 사례 분석 등을 수행하여 그 결과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로 하였다.

이상의 기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상황에서 적용할만한 교육과정 중심의 범교과 프로그램과 사회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사들이 각 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에 이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을 위한 범교과와 사회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기인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앞서 논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선험적인 국내외 경험과 체계적인 이론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또한 아직은 다문화 교육의 심각한 문제나 극도의 한계점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상황은 어떤 측면에서는 향후 다문화 교육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현재 다문화 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이 얼마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교육 현장에 천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가 수준 혹은 교육청 수준에서 교과 및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학교 및 학급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교사와 학교 행정가들의 다문화 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중핵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와 대학, 기타 민간 및 사회단체들의 몫도 사회적 지지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교육청,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사회 단체간의 협력 또한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행사는 더욱 의의가 있다 하겠다. 요컨대, 다문화 교육 관련자 모두가 각각의 몫을 충실히 할 뿐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여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문화 가정은 물론 일반 학생들을 다문화 사회 속의 시민으로 길러낼 때 새로운 다문화 사회를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의 곳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한 가지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문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적응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주로 다문화 가정 학생만을 위한 것으로 잘 못 이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당장은 매우 필요한 인식이며 접근이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문화 사회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는 교과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고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한국 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학생들은 물론, 그들 가정을 위한 학교 밖 체제의 지원도 공유된 철학과 인식을 가지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다문화 가정 품어 안는 교육 지원 대책 발표”. 2006년 5월 1일.
- 교육학대백과사전(198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87.
- 김갑성(2007). 어.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2007년도 제4차 국제이해교육포럼-다문화사회를 위한 협력, 7월 7일.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남한학교 다니기.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2호, 23-44.
- 김복영(2008). 다문화 시대의 배려 교육과정: 사회적 소수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학회 · 한국 초등교육학회 국제 컨퍼런스 발표 자료
- 김원호(2007). 신입교사의 좌충우돌 국제이해교육 체험. 2007년도 제4차 국제이해교육포럼-다문화사회를 위한 협력, 7월 7일.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 김정원(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3), 95-129.
- 김정원, 이해영, 배은주, 허창수(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5-5.
- 마츠모토 쿠미히코(2007). 야마가타현의 다문화 가족 정책의 성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주최, 미래사회의 다문화 가족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25-94).
- 문동석(2003). 「초등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교육』 42-1 박선영(2005). 다문화 교육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문학과 음악의 통합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 박정문(2006). 초등학생의 다문화 학습활동에 관한 반성적 실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박철희(2007). 다문화 교육 관점에 기초한 초등 사회 · 도덕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7(1), 109-129.
- 배은주(2006). 한국 내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9(2), 25-55.
- 배의숙(2006). 영어연극과 협동학교 덕분에 함께 사는 세계를 알아요. APCEIU. 바팔라 파에를 선물하고 전통의상을 입으면 어엿한 성인 (176-190). 국제이해교육, 2006년 가을 · 겨울 통권 17호
- 법무부(2007). **2006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 변영계(1999). **교수·학습이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손소연(2006). 지구촌에 일곱 빛깔 무지개 뜨다. APCEIU. 바팔라 파에를 선물하고 전통의상을 입으면 어엿한 성인 (146-156). 국제이해교육, 206년 가을 · 겨울 통권 17호, 이크.
- 신영민(2005).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미술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양영자(2006). 신문으로 신문 만들기, ‘세계 속에서 나를 찾아요.’. APCEIU. 바팔라 파에를 선물

- 하고 전통의상을 입으면 어엿한 성인 (157-175). 국제이해교육, 206년 가을 • 겨울 통권 17호, 이크.
- 오성배(2005). 코시안(Kosi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배(2006). 한국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오성배(2007).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 자료집, 2007-15.
- 이성은, 오은순, 성기욱(2002). **초·중등 교실을 위한 새 교수법**. 서울: 교육과학사, 68.
- 오은순, 강창동, 진의남, 김선헌, 정진웅(2007).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7-2
- 이귀우(1999). 비판적 다문화 주의와 문학연구. 인문논총 6집, pp.59-75,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민경(2007). 프랑스에서의 다문화교육. 2007년도 제3차 국제이해교육포럼-외국의 사례로 본 다문화교육의 전망, 6월 16일.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 이성호(1999). **교수방법론**. 서울: 학지사.
- 이수정(2007). 새터민 가정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 자료집, 2007-15.
- 이승미(2007).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의 다문화교육 사업. 2007년도 제4차 국제이해교육포럼-다문화사회를 위한 협력, 7월 7일.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 이영호(2000). 세계사 교육에서의 '타자 읽기'- 서구 중심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를 넘어.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서울, 책과함께: 413-449.
- 이희수(2007). 다문화 사회 교육을 위한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안: 중동, 이슬람 문화 왜곡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는 학교교육: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사회 교육>,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포럼 자료집, pp.15-24
- 장영희(1997).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신연구논문집**, 제35집, 295-314.
- 장용석(2007). 몽골소녀 윤수경(말없는 아이). 2007년도 제4차 국제이해교육포럼-다문화사회를 위한 협력, 7월 7일.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 장원순(2006). 우리 안의 차별과 배제, 일상적 삶에서의 다문화교육 접근법. 사회과 교육의 논리. 서울, 교육과학사: 127-153.
- 장인실(2006).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6(4), 27-53.
- 전성연(2001). 교수-학습의 이론적 탐색. 서울: 원미사.
- 정선희(1997). 다문화 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재훈(2005). “중학교 사회 교과서 세계사 서술속의 타자 읽기: 북아시아 서술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93: 1-31.
- 조난심(200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통해 본 다문화교육의 밑그림,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는

- 학교교육: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사회 교육,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포럼 자료집, pp. 5-13
-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2006a).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 조영달, 윤희원, 권순희, 박상철, 박성혁(2006b).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지정-21.
- 최승현, 강창동, 김수동, 오상철, 오은순, 배은주, 주유나(2005). 교수·학습 상황과 주요 변인 분석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집.
- 한건수(2007). 다문화 교육과 사회과 교과서의 문제: 세계 지리 및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는 학교교육: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사회 교육,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포럼 자료집, pp 25-49
- 한영혜(2007). 일본의 글로벌화와 공교육의 변화: ‘다문화공생교육’을 중심으로. 2007년도 제3차 국제이해교육포럼-외국의 사례로 본 다문화교육의 전망, 6월 16일.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 APCEIU (2006). 바팔라 파예를 선물하고 전통의상을 입으면 어엿한 성인, *국제이해교육*, 2006년 가을·겨울 통권 17호, 이크.Banks, J. A. & Banks, C. A. M. (2004).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2nd ed.). CA: JOSSEY_BASS.
- Banks, J. A. (1988).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Boston: Allyn and Bacon.
- Banks, J. A. (2004).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y development, dimensions, and practice. In J. A. Banks & C. A. Banks (Ed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2nd ed.) (3-29). JOSSEY_BASS.
- Banks, J. A. (2005). Multicultural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goals. In J. A. Banks & C. A. M. Banks (Ed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5th ed.) (3-30). WILEY.
- Banks (2008).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아카데미프레스
- Banks, J. A. & Cherry A. McGee Banks(2004).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NJ: John Wiley & Sons, Inc.
- Banks, J. A. & Cherry A. McGee Banks(2007). **MULTICULTURAL EDUCATION**(6th de.)
- Bennett, C. I. (1995).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MA : Allyn & Bacon.
- Bennett, C. I.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th ed.). PEARSON.
- Coelho, E. (1998). *Teaching and learning in multicultural schools*. UK: Multilingual Matters Ltd.
- Frazer, B. N. & Rudnitski, R. A. (1995). *Intergrated Teaching Methods*. NY: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Inc.
- Gollnick과 Chinn(2009).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 18, PEARSON.
- Goodman, G. S. & Carey, K. T. (2004). Standards for Educator. In G. S. Goodman & K. T. Carey (Eds.), *Critical multicultural conversations* (257-264). HAMPTON PRESS.

- Hansen-Krening, N., Mizokawa, D. T. & Zhongming Wu (2001). Literature, a driving force in ethnic ident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development. In F. Salili & R. Hoosain (Eds.), *Multicultural education-issues, policies, and practices* (211-223). IAP.
- Harris, M. Y. (2005). Black women writing autobiography: Auto biography in multicultural education. In J. Phillion, Ming fang he & F. M. Connelly (Eds.), *Narrative & experience in multi cultural education* (36-52). SAGE.
- Iowa Stae Department of Education(1989). A Guide to developing Multicultural, Nansexist Education Across the Curriculum.
- Nieto, S. (2005). School reform and student learning: A multricultural perspective. In J. A. Banks & C. A. M. Banks (Eds.), *Multicultural education-issues and perspectives* (5th ed.) (401-420). WILEY.
- Peter Schier (eds.), 2005,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ies-Perspectives on education in Malaysia**, ASEAN ACDEMIC PRESS.
- Ramsey, P. G. (2004). *Teaching and learning in a diverse world* (3rd ed.). TEACHERS COLLEGE PRESS.
- Salili. F. & Hoosain. R. (2001).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y, issues, and practices. In F. Salili & R. Hoosain (Eds.), *Multicultural education-issues, policies, and practices* (1-14). IAP.
- Shlievert, S. (2004). The ar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G. S. Goodman & K. T. Carey (Eds.), *Critical multicultural conversations* (137-147). HAMPTON PRESS.
- Sleeter(2008). Multiculturalism,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한국교육과정학회 · 한국초등교육학회 국제 컨퍼런스 발표 자료
- Suleiman, M. F. (2004). Multicultural education: A blueprint for educators. In G. S. Goodman & K. T. Carey (Eds.), *Critical multicultural conversations* (9-22). HAMPTON PRESS.
-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ment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Zaw, S. K. (1996). Locke and multiculturalism: toleration, relativism, and reason. In R. K. Fullinwider (Ed.), *Public education in a multi cultural society* (121-155).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웹사이트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통계 자료 <http://www.moe.go.kr/main.jsp?idx=0306010101>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 subtype>

주제 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지형과 쟁점

최 종 렬
(계명대 사회학과)

목 차

- I. 연구의 필요: 왜 다문화주의인가?
- II. 서구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의 다문화주의 논의
- III. 문화의 세 차원과 다문화주의의 쟁점
- IV. 맺음말

I. 연구의 필요: 왜 다문화주의인가?

근래 들어 한국사회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정부, 학계, 시민사회,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80년대 말 이후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9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촉발되었다. 사실 단일한 동질적인 국민-국가(unitary homogeneous nation-state)라는 이전의 모델을 거부하는 것이 다문화주의를 위한 모든 투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한다면(Kylimcka, 2007: 61),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새 소수자’의 등장은 소위 한국의 ‘단일 순수혈통 국민-국가 신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온 듯하다. 이러한 도전에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정부였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관 주도 이루어져 왔다(오경석 외, 2007).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민 수용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새 소수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당혹감을 느낀 것처럼 보인다. 물론 화교와 혼혈인과 같은 ‘옛 소수자’가 없지는 않았지만, ‘단일 순수혈통 국민-국가 신화’에 도전할만한 세력으로 간주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국가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박경태, 2008). 그러다가 지구화 과정에서 새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대거 유입하자, 이를 다루기 위해 다문화주의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글은 한국사회보다 먼저 소수자에 대한 논의를 다문화주의 이론과 정책을 통해 진행시켜 온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참조로 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를 모색해보려는 노력이다. 현재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수자를 다문화주의 틀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공통된다. 물론 다문화사회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만의 독특한 경험은 아니다. 과거 오스만 제국을 비롯해 주요 제국들은 거의 다 다문화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은 현재의 사회주의 국가도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나름대로 다문화사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Kymlicka and He,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에서 경험한 다문화주의에 주목하는 것은, 우선 그것이 최근 선진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에서 점점 더 지배적인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도 그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서구의 다문화주의에 주목하는 것은 또한 사회이론의 관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사회이론의 전통에서 볼 때, 다문화주의는 노동분업이 고도로 이루어져, ‘구성적 기대’(constitutive expectations)가 사회 곳곳에 잘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자 자율성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다른 형태의 다문화주의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차이가 난다. 사회의 분화와 각 영역의 자율성 증대가 다문화주의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국가 중심으로 단순히 통합된 사회는, 구 소련이 보여주듯, 그리고 현재 중국이 보여주듯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동일한 ‘배경적 기대’(background expectations)에 대한 공유 없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 새로운 배경적 기대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다문화주의라 할 수 있다.¹⁾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이론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는 이전의 단일 국민국가 중심의 동화주의 모델을 대체하여 나온 모델이다. 이는 ‘크게 보아’ 두 유형이 있는데, 이 모두는 계몽주의와 대항계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²⁾

첫째, 계몽주의적 진보관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모든 개인은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지니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아무리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와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근대에는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보편적 인권 문화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는데, 이 소수자에게 이를 다시 확산시키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책도 보편적 인권을 확산시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대항계몽주의, 특히 헤르더의 문화 개념에 기반한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모든 개인은 공동체 안에 태어나 그 속에서 정체성을 획득하며 살아간다고 본다. 근대는 이러한 ‘집단차이’를 부정하고 하나의 국민-문화로 동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최근 신부족주의의 발흥에서 보듯 이를 다시 되돌리려 노력한다. 정책의 초점은 각 집단의 고유한 전통을 보존하고 문화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표 1〉 기존 서구 다문화주의의 두 종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계몽주의)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대항계몽주의)
문화의 개념	자유주의적 보편적 인권 문화; 집단과 상관없이 보편적 인권 문화가 존재	문화적 본질주의; 각 집단은 고유의 진정한 정체성을 지님
다문화주의의 맥락	자유주의적 보편적 인권 확산의 최근의 계기	신부족주의; 근대의 국민-국가에 의해 억압받았던 소수민족주의 부활
정책의 초점	보편적인 자유주의적 인권 문화를 다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에게 확산	각 집단의 고유한 전통 문화 보존; 문화적 순수성 유지

이론적 차원에서 이렇듯 갈라서는 하지만, 실제 정책의 면에서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은 다문화주의를 새로운 통합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잘 자리 잡고 있는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 1) 배경적 기대는 한 집합체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상징과 해석틀로서 어떤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일반적 틀로 사용된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없으면 행위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석불가능하다. 구성적 기대는 배경적 기대에 비해 구체적인 부문, 교환, 상호작용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다.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가능한 규칙들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렬(2008: 33-46)을 볼 것.
- 2) 계몽주의와 대항계몽주의에 대해서는 최종렬(2004)을 볼 것. 크게 보아서는 이렇게 둘로 갈리지만, 실제로는 양자의 조합을 통해 수많은 다른 다문화주의가 있을 수 있다.

수 있다. 민주화와 자유화가 다문화주의를 완전히 실현하기 전에 먼저 어느 수준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 곳곳을 보면 이런 이상은 바로 배반당한다.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화와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Kymlicka, 2007) 이러한 물음은 사실,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민주화와 자유화를 앞당기는 길이고, 역으로 민주화와 자유화를 앞당기면 소수자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가 실현된다는 말로 답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논의는 민주화와 자유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화와 자유화가 다문화주의와 함께 ‘집단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개인의 차원’에서도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을 지나치게 동질적인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그리고, 모든 논의를 이 차원에만 집중할 경우 그 집단 내부의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집단 안에 이미 수립되어져 있는 권력관계를 추인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유화와 민주화는, 사회 전체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화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젠더, 섹슈얼리티, 결혼 및 이혼, 출산과 낙태, 이름짓기 등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권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문화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주도의 다문화주의 또는 국가에 대항하는 운동으로서의 다문화주의가 전부인 것은 아니다. 운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성취한 아시아의 몇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이다. 동시에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문화적 동질성이 월등히 높은 나라이다. 근세에 들어 한국은 한 번도 대규모의 이민을 수용해 본적이 없는 나라이다. 화교와 혼혈인과 같은 예가 분명히 보여주듯 소수자는 항상 동화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배제 정책의 대상이었다. 그러한 나라가 어느 날부터인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정부의 슬로건 차원에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유입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이 이를 촉진 시킨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 살펴보면 이주노동자에게는 배제정책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는 동화정책을 취하면서, 담론의 차원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외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가중심적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문화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이론과 정책이 필요한지 서구 다문화주의 이론과 정책을 통해 타진해보고자 한다.

Ⅱ. 서구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의 다문화주의 논의

1. 소수자와 다문화 현실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으로 주체와 타자의 관계 문제로 보아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계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근대의 역사를 볼 때, 다수자는 지배적 집단을 형성하면서 단문화주의(monoculturalism)를 주장해 왔다. 근대의 모든 지배적 민족은 자신만의 국민-국가를 형성하길 원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집단들을 소수자로 만들었다. 근대의 국민-국가 만들기 경험을 먼저 한 서구의 경우 소수자는 크게 보아 셋으로 갈린다. 원주민(indigenous peoples), 준국가-국민 집단(substate nationalist groups), 이민자 집단(immigrant groups)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소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 종류의 다문화이론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킴리카(Kymlicka, 1995, 2007)의 주장이 다문화주의 이론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보고, 우선 소수자의 성격을 살펴보려 한다.

원주민은 근대 서구인들이 신생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억압되어온 토착민들을 지칭하는데, 캐나다의 인디언과 이누이트 족, 호주의 원주민, 뉴질랜드의 마오이 족, 스칸디나비아의 새미 족, 그린랜드의 이누이트 족, 그리고 미국의 인디언 부족들이 그 예이다. 과거 이 모든 나라들에서는, 원주민들이 결국에는 자연사하고, 민족간 결혼을 하고, 또는 동화를 통해서 독자적인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이러한 과정을 앞당기기 위해 실행되었다. 원주민의 토지를 빼앗고,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 언어, 종교의 실천을 제한하고, 그들의 자치제도를 파괴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정책에 극적인 반전이 있었다. 오늘날 이 모든 나라들은 최소한 원리상으로는 원주민들이 전체 사회 안에서 독자적인 사회로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원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주장, 문화권, 자치권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준국가-국민 집단은 한 큰 국가 안에서 자신을 하나의 독자적인 국민으로 인식하면서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거주하는 집단들, 즉 역사적으로 소수 준국가-국민으로 형성된 집단들을 지칭한다. 캐나다의 퀘벡, 영국의 스코츠와 웨일,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인(Catalans)과 바스크인(Basques), 벨기에의 플랑드르인(Flemish), 이탈리아의 남부티롤(South Tyrol)의 독일 소수자, 미국의 푸에르토 리코가 그 예이다. 여기에는 모두 한 큰 국가 안에서 자신을 하나의 독자적인 국민으로 인식하면서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거주하는 집단들이 존재한다. 독립된 국가의 형태 또는 전체 국가 안에서 영토적 자율성을 통해서 그 국가됨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한때는 준국가적 민족주의를 표현하는 것을 영토의 주권을 가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억압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다국민적·다언어적 연방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소수자 집단이 지역 다수를 차지할 경우 그 지역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할뿐만 아

나라 그 집단의 언어를 그 지역에서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있다.

이민자 집단은 무엇보다도 ‘이민의 나라’(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로 이주해 온 이민자 집단을 말한다. 이 나라들에서 이민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에 동화되도록 고무되었고 기대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그 나라의 시민들과 말하기, 옷 입기, 레크리에이션, 투표 유형, 삶의 방식 일반에서 구분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동화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집단들은 우선 이민이 금지되었고, 또한 시민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의 이민 또는 귀화를 금지하는 법에 잘 표현되어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이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인종중립적인 이민정책 수용을 통해 비유럽계(비기독교계) 이민이 증대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다 다문화적인 통합 개념을 수용했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이민자들이 가시적으로 자랑스럽게 자신의 소수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공적 제도들(경찰, 학교, 미디어, 박물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해야 했다. 이민의 나라들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차별적인 이민 정책과 귀화 정책에서 인종-중립적인 이민 정책과 귀화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동시에 동화주의적 통합 개념에서 보다 다문화적인 귀화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아래 <표 2>는 지금까지 킴리카의 논의를 간단한 표로 나타낸 것이다. 맨 아래의 다문화주의 정책지수는 킴리카가 각 나라의 다문화주의 정책 수행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수이다.

<표 2> 기존 서구 자유주의 다문화주의에서의 소수자

	원주민	준국가-국민 집단	이민자 집단
구체적 예	인디언과 이누이트 족(캐나다); 원주민(호주); 마오이 족(뉴질랜드); 새미 족(스칸디나비아); 이누이트 족(그린랜드); 인디언 부족들(미국)	퀘벡(캐나다); 스코츠와 웨시(영국); 카탈리아인과 바스크인(스페인); 플랑드르인(벨기에); 독일어 소수자(이탈리아의 남부티롤); 푸에르토 리코(미국)	가장 중요한 ‘이민의 나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로 이주해 온 이민자 집단들
소수자 특징	근대 서구인들이 신생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토착민들	한 큰 국가 안에서 자신을 하나의 독자적인 국민으로 인식하면서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거주하는 집단들 (역사적으로 소수 준국가-국민으로 형성된 집단들)	영주와 시민을 목적으로 이민해온 집단들
정책 변화	원주민들이 결국에는 자연사하고, 민족간 결혼을 하고, 또는 동화를 통해서 독자적인 공동체로서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 많은 정책들이 이러한 과정을 앞당기기 위해 실행되었다: 원주민의 토지를 빼앗고,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 언어, 종교의 실천을 제한, 그들의 자치제도 파괴.	준국가적 민족주의를 표현하는 것이 영토의 주권을 가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억압; 원주민에게 사용했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억압(소수자 언어권을 제한; 전통적인 지역 자치권 형식을 소멸시킴; 지배적 집단이 수적으로 더 많아지도록 이들 지역에 이주하는 것을 장려	완전한 문화동화 정책; 완전히 문화적으로 동화될 수 없다고 여겨져 온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의 이민 또는 귀화가 금지
	최소한 원리상으로는 원주민들이 전체 사회 안에서 독자적인 사회로서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게 될	다국민·다언어적 연방주의; 소수자 집단이 지역 다수를 차지하고, 상당한 자치권 행사; 그 집단의	1960년대 후반 이후 극적인 변화; 인종중립적인 이민정책 수용을 통해 비유럽계(비기독교계) 이

	원주민	준국가-국민 집단	이민자 집단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원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주장, 문화권, 자치권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수용.	언어를 그 지역에서 공식 언어로 인정	민이 증대; 보다 다문화적인 통합 개념 수용(ethnic 정체성을 공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적 제도가 이를 보장)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	① 토지권/등기권 인정 ② 자치권 인정 ③ 역사적 협정을 인정하고 그리고/또는 새로운 협정에 사인 ④ 문화적 권리(언어, 수렵) 인정 ⑤ 관습법 인정 ⑥ 중앙정부 차원의 대표/심의 보장 ⑦ 원주민의 독특한 지위를 헌법 또는 입법 차원에서 인정 ⑧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을 지원/비준 ⑨ 원주민 공동체의 성원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	① 연방 또는 유사연방 영토 자율권 ② 지역이든 국가적으로든 공식 언어의 지위 ③ 중앙정부나 헌법기관에 대표를 보장 ④ 소수자 언어 대학/학교/미디어에 공적 편성 ⑤ 다문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또는 의회적 긍정 ⑥ 국제적인 인격 부여(국제무대에서 거의 국가적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부여)	① 중앙/지역/지방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헌법, 사법, 입법적으로 긍정 ② 학교 교과과정에 다문화주의를 채택 ③ 공적 미디어에서 소수민족 표상/감수성을 의무적으로 편성 ④ dress-codes로부터 면제, 일요일 휴무법(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⑤ 이중 시민권 허용 ⑥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수민족 집단 조직에 자금 지원 ⑦ 이중언어 교육 또는 모국어 학습에 자금 지원 ⑧ 불이익에 처한 이민자 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

* 출처: Kymlicka (2007: 66-77) 정리.

2. 다문화주의 담론: 도덕과 윤리의 대립

서구에서는 이렇듯 존재하는 세 소수자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다문화주의 담론이 발전되어 나왔다. 이는 구체적으로 도덕(morality)과 윤리(ethics), 또는 정의(justice)와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의 대립이라는 도덕철학의 문제로 나타난다. 도덕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는 근대성이 성취한 보편적인 원리, 즉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지금까지 국민-국가에 의해 누리지 못한 소수집단들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정의의 문제’로 된다. 이때 정의는 주로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다. 반면 윤리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는 자기 문화공동체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선한 삶’(good life)이라 보고, 기존의 국민-국가에 의해 이런 선한 삶을 누리는 걸 방해받아온 소수집단들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자기실현의 문제’로 된다. 도덕의 범위는 보편적이어서, 자기 고유의 가치가 무엇이든 모든 개인과 집단은 이를 따라야만 한다. 반면 윤리의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 안에서 특유의 인정을 추구한다. 이러한 도덕과 윤리의 대립은 철학적 차원에서 볼 때, 영미철학과 독일철학의 대립이 깔려 있다. 영미철학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 전통과 사회민주주의의 평등주의를 결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재분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 개념을 주창하였다. 반면 헤겔주의 철학, 특히 의식 현상학(phenomenology of consciousness) 전통에서 인정은 서로를 평등하게 보면서도 동시에 서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보는 주체들 간의 이상적인 호혜적 관계를 지칭한다. 이는 그 뿌리를 근대 사상에까지 파고들면, 도덕적 일원론을 주장하는 계몽주의와 다원론을 주장하는 대항계몽주의의 대립으로 나타난

다(Parekh, 2006). 정의의 시각에서 다문화주의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낸시 프레이저와 윌 킴리카이며, 자기실현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찰스 테일러와 액셀 호네트이다.

〈표 3〉 다문화주의 담론의 두 흐름

	정의의 문제	자기실현의 문제
정치학	재분배의 정치학, 계급 정치학	인정의 정치학, 정체성의 정치학
철학적(규범적) 전통	계몽주의 전통; 자유주의 전통, 특히 20세기 후반 앵글-미국 자유주의 전통에서 나온 것; 분석철학	대항계몽주의 전통; 헤겔주의 철학, 특히 의식 현상학으로부터 나옴; 실존철학
문제와 영역	‘옳음’(the right)의 문제로 이해되며, 이는 ‘도덕’(morality)의 영역에 속함; 절차적 정의의 ‘옳음’(rightness of procedural justice)	‘선’(the good)의 문제로 이해되며, ‘윤리’(ethics)의 영역에 속함; ‘자기실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과 선한 삶을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
범위	정의의 규범은 보편적으로 구속적; 행위자가 특정의 가치에 헌신하는 것과 독립	보다 제한적;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특수한 가치의 영역이며, 이는 보편화될 수 없다
대표적인 학자	낸시 프레이저, 윌 킴리카	찰스 테일러, 액셀 호네트

2-1. 정의와 다문화주의: 프레이저와 킴리카

프레이저(Fraser, 2003)는 재분배의 정치학과 인정의 정치학 둘 다를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재분배의 정치학은 자원과 부의 더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바, 이러한 평등주의적 재분배는 과거 150년 동안 사회정의에 대한 지배적 입장이었다. 반면 인정의 정치학은 차이 친화적인 세계, 즉 다수 또는 지배적 문화규범으로의 동화가 더 이상 동등한 존중을 대가로 하지 않는 세계를 선호한다. 인종/민족/성적 소수자들의 독특한 관점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젠더 차이들의 독특한 시각들을 인정하려는 시각으로서, 최근 사회정의를 탐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 두 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회정치학으로부터 문화정치학이 분리되고, 차이의 정치학이 평등의 정치학으로부터 분리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감이 있다. 그래서 인정의 정치학을 비판하는 진영은 최근 불평등이 지구적 차원에서 증대되고 있는데, 인정의 정치학은 오히려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허위의식’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분배의 정치학을 비판하는 진영은 소수자들과 여성들을 위한 정의를 만들고자 할 때 평등주의는 차이에 눈감는다고 주장한다. 프레이저가 볼 때 이런 양자택일식의 대립은 잘못된 문제 설정을 낳는다. 재분배냐 인정이나? 계급정치학이나 정체성 정치학이나? 다문화주의이나 사회 민주주의이나? 등이 그러한 잘못된 양자택일식의

질문들이다.

이러한 잘못된 이분법에 따르면, 양 패러다임은 부정의 개념, 부정의에 대한 처방, 고통받는 집합체의 실체, 집단 차이의 개념 및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대립된다. 재분배 패러다임은 사회 경제구조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경제적 부정의에 주목하고, 착취, 경제적 주변화, 박탈을 그 구체적 예로 든다. 따라서 그 처방도 경제를 재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수입과 부의 재분배, 노동분업의 재조직화, 소유권 구조의 변경, 투자 결정과정의 민주화, 그리고 여타 다른 기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형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고통받는 집합체는 계급, 또는 계급과 유사한 집합체(시장 또는 생산수단과의 독특한 관계에 의해 경제적으로 정의됨)이다. 경제적으로 착취받는 노동계급, 경제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는 이민자의 인종집단 또는 소수민족들, 무임금노동자로서의 여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집단의 차이는 불공평한 정치경제학의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이지 집단의 내재적인 속성이 아니다. 따라서 집단 차이는 소멸시켜야 할 것이지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닌 것으로 정의된다.

반면 인정 패러다임은 표상, 해석, 의사소통의 사회적 유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적 부정의에 주목하고, 문화적 지배, 비인정, 비존중을 대표적인 부정의로 본다. 따라서 그 처방에 있어서도 문화적 또는 상징적 변화를 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폄하되어온 정체성들과 그들 집단들의 산물을 높게 재평가하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긍정적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모든 사람들의 사회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표상, 해석, 의사소통의 사회적 유형 전체를 변형시키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한다. 고통받는 집합체도 생산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관계에 의해 정의된다. 사회 내에서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존중, 평판, 위세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에서 베버의 지위집단과 유사하다.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유형이 낮은 지위집단들(소수민족집단, 게이와 레즈비언 집단, 인종화된 집단, 성소수자들, 여성들)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저열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해악을 미치고, 사회적 평판을 얻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는 교차된 문화적 코드이다. 집단 차이는 원래 위계가 없는 문화적 변이에 불과한 것인데, 불공평한 해석들이 그것을 낮은 가치위계에 할당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저평가된 특성에 다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집단 차이는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대립이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었다고 보고, 실제로는 양자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론적으로 양자를 종합해야 하며, 실천적으로도 최선의 재분배의 정치학과 최선의 인정의 정치학을 통합하는 프로그램 정치 지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정을 자기실현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재분배와 인정을 서로 다른 정의의 영역, 즉 경제적 영역의 정의와 문화적 영역의 정의로 보아야 한다. 주체가 자아와 맺는 실제적 관계를 왜곡함으로써 자아실현을 방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인(misrecognition)이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없다. 대신 어떤 개인들과 집단들이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 때문에 그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완전한 파트너의 지위를 거부당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답해야 한다. 이렇듯 인정을 정의의 문제로 보는 것은 인정을 ‘사회 지위’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 유형이 사회행위자들의 상대적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 유형이 어떤 행위자들을 저열하고 그래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타자 또는 단순히 비가시적 존재로 구성할 때, 우리는 오인 또는 지위중속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오인은 정신적 기형도 아니고, 윤리적인 자아실현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다. 오인은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제도화된 종속관계이며, 정의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가치의 제도화된 유형이 어떤 사람을 사회생활에 동등한 자(peer)로서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에 의해 오인이 생기는 것이다. 깔보는 태도보다는 사회제도를 통해 오인이 이어진다.

따라서 ‘동등한 참여’(participation of parity)를 막는 문화적 규범에 따라 제도가 상호작용을 구조화할 때 오인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 결혼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결혼법, 싱글맘을 성적으로 무책임한 걸뱅이로 오점화하는 사회복지정책, 인종화된 사람을 범죄와 연합시키는 인종적 분류가 문제이다. 이 모든 경우는, 특정의 범주에 있는 사회적 행위자들을 규범적인(normative) 것으로 규정하고, 다른 범주에 속한 사회적 행위자들은 결함이 있는 또는 저열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절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문화적 가치 유형을 탈제도화시키고 이 유형을 동등한 참여를 조장하는 유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는 사회의 모든 (성인) 성원들이 동료로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적 배열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참여 동등을 위한 객관적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물질적 자원의 분배가 참여자들의 독립성과 ‘목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재분배의 목적은 기계적 재분배에 있다기보다는, 동등한 참여를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다음으로는 참여 동등을 위한 상호주관적 조건이 필요하다. 문화적 가치의 제도화된 유형들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동등한 존중을 표현해야만 하며, 사회적 평판을 획득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인정의 목적이 나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정받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회적 평판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동일한 존중의 상호주관적 조건이 동등한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

김리카(Kymlicka, 2007)는 지난 40년 동안에 전 세계에 걸쳐 국가-문화 소수자 관계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는 동화하고 동질화하는 국민국가 모델이 국가와 시민권의 다문화적 새 모델에 의해 도전받고 있거나, 심지어는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 가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이민집단들의 문화와 종교를 광범하게 수용하였다. 둘째 국민적 소수자(national minorities)의 영토적 자율성과 언어 권리를 수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주민들의 토지 주장과 자기통치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내적인 국내 정치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로 하여금 더욱 다문화적인 접근을 취하기를 조장하고 심지어는 압박하는 국제적 정부간 조직이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가 국가-소수자 관계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가 국가-소수자 관계를 재형성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되어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핵심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근본적인 헌신을 통해 안내되고 규제되는 국제 규범이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지구화는 두 차원을 지닌다. 우선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치담론이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상이 NGOs, 학자, 정책입안자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둘째, 특정의 국제적인 법적(유사법적) 규범에 있어 다문화주의가 약호화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소수자 권리 선언에 담겨져 있다. 지구적이고 블록적 차원에서 지난 15년간 특히 소수자 권리에 대한 국제 규범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 과정은 국민국가들의 국제체계를 떠받쳐왔던 국가 통치권, 나라됨(nationhood), 시민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들을 극적으로 재형성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불안과 저항이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김리카는 서구 민주주의 나라들의 다문화주의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집단별로 특화된 다문화정책을 취하고 있다. 모든 소수민족문화집단에게 일반적인 소수자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소수자의 특성에 맞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보다 큰 독립적인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영토에 존재했던 ‘구’ 소수자들(원주민 + 특정의 역사적 계기로 소수자가 된 사람들, 특히 국가적 소수자들)과 독립적인 국가에 이민자로서 입국이 허용된 ‘새’ 소수자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서구 민주주의 나라들은 모두 원주민, 준 국가 민족주의 집단, 이민자들 각각에 맞는 그 나름의 정책 트랙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 자유주의 다문화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러한 각각의 맞춤형 트랙을 서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라들마다 상이한 트랙을 상이한 스피드로 진행시키고 있다. 이민자, 민족 소수자들, 원주민들 모두를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묶어 이들이 자동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종속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들은 지배적 집단에 대한 역사적 종속에 모두 도전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로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은 구 소수자들의 자치권에 대한 주장을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 구 소수자들은 이민자들의 다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주장을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 소수민족 집단들 간의 다중적인 투쟁의 결과로 다문화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단일한 통일된 투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유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실천을 이해할 수 없다. 총칭적인 소수자권리(generic minority rights) 문제로 다문화주의를 보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서구 자유주의 다문화주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소수자 권리의 내용을 보면, 인정의 정치학과 권력/자원의 재분배의 정치학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상징적 인정의 정치학(정체성의 정치학) 대 재분배의 정치학(이해관계의 정치학, 계급 정치학)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설정하고, 이중 상징적 인정의 정치학만을 다문화주의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양자 모두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는 소수자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수자 자치권을 가능하게 만든 새로운 정치 단위를 가진 민족적 소수자와 원주민의 경우, 단순히 상징적 인정뿐만 아니라 재분배의 정치학도 동시에 요구한다. 이러한 집단들과 관련하여 서구 민주주의는 단일한 중압집중적인 국민-국가 모델로부터 벗어나와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하나의 언어’라는 이전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였다. 사실상 (국민적 소수자와 원주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서구 국가들은 다국민국가가 되었고, 국가의 경계 안에서 자치권을 지닌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정은 일련의 소수자와 원주민의 권리(지역 자율성, 민족 소수자의 경우 공식언어 지위 인정, 원주민에게는 관습법, 토지 주장, 자치권 인정으로 나타남)에 발현되어 있다. 하지만 이민자의 경우 변화는 덜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국가권력, 공적 서비스,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적극적 조치 정책, 정치 참여와 심의를 위한 기제, 소수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건강돌봄과 사회서비스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단순히 상징적 인정의 변화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권력이 유의미한 재분배도 포함하곤 한다. 경제적 기회, 정치적 권력, 사회적 위세도 역시 상징적 인정만큼이나 소수자에게 가용하게 만드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목적이다. 하지만 인정의 정치학과 재분배의 정치학을 어떻게 조합되는가 하는 것은 다문화주의 정책마다 다를 것이고, 집단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집단은 재분배는 잘 되었는데, 상징적 인정이 형편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원주민과 같은 어떤 집단들은, 경제적 지위도 낮고, 정치적으로도 주변화되어 있으며, 불리한 또는 침묵시키는 문화적 표상을 짊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집단들은 경제적으로는 특권을 지니는데, 문화적/정치적 배제를 경험한다. 게이와 레즈비언은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의 임금과 교육 수준을 유지하지만, 호모포비아의 대상이 된다. 아랍계 미국인들처럼 잘 정착된 이민 집단이나 종교집단은 교육과 수입에 있어 평균 이상을 누리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주변화되어 있거나 낙인찍혀 있다. 그들은 대개 공적 영역에서 비가시적인데, 그 예외는 영화에서 테러리스트나 근본주의자로 표상될 때만이다. 이탈리아의 카탈로니아인과 같은 준국가 민족 소수자의 경우 다수자와 마찬가지로의 생활수준을 누리지만, 문화적 배제를 당하고 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다수자에 의해 열등한 것으로 낙인찍혀 있다. 중앙정부가 그들의 언어와 전통을 주변화한다고 비판하면서, 지역의 자율성, 심지어는 독립을 위해 모여들었다. 결국 모든 다문화주의가 경제적 재분배

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일지라도, 다문화주의는 순전히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치적 권력과 표상의 문제가 여전히 중심적이다.

셋째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국민-만들기 간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가 순전히 적이며, 내재적으로 모순적인 이데올로기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구 내부에서 일어난 다문화주의는 국민-만들기를 대체했다기보다는 변형시켰다. 모든 서구 나라들은 포괄적인 정체성과 충성심을 주입하는 일련의 정책을 계속해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그 국민의 언어, 역사, 제도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언어 시험을 치러야 하고, 국민 미디어와 박물관에 자금을 지원하며, 국가 상징, 국기, 국가, 공휴일들을 확산시킨다. 즉 시민종교로서 민족주의를 모든 서구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 강력한 다문화주의 사회들에서마저도 이는 틀림없는 사회적 사실이다. 아무런 제약 없는 완전한 평등을 누리는 나라는 없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주의를 너무 낭만화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국민-만들기가 되도록 소수자들을 주변화하고 낙인찍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국민-만들기 정책이 메틱스(metics)와 인종적 소수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강제적으로 이민자들을 통합하지 않도록 하며, 국민 소수자와 원주민들의 자치권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그럼에도 어느 서구 민주주의도 국민-만들기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 현실은 국민-국가 만들기(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요구)와 소수자 권리(국가에 대한 소수자의 요구) 간의 복합적인 변증법이 존재한다.

2-2. 자기실현과 다문화주의: 테일러와 호네프

테일러(Taylor, 1994)는 적절한 인정은 헤겔과 같이 단순히 정치적인 요구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핵심적인 욕구로 본다. 인정에의 요구를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결합시킴으로써, 그것을 존재론적 차원으로까지 근본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존재론적 차원을 본질화하기 보다는 역사화시킨다. 전통사회에서는 인정에의 요구는 불평등한 사회위계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높은 신분에게 따라붙는 명예로운 호칭과 공적 보상이 그 예이다. 하지만 근대 세계 오게 되면서 명예는 ‘존엄’이라는 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 개념으로 쓰인다. ‘인간존재의 내재적인 존엄,’ 또는 ‘시민의 존엄’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기저에 깔린 전제는 모두가 이러한 존엄을 나눠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존엄 개념은 과거의 명예 개념을 버리는 것이므로, 다원적인 사회와 짝을 이룬다. 이는 또 동등한 인정의 형식이 민주주의 문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정의 중요성은 18세기 말엽에 출현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낭만주의 전통에 의해 수정되었다. 개인의 정체성은 내적 목소리를 지닌 그만의 독특한 진정성(authenticity)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진정성은 홀로 고립되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하면서 생긴다는 것

이다. 이러한 전통이 근대에도 이어져 내려오게 되면서, 내 안의 진정한 자신과의 접촉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기충족(self-fulfillment)과 자기 실현(self-realization)이 하나의 이상이 되었다. 계몽주의적 입장이 아닌 대항계몽주의적 입장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정의한 것이다. 따라서 보편주의적인 추상적 개인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서만 자신의 인간됨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은 독백적 존재가 아닌 대화적 존재이다. 유의미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를 통해 언어와 표현을 획득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되고, 우리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된다.

이러한 인정담론은 두 가지 차원을 지닌다. 첫째 친밀성 영역에서의 인정의 요구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유의미한 타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한다. 둘째 공적 영역에서의 인정에의 요구가 있다. 이 중에서 테일러는 공적 영역에서의 인정의 정치학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인정의 정치학은 동일성의 정치학(politics of identity)과 차이의 정치학(politics of difference)으로 나뉜다. 동일성의 정치학은 명예가 존엄으로 역사적으로 전환해 온 것을 반영한다.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존엄을 강조하는 보편주의 정치학을 낳은 것이다. 이러한 정치학의 내용은 권리와 자격의 동등화로 나타난다. 그 결과 제1시민과 제2시민의 구별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권과 선거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도 동등화가 일어나야 한다. 둘 다 해석이야 어떠하든, 동등한 시민됨이라는 원칙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달리 차이의 정치학은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тез에 기반한다. 여기서 인정받아야 할 것은,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름이 지배적인 또는 다수의 정체성에서 무시되고, 동화를 강요받아 온 것이다. 이는 진정성의 이상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차이의 인정이 보편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양자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동일성 또는 차이를 보편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점에서 ‘보편주의’에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일성의 정치학은 인간의 보편적 잠재력, 즉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역량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동일한 사실에 의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차이의 정치학은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또는 문화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의할 수 있는 보편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성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듯 보편주의에 호소하는 동일성의 정치학과 차이의 정치학은 실제로는 잦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동등한 존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람들을 차이에 둔감한 방식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즉 중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반면 차이의 정치학은 특수성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동일성의 정치학이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수자 집단의 헤게모니적 문화이며, 여기에 강제로 특수성을 꾸겨 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신이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를 부정하고 동일성 속에 맞추는 것은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형식적 평등의 이름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인간은 원자적 개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단의 성원으로서 그만의 독특한 삶을 살면서 자기실현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이는 결국 ‘보편주의’와 ‘권력’의 문제로 나타난다. 보편적인 중립적인 원리가 과연 존재하느냐, 그 원리조차도 특정 문화의 반영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이다.

결국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에 의존해서 나온 인정에의 요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하나는 ‘인간존재로서 개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특정의 문화집단들의 성원들로서의 개인들’이 지닌 특정한 필요를 인정해야 한다. 테일러는 이러한 양자의 대립에서 전자의 입장, 즉 동일성의 정치학이 지닌 절차주의적 평등성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인간은 경제학적 인간처럼 추상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후자의 입장을 전적으로 취할 수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자신의 문화적 또는 인종적 우월성을 믿어 다른 문화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문화들까지도 존중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만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 어느 정도까지 차이를 용인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처한 핵심적인 문제이다.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은 타자들과 우리가 맺는 관계에 대한 망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창조된다. 이 점에서 미드를 비롯한 실용주의 전통, 즉 유의미한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유의미한 타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허용해주어야 한다. 공적 제도가 우리가 타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의 측면들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회는 숙의 민주주의 사회(a deliberative, democratic society)인데, 왜냐하면 개인의 정체성은 부분적으로는 집합적인 대화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이 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타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호네프(Honneth, 2003)는 사회운동과 인정을 연결시키는 재분배의 정치학과 정체성의 정치학 모두를 비판한다. 구 사회운동은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의 귀속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신 사회운동은 소위 문화적 전환 이후 벌어진 문화적 소수자들의 집합적 가치 신념의 인정을 위한 투쟁에 집중한다. 호네프는 이렇게 인정 요구를 사회운동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회운동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소수자들을 침묵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하고, 인정요구를 모든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 확장시킨다. 사회적 인정의 거부, 즉 격하와 비존중을 경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고통과 부정의의 핵심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제도화된 부정의의 경험만을 특화해서는 안 되며, 부정의에 대한 모든 경

힘의 핵심을 사회인정의 철회, 즉 치욕과 비존중의 현상에 두는 인정 이론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겪는 부정의는, 사실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에서 온다. 이를 당하면, 그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것은 심각한 부정의이다. 이를 단순히, 제도적 차원의 부정의를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제도가 부정의하다는 체험을 하는 것은, 그 제도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체성의 일부를 존중하지 않고 깔아뭉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상생활이든, 제도내 생활이든, 나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험을 안겨주는 것은 모두 부정의한 것이다. 또한 재분배의 정치학이 중요시하는 ‘물질적’ 불평등도 인정의 구조틀로 설명될 수 있다. 물질적 불평등 그 자체가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적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치욕과 비존중에 시달리기 때문에 부정의한 것이다.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면, 그 사회의 물질적 불평등은 그렇게 부정의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물질적 불평등 그 자체가 부정의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호네프는 신분에 기반한 전근대사회의 질서가 제도화된 인정질서인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된 것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는 인정의 세 영역을 분화시켰다. 첫째 ‘사랑’의 영역이 있다. 전근대사회의 신분에 기반한 질서는 하나의 분리된 인정형식으로 이미 아이의 인성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돌봄과 사랑의 태도를 초보적이거나 발전시켰다. 그 결과 아이가 유기체의 무기력함에서 자기확신으로까지 발전하도록 부모가 책임을 지는 특별한 돌봄 의무를 지닌다는 인식이 발전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발맞추어, 사랑이라는 인정 형식이 비슷하게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성들 간의 관계가 점차로 경제적·사회적 압력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따라서 상호 애정의 감정을 향한 길을 열었다. 경제적·사회적 압박과 의무 때문에 남녀의 두 성이 결합한다는 것은, 상호 정서적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어느 정도 이런 경제적·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즉 생산성이 증대된 근대세계에 접어들어서야 사랑이라는 인정 형식이 하나의 지배적인 인정 형식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법’의 인정 영역이 분화되었다. 물론 신분에 기반한 중세의 사회구성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근대 사회에서도, 개인에 대한 법적 인정은 출신, 나이,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이 누리는 사회적 평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존의 위세 질서의 구조틀 안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의해 개인에게 부여된 명예나 지위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존중과 사회적 존경의 결합(모든 전통사회의 도덕적 근본)은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깨져버렸다. 시장관계가 확장되면서, 만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원리상 법적 평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즉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만인이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규범적 구조가 세워진 것이다. 이를 통해 완전히 상이한 두 인정 영역이 수립되었다. 우선 개인은 이제,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규범상으로는,

자신이 법적 인간으로서 사회의 다른 모든 성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안다. 다음으로 그는 여전히 위계화된 가치 척도(이는 물론 과거와는 다른 토대 위에 수립된 것이지만)에 자신의 사회적 존중을 맡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취’의 인정영역이 분화되었다. 법적 평등이라는 규범적 관념의 제도화와 함께, ‘개인의 업적’은 임금노동에 대한 종교적 재가(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영향 아래 주도적인 문화적 관념이 되었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이제는 출신과 소유와는 규범적 차원에서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회 안에서 개인이 마땅히 합법적으로 누려야 할 존경은 상응하는 명예코드를 가진 신분예의 소속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조직된 노동분업의 구조 안에서 개인이 이룬 성취에 의해 결정된다. 그 결과 전근대의 명예 개념은 둘로 갈라졌다. 우선 명예 개념은 민주화되었다. 법적 인간으로서 인간은 존엄과 자율성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명예 개념은 업적주의화되었다(meritocratized). ‘생산적 시민’으로서 그의 성취에 의해 사회적 존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부르주아의 핵심적 가치가 생산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물론 성취라는 인정 영역은 처음부터 의심의 여지없이 이데올로기적으로서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성취’라는 개념 자체가 부르주아 개념이이어서, 임금수준과 존중이 상호 얽혀있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영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각 영역에서의 ‘호혜적인 인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호혜적이지 않은 인정은 진정한 인정이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 시혜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분리주의나 계토화는 이미 출발부터 호혜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정이라 볼 수 없다. 호혜성은 상호주관적인 세계를 구성해가는 데 핵심적인 것으로서, 선택적 사항이 아니다. 친밀한 관계는 상호 애정과 관심의 실천으로 특징지어지며, 여기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유의 필요를 가진 개인들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법적 관계는 상호적으로 부여된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모델에 따라, 그들은 사회의 다른 모든 성원들과 동일한 자율성을 가진 법적 인간들로서 그들 자신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장이다. 느슨한 사회관계는 성취원리에 대한 일방적인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 여기에서는 직업적 지위를 향한 경쟁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원리상으로는 그들 자신을 사회에 가치 있는 능력과 талан트를 소유한 주체들로서 자신들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상호적으로 인증하는 사랑에 호소하는 친밀한 관계, 평등의 기본적 관념에 호소하는 현대 법의 인정 영역, 성취원리에 호소하는 성취의 인정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순차적인 역사적 발전과정으로 본 헤겔을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호네프트는 이런 식으로 인정을 제도와 등치시키면, 각 제도에 하나의 인정 원리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 가족이나 국가에서 법적 인정에 대한 어떤 준거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중첩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르주아 핵가족 제

도만 보더라도 그 안의 사랑의 인정원리가 갈수록 가족내 상호작용의 법적 조절에 의해 보완되어 왔다. 가정 내 폭력을 법 밖의 일로 치부하다가,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보면 이는 쉽게 이해가 된다. 성취 원리의 경우도 복지국가의 발전은 사회적 지위의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단순히 성취주의에 따른 결과로 자연시해서는 안 된다. 성취원리 그 자체만을 따르게 되면, 전혀 성취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하지만 이런 하나의 원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리들과 얹혀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킬 권리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평등의 원리가 이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호혜적 인정 원리는 한 제도 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제도 안에 필요한 것이다. 각 영역마다 나름의 독특한 인정의 형식은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은 호혜적 인정 원리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Ⅲ. 문화의 세 차원과 다문화주의의 쟁점

지금까지 나는 서구 자유주의 나라들에서 이루어진 다문화주의 논의를 소수자의 종류 및 도덕과 윤리의 대립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기존의 국민국가 영토 안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살아온 원주민, 준국가-국민 집단, 이민자 집단이 존재한다. 다문화주의 담론에 따르면, 이 소수자들은 재분배의 정치학과 인정의 정치학 모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지만 처한 현실에 따라 두 정치학의 조합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수자의 현실에 맞는 다문화주의 이론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기존의 논의는 ‘다’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였지만 실상 다‘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양 진영 모두 총체적이고 일원론적인 문화 개념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윤리로서 다문화주의를 보는 진영은 문화를 ‘전통’과 동일시하는데, 각 집단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핵심적 주장이다(Benhabib, 2002). 이에 반해 도덕으로서 다문화주의를 보는 진영은 문화를 의식적인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하는데, 모든 집단들을 초월해서 단 하나의 보편적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전자의 경우 ‘문화와 장소의 결합’을 당연시하는 인류학적 문화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문화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특정의 문화공동체가 특정의 장소에 고착되어 살면서 지역문화의 프레임워크 안에서만 의미화실천을 하는 것으로 볼 위험이 있다. 후자의 경우 문화와 장소의 결합을 떼어냈지만,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단 하나의 보편 문화를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문화 개념은 지구화하고 있는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문화 개념을 물화하고(reify)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들을 가로지르고 있고, 또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경험의 증대되면서, 의미구성은 이제 단순히 한 지역 내에서의 의미화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지구적 프레임까지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의미구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Tomlinson, 1999: 27-28). 클리포드(Clifford, 1992, 1997)는 ‘여행하는 문화’(travelling cultures)라는 개념을 통해, 문화가 이제는 고정적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이동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탈장소화된 실천들을 문화적 의미구성 요소로 간주한다. 의미는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문화들 간의 유통과 연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는 지역적 위치와 필연적으로 묶여 있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다.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도 이와 비슷하게 사람풍경(ethnoscape)이란 용어를 통해 여행자, 이주민, 피난민, 탈출자, 임시노동자, 그 외 여타의 이동중인 집단들과 개인들이 세계를 유동적이고 비규칙적인 풍경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주장한다. 바바(Bhabha, 1994) 역시 포스트식민 이주자들이 문화 간의 혼종성과 중간에 낀 공간에 거주하면서 전통적인 국민국가적 정체성과 문화 범주들을 탈안정화 내지는 해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는 기존의 서구의 다문화주의 논의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다루는 데 곤란을 겪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문화 개념을 물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두 진영이 장점이 있기는 있다. 전통으로 문화 개념을 채택하는 진영은 문화와 지역의 고착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의 다문화주의는 잘 다룬다. 앞에서 보았듯이 서구 자유주의 나라들의 경우 원주민 지역, 준국가-국민 집단 지역, 이민자 집단 타운에는 여전히 특정 소수자 문화와 지역이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데올로기로서 문화 개념을 채택하는 진영은 공적 제도 영역에서 단일한 보편적 문화를 주장할 경우(법 앞의 만인의 평등과 시장에서의 성취원리의 지배)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조차도 사람들은 물화된 문화 개념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지역에 고착되어 사는 사람들마저도 자신들만의 문화만으로 의미구성을 하지는 않으며, 공적 제도 안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보편적 문화만으로 의미구성을 하지는 않는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지구화를 통한 새 이주자들이다. 지금까지의 다문화주의 논의는 전통적으로 비이민자 나라들이었던 곳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새 이주자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새 이주자들은 길게는 2차대전 이후 탈식민화계기를 통해 식민모국으로 이주해 온 식민지인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짧게는 90년대 이후 진행된 지구화의 여파로 이주해온 이주자들을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영구이주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그래서 미래의 시민으로도 여겨지지 않았다. 2차 대전 이후의 이주자들은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문화주의 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영주자의 위치를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지구화의 계기를 통해 이주해 온 이주민들은 상대적

노출된다. 전통은 그 중간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문화를 어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로 실천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전통이나 상식으로 실천한다. 또 동일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맥락에 따라 문화를 다르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원주민, 준국가-국민 집단, 이민자 집단, 신 소수자 모두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며 문제적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수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화자원이란 어떤 특정 집단-지역에 고착된 것도 아니고 초월적 영역에 보편문화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일상의 삶에서 누구에게나 가용한 공적인 문화구조이기 때문이다.

문화를 이데올로기, 전통, 상식으로 구분한 것은 물론 분석적인 것이다. 실제 세계에서 모든 문화는 교차내지는 혼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화의 이러한 분석적 세 차원을 다문화주의와 연결하면, 그 쟁점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아래 <표 5>는 이를 간단한 표로 요약한 것이다.

〈표 5〉 문화의 세 차원과 다문화주의의 쟁점

	상식	전통	이데올로기
정치학	일상생활의 정치학: 몸과 대화. 상호이해의 정치학 vs. 상호 무관심의 정치학	실존적 차원의 인정의 정치학: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실존적 안전(자기 음식 먹고 자기 언어 말하고, 자기 옷 입고, 자기 종교 믿고 등)을 누릴 문화적 권리	재분배의 정치학과 인정의 정치학의 조합: 동일성의 정치학(노동권) ⇒ 표상의 정치학(시민권) ⇒ 차이의 정치학(적극적 조치)
지배적인 규범 원리	호혜적 인정 원리 vs. 호혜적 무관심 원리	사랑, 친밀성, 상호 애정과 관심의 실천	평등 원리와 성취 원리
주된 영역	전체 사회의 현상학적 생활세계(지하철, 목욕탕, 극장, 야구장, 학교, 일터, 술집 등)	현상학적 생활세계 중 소수민족 내부의 상호주관적인 고유의 영역(소수민족 타운, 교회/사원 등)	체계; 공적 제도 영역
다문화주의의 쟁점	몸과 말의 일상적 습속에 대한 도전	다수자의 실존적 문화(종교, 사랑/결혼/육아 문화, 주거 문화)에 대한 도전	단일한 동질적인 민족주의 신화에 대한 도전; 국가 통치권, 국민됨(nationhood), 시민권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 개념에 도전

1.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는 공적 제도 영역에서의 인정의 정치학과 재분배의 정치학의 발전에서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는 법 앞의 만인의 평등과 시장에서의 성취원리의 지배라는 근대성의 이념을 그동안 여기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었던 문화적 소수자들

에게까지 확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현재 서구 자유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원주민, 준국가-국민 집단, 이민자 집단이 모두 어느 정도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의 혜택을 보고 있다. 소수자들은 노동권을 쟁취하려는 동일성의 정치학, 시민권을 얻으려는 표상의 정치학,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차이의 정치학을 추구해 왔고,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상태이다. 그들은 체계, 즉 공적 제도 영역에서 어느 정도 재분배의 정치학과 인정의 정치학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경우 인정의 정치학은 ‘인간존재로서 개인들’의 동등한 인정을 추구한다. 이들은 이제 단일한 민족주의 신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국가 통치권, 국민됨(nationhood), 시민권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 개념이 다문화주의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체계, 즉 공적 제도 영역에서 소수자집단에 대한 차별을 대놓고 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으며, 말한다 해도 더 이상 공중의 설득력을 얻지는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면, 바로 소수자들이 다문화주의를 이데올로기(법 앞의 만인의 평등과 시장에서의 성취원리)로 사용하여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적 제도 영역에서 소수자집단의 문화를 공공연히 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최근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자집단 문화가 공적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구화를 통해 새롭게 유입된 신 소수자들은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 어느 곳에서도 신 소수자에게 바로 노동권, 시민권,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없다. 이들을 잠시 머물다 갈 이방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대와 달리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하면서까지 장기적으로 거주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 살고 있음에도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재분배의 정치학을 대놓고 추구할 수 없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인간존재로서 개인들’의 동등한 인정조차도 요구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주 자체가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의 문화집단들의 성원들로서의 개인들’의 동등한 인정은 꿈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부분의 서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의 다문화주의는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철저히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 장기적인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문화주의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 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장기적인 거주자와 잠재적 시민으로 간주하고 통합정책을 펴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신 소수자의 경우에는 후퇴한 것인가?

2. 전통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전통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주로 인정의 정치학을 독자적인 자치 지역 안에서 추구한다. 재분배의 정치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실존의 정치학, 즉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실

존적 안전(자기 음식 먹고 자기 언어 말하고, 자기 옷 입고, 자기 종교 믿고 등)을 누릴 문화적 권리를 추구한다. 그런 점에서 ‘실존적 차원의 인정의 정치학’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자치권과 문화권을 지닌 원주민과 준국가-국민 집단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다수자의 공적 영역에서의 평등 원리와 성취 원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자기 문화집단 영역 안에서 사랑, 친밀성, 상호 애정과 관심을 실천하고자 한다. 사실 대개의 경우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원주민과 준국가-국민 집단의 경우 재분배의 차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다수자 집단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원주민 자치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들 집단이 강력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다수자의 세계에 나가서도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Kymlicka, 2007: 135-167).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기 집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실존적 안온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구 이민자의 경우 사정은 조금 다르다. 이들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상대적으로 다수자에 동화되어 있으면서, 다수자와 소수자의 경계에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중간에 끼인 존재로서, 혼성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다수자가 지배하는 공적 영역에 가서는 평등 원리와 성취 원리에 따라 살다가도, 자기 문화집단에 들어오면 사랑, 친밀성, 상호 애정과 관심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러한 혼성적 전통은 다수자에게 거의 위협이 되질 않고 있다. 많은 경우 소수자의 문화가 상업화된 전통문화로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들의 전통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와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자유주의화 되었다.

하지만 신 소수자의 경우 전통으로서의 다문화주의의 혜택에서 비껴나 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이주해 왔고 아직 이주 역사가 짧기 때문에 나름의 문화 공동체를 독자적으로 수립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실존적 안온감을 추구할 공간이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 이들만을 위한 독자적인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가? 사실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기 이전에, 이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게토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게토화는 실존적 안온감을 주기는커녕 다수자 집단에 의해 우범지역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갈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공간으로서의 게토는 다수자 집단으로 하여금 분리 정책을 취하게 할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런 게토 지역에서 행해지는 비자유주의적 실천도 문제꺼리이다. 현재 이주해 오고 있는 신 소수자들은 대개가 비자유주의적 전통을 지닌 나라 출신이다. 그들은 친밀성의 영역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친밀성을 실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의 친밀성 영역에서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경향과 대립되는 것이다(Giddens, 1992). 전통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상식으로서의 다문화주의

현재 두 가지 유형의 다문화주의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다문화주의에 관련된 것이다. 일상생활은 직접적으로 재분배를 추구하지도 않으며, 또한 집단적 차이

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지도 않는다. 일상생활은 세계와 그 대상들이 현재의 모습 이외의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유보하는 ‘자연적 태도의 판단중지’(epoché of the natural attitude)가 지배하는 영역이다(Schutz, 1973: 228-229). 일상생활의 실재의 가장 큰 특징은 타자들과 공유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들과 상호작용해서 상호주관적인 실재를 호혜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은 특별한 ‘성찰적 태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상의 ‘의심의 유보’의 세계는 수많은 전형들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자연적 태도가 타자들의 자연적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타자들도 자신들의 자연적 태도와 나의 자연적 태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계가 그러하리라는 자연적 태도를 공유함으로써, 이 세계는 객관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연적 태도를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일상의 실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몸’이다. 너무나 당연시되는 몸의 외양의 공현전(co-presence) 속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말의 사용은 일상의 실재를 구성함에 있어 핵심적이다. 여기에서는 호혜적 인정 원리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말과 몸이 조금만 달라도 일상의 실재는 바로 위협을 받는다. 현재 구 이민자 집단은 이주국에서 다수자와 거의 동일한 자연적 태도를 공유하고 있다. 말의 사용은 다수자와 거의 동일하며, 몸의 외양과 매너도 수용가능한 정도의 차이로 간주되고 있다. 그만큼 더불어 산 시간이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다수자와 함께 상호주관적인 세계를 공유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주민과 준국가-국민집단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치지역을 벗어나오는 순간, 말의 사용과 몸의 외양과 매너의 차이 때문에 다수자들 사이에서 바로 ‘성찰적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찰적 태도는 대도시의 삶에서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都市는 호혜적 무관심을 실천하는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계약적 무관심에 관한 에티켓과 그것이 제공하는 효과적인 프라이버시는, 물론 사회에 따라 그리고 그 사회에서도 하위문화에 따라 서로 다양하다(Goffman, 1959: 230).

문제는 또 다시 신 소수자이다. 이들에게는 호혜적 인정과 호혜적 무관심 모두가 쉽지 않다. 다수자와 호혜적 인정을 주고받으려면 말과 몸이 너무나 당연시될 정도로 다수자와 유사해야 한다. 하지만 신 소수자들은 대개가 거주국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며, 몸의 외양도 다수자와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수자와 호혜적 인정을 주고받기 어렵다. 그 결과 다수자와 상호주관적 실재를 공동으로 생산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계토화되어 살아갈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호혜적 무관심을 서로 실천하기도 어렵다. 자연적 태도를 깨트릴 정도로 다른 말과 몸은 익명적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호혜적 무관심의 원리를 위협한다. 사실 신 소수자에게는 일부러 보내는 계약적 무관심이 필요하다. 이렇듯 상호이해의 정치학 대신 상호 무관심의 정치학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도시의 익명적 세팅에서 요구되는 에티켓이다. 상대방에게 일일이 관심을

보이다가는, 대도시에서의 삶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욕탕에서 만난 외국인을 대할 때, 우리는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없는 국외자인 것처럼, 무관심해야 하며, 그도 역시 우리를 무관심한 태도로 보아야 한다. 도시의 모든 익명적인 공적 공간은 사실 호혜적인 무관심을 실천하는 장소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수자들은 이들의 말하는 방식을 조롱하고, 그들의 몸의 외양과 매너를 평가절하한다. 따라서 일상의 삶에서 비인정, 수모, 굴욕을 당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일상의 매일 매일의 삶이 고통의 연속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회운동을 조직화할 힘조차 없는 소수자이다. 예를 들어 일상의 삶에서 고통을 받아 왔던 여성의 경우, 조직화된 사회운동을 통해 일상의 삶의 질곡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운동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자에게 상식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IV. 맺음말

나는 지금까지 서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지형과 쟁점을 살펴보고, 보다 포괄적인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을 제출하였다. 나는 이러한 이론적 패러다임이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를 논의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과 달리 원주민, 준국가-국민 집단, 이민자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탈북자 등과 같은 지구화와 함께 새로 이주해오는 신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서구의 다문화주의가 발전시켜온 재분배의 정치학과 인정의 정치학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언젠가 재분배의 정치학과 인정의 정치학이 한국사회의 큰 쟁점이 될 날이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이들이 처한 현실은 말과 몸으로 대표되는 일상생활의 정치학을 절실히 요구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공적인 제도 영역 안에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들만의 실존적으로 안온한 공간을 창출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직되지 못한 소수자를 위한 다문화주의는 사실 미답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경태. 2008.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후마니타스.
-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 최종렬. 2004. “계몽주의, 대항계몽주의, 반계몽주의.” 『사회와 이론』. 5(2): 123-181.
- 최종렬. 2008.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류석춘 · 장미혜 · 전상인 · 정병은 · 최우영 · 최종렬 공저.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백산출판사. pp. 17-72.
- Appadurai, Arjun.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M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habha, Homi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Benhabib, Seyla. 2002. *The Claims of Culture: Equality and Diversity in the Global Er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lifford, James. 1992. “Travelling Cultures.” pp. 96-116 in Grossberg, Larence, Cary Nelson, and Paula Treichler (eds.).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 Clifford, James. 1997.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raser, Nancy. 2003.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Identity Politics: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pp. 7-109 in Fraser, Nancy and Axel Honneth.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London: Verso.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Giddens, Anthony.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nneth, Axel. 2003. “Redistribution as Recognition: A Response to Nancy Fraser.” pp. 110-197 pp. 7-109 in Fraser, Nancy and Axel Honneth.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London: Verso.
- Kivisto, Peter. 2002. *Multiculturalism in a Global Society*. Malden, MA: Blackwell.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 Kymlicka, Will. 2007. *Multicultural Odysseys: Navigating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s of Diver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ymlicka, Will and Baogang He (eds.). 2005. *Multiculturalism in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ekh, Bhikhu. 2006.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2nd Ed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Taylor, Charles. 1994.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utz, Alfred. 1973. "On Multiple Realities." pp. 207-259 in *Collected Papers 1: The Problem of Social Reality*. Netherlands: Martinus Nijhoff/The Hague.

Swidler, Ann. 1986.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273-286.

Swidler, Ann. 2001. *Talk of Love: How Culture Matt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omlinson, John. 1999. *Globalization and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제 2 세션

사회통합적 다문화정책

주제 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 및 정책과제

이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2 진정한 통합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민여성 문화교육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주제 3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 및 정책과제

이 선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 차

- 1. 들어가며
- 2. 방법론
- 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경험
- 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 5. 결론 및 정책과제

1. 들어가며

국경을 횡단하는 국제이주는 전지구화시대에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변화하는 경제·사회 인구학적 상황에 맞추어 외국인을 노동자로 유입하거나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국제이주보고서 2003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03)」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35명 중 1명은 국제이주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체류외국인이 1990년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8월말 현재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법무부 2007; 세계일보 2007.4.26).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치수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 결혼이민자는 전체 체류외국인들 중 약 10.5%를 차지하는 104,74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단일민족’의 순혈주의 담론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체류외국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2006년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빈부격차별시정위원회 2006. 4.26). 이주자들을 위한 이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긴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나 학계 모두 노동이주보다는 결혼이민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외국노동자와 같이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주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정주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도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절대수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현재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는 97,236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중 88.1%로 나타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것을 보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책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우선으로 하여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2006년도 중앙정부의 다문화사회 정착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에 주목하여 인권, 문화, 복지, 가족 등에 관련된 영역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고자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 사회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그 사회의 보편적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Marshall 1950).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문순영 2007). 이렇게 법률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설동훈외(2005)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현재 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문화, 풍습, 가치, 언어를 배우면서 이곳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사회구성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보호(social care)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권리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에 위한 사회서비스는 일회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급변하는 탈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자율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경험을 생애주기별로 파악하고 그 요구를 조사하여,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방법론

가. 조사대상자 및 사례연구 지역

2000년도 중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가족의 중심으로 두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은 어려움과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경제·사회적 위치에 대한 논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더불어 진행되어 왔다. 이렇다 보니 여성결혼이민자와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배우자에 관한 연구는 오히려 미흡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 자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이 여성들의 경험만이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인 남성의 경험까지 이해하고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우선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서울과 전라남도의 나주와 영암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서울은 도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진 곳으로 2007년 현재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23.2%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24.9% 다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많다(통계청 2008). 전라남도는 같은 시기 여성결혼이민자가 전체의 4.8%가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2008년 농림업 종사 남성과의 혼인 건수 비율이 33.9%로 전국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서 농촌지역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 문제를 드러내는 데 적절한 곳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더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결혼이민자 증가추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의 기관의 협조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전라남도의 나주와 영암을 그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피면접자는 부부로서 자녀가 있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총 28쌍으로 서울 13쌍, 전라남도 15쌍을 면접하였으며, 중앙건강가족지원센터가 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면접자를 섭외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었다.³⁾

나. 조사내용

심층 면접을 위한 조사내용은 국내외 관련문헌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전문가 워크숍과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수렴하여 생애주기별로 기본 영역을 수립하였다. 기본 영역은 ①일반적 사항, ②입국초기-가족형성기, ③자녀 출산 및 양육기, ④노동시장(재)진입기으로 구분하였다(아래 표 참조).

첫째, 일반사항에서는 가족관계 및 가구소득, 입국시기 등을 질문하였고, 둘째, 입국초기-가족형성기에는 한국에서 와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기관 등을 물었다. 셋째,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임신 전·후에 필요한 서비스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질문하였다. 넷째, 노동시장(재)진입기에는 자녀의 취학 후에 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3)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강북정담장님,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김정화기획부장님, 영암이주여성센터의 송영희센터장님, 나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손경희선생님 등이 본 조사에 도움을 주셨다.

〈표 1〉 심층면접내용의 기본 영역⁴⁾

일반사항	본인(남편)연령
	자녀의 연령
	함께 거주하는 사람
	결혼연도
	한국입국시기
	한국거주기간
	남편(부인)을 만나게 된 동기
	본국(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의 가족상황
	가구소득 및 주택소유형태
입국초기-가족형성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어려움
	한국 도착했을 때 가장 필요한 서비스(도움)
	한국에서 처음 받아본 서비스(도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해당기관을 어떻게 알게 된 경위
	한국어를 처음 배운 곳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임신 전·후에 필요한 서비스
	출산이후, 자녀양육시기에 필요한 서비스
	자녀 취학 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노동시장(재)진입기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경험

가.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내용

1) 전체 사회서비스 내용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경험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입국하여 현재 까지 경험한 사회서비스의 전체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역별 차이와 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듯이 입국초기에 외국인 등록 등 출입국관련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한국어와 예절 교육을 다양한 기관을 통해 경험하며, 임신·출산기에 보건소와 방문서비스를 통해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입국 초기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전담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좀 더 체계적으로 서

4) 본 질문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통으로 질문하였으며, 여성에게 해당되는 질문은 괄호 안에 따로 표시하였다.

비스를 경험하지만, 대체로 임신·출산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경험한다.

사회서비스 내용은 한국어교육, 산전·후 관리와 아동양육도우미 서비스가 보편적이며, 아동양육기에는 보육비 지원과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다. 직업서비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양하지는 않으며, 전(全)단계에 걸쳐 한국문화체험, 여가활동프로그램, 상담서비스,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원기관으로는 교회, 동사무소, 구청, 지자체, 학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소, 복지관이 해당되며, 전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지원방법은 초기에는 정보제공과 관련기관 안내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와 집합교육의 형태 등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임신·출산기와 아동양육기에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많고, 점차 기관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표 2〉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내용(전체)

단계	생애주기		경험한 사회서비스	목적	지원기관	지원방법
1단계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에 대한 예절	가족간 의사소통,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증진, 사회참여	교회, 복지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동사무소, 지자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집합교육
			행정적 도움 : 국적취득, 비자	외국인 등록, 국적취득 절차 이해	출입국관리사무 소	직접방문
2단계	임신 · 출산기		산전관리 : 보건소(검진, 철분제나 영양제, 산모교육)	산모 및 태아의 건강관리	보건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기관방문, 방문서비스
			예방접종 서비스, 영양제 제공, 육아정보제공	다문화가족 모자의 건강증진		
			산후관리 : 보건소(육아교육), 행정기관(물품, 양육비 지원), 센터(산모도우미 서비스 연결), 선 경험자와 연결	다문화가족 출산후 보살핌 노동의 제공		
			산후돌보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3단계	아동 양육기	취 학전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다문화가정의 자녀 보육지원	구청	
			아동양육도우미	한국어 능력이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단계	생애주기		경험한 사회서비스	목적	지원기관	지원방법
				부족한 결혼이민여성과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 양육방법 교육, 상담	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취학후	문화체험 및 역사탐방 기회 제공	부족한 문화체험기회 제공 및 역사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야외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학교	학교, 기관방문
			상담 및 부모교육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복지관	기관방문
4단계	노동시장 (재)진 입기		직업교육 : 정보화교육, 통역사 양성교육, 원어민교사 양성교육, 아이돌보미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구청	기관방문
			직업소개			기관방문
전(全)단계			음식, 전통문화(예절, 무용 등), 축제 참여, 유적지 탐방	교양 함양	교회, 복지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지자체	집합교육
			취미생활 : 노래, 종이접기, 악세사리 만들기 등	여가활용		방문서비스, 기관방문
			가족문제 상담, 부부교육, 캠프 참여	가족생활적응		
					행정적 도움 : 국적취득, 비자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취득

2) 지역별 차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경험한 사회서비스를 서울과 전남지역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⁵⁾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장 많이 경험한

5) 남편의 경우 아내가 경험한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서울(13명)과 전남(15명)의 여성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남편의 인터뷰 내용은 참고로 하였다.

사회서비스로는 입국초기의 ‘한국어교육’과 취학전·후 아동양육기의 ‘방문아동양육지원’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건소의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 한국문화이해교육이나 현장체험을 비교적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다른 생애주기 보다도 아동양육기에 보육비 지원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등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하여 경험한 사회서비스(서울지역)

단계	생애주기		사회서비스(횟수)
1단계	입국초기-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교육(8)/ 집합교육, 방문교육 포함
2단계	임신·출산기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4)/보건소 찾아가는 임신,출산지원(2) 출산 지원 수당(1)
3단계	아동양육기	취학전	방문아동양육지원(8) 아동양육지원(3)/보육비지원 이주여성 자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행사(2)/ 역사탐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1)/ 한글
		취학후	방문아동양육지원(6)/ 학습도우미, 자녀양육 상담, 학교생활지도 등 방과 후 프로그램(3)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취업역량강화(2) -컴퓨터 아동양육도우미 교육(1)
전(全)단계			한국문화이해교육(4) 다문화체험(3)/현장체험 부모교육(2) 복지관 아동 학습 프로그램(2) 출입국 관리소 이민자 모임(1) 남편교육(1) 통역에 관한 강의(1) 부부상담서비스(1) 기타-- 종교단체(5)/교회, 종교*(한글, 생활예절, 임신출산지원, 아기학교) 일본인회(1)

* 특정종교를 통하여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 동안 교회에서 한글이나 생활예절 등을 배움

전남지역의 경우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입국초기의 ‘한국어교육’과 전단계에 걸쳐서 축제, 캠프, 탐방, 요리교실 등 ‘다문화체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기에 보건소에서의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을 비교적 많이 받았고, 남편교육과 방문아동양육지원, 한국문화이해교육, 컴퓨터교육의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하여 경험한 사회서비스(전남지역)

단계	생애주기		사회서비스(횟수)
1단계	입국초기-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교육(14)/방문, 집합
2단계	임신·출산기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9)/보건소 육아양육교육(2) 출산 지원 수당(1) 찾아가는 임신, 출산지원(1)/산모도우미
3단계	아동양육기	취학전	방문아동양육지원(4) 아동양육비 지원(2)
		취학후	방문아동양육지원(6) 찾아가는 서비스(1) 방과 후 학교(1)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취업역량강화(4) -컴퓨터 원어민 강사 교육(1)
전(全)단계			다문화체험(12)/축제, 캠프, 도자기, 유적지, 요리 한국문화이해교육(6)/생활예절 등 남편교육(7) 자녀양육 교육(1) 상담서비스(1) 기타-- 종교(1)/ 입국 초 정서지원

서울과 전남지역을 비교해 볼 때, 입국 초기에 한국어 교육의 경우 전남지역은 집합교육 또는 방문을 통하여 대부분의 가정이 경험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기회와 서비스기관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입국 초기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다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남지역의 경우 거주기간이 서울의 여성결혼이민자들보다 짧은 점을 볼 때 최근에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서비스가 확대되어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임신·출산기에 있어서도 전남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보건소를 이용하여 영양제나 예방접종 서비스를 훨씬 많이 경험하였다. 전남 지역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全)단계에 있어서도 전남지역이 축제, 가족캠프, 유적지 탐방 등 다문화체험행사나 남편교육의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나 군단위로 단체 행사나 남편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학 전후를 포함한 아동양육기에 있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한 것은, 서울지역이 농촌지역 보다 서비스기관 이용과 정보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남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연령이 낮아 임신·출산기 서비스에 비해 아동양육기 서비스는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부부간 차이

<표 5>과 <표 6>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경험한 서비스 내용을 서울·전남의 여성(28명)과 서울·전남의 남성(28명)으로 구분하여 서비스의 합을 나타내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응답한 내용 중 가장 많이 경험한 사회서비스로는, 입국초기에 ‘한국어교육’과 전(全)단계를 거쳐 생활예절 등 ‘한국문화이해교육’이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임신·출산기에 보건소에서 ‘영양제 지원과 예방접종’을 받은 것, 아동양육기에 ‘방문아동양육지원’을 받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컴퓨터교육’, ‘아동양육비지원’의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여성)

단계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1단계	입국초기－ 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교육(22)
2단계	임신·출산기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13)/보건소 찾아가는 임신,출산지원(3) 육아 양육 교육(2) 출산 지원 수당(1)
3단계	아동 양육기	취 학전	방문아동양육지원(12) 아동양육지원(5)/보육비지원 이주여성자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행사(2)/ 역사탐방 찾아가는 서비스(1)/한글
		취 학후	방문아동양육지원(12)/ 학습도우미, 자녀양육 상담, 학교생활지도 방과 후 학교(4) 찾아가는 서비스(1)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취업역량강화(6)－컴퓨터 아동양육도우미 교육(1) 원어민 강사 교육(1)
전(全)단계			한국문화이해교육(19) 다문화체험(15)/현장체험 복지관 아동 학습 프로그램(2) 출입국 관리소 이민자 모임(1) 남편교육(1) 부부상담(1) 기타－－－ 종교단체(5)/교회, 통일교(한글, 생활예절, 임신출산지원, 아기학교) 일본인회(1)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접 경험한 서비스와 그들의 배우자가 인지한 서비스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들은 아내가 경험한 서비스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 경험도가 낮은 요인이 된다. 사회서비스 기관에 방문한 경험이 없거나, 아내가 혼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6〉 배우자(및 본인)가 경험한 사회서비스(남성)

단계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1단계	입국초기-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 교육(20)
2단계	임신·출산기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7)/보건소 찾아가는 임신, 출산지원(3) 출산 지원 수당(1)
3단계	아동양육기	취학전	방문아동양육지원(9) 아동교육지원(3)/무상지원
		취학후	방문아동양육지원(4)/ 학습도우미 방과 후 학교(2)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취업역량강화(5) - 컴퓨터
전(全)단계			한국문화이해 교육(9) 남편교육(7) 부모교육(3) 부부상담서비스(1) 통역에 관한 강의(1) 문화체험(1)/비빔밥 콘서트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1) 출입국 관리소(1)/대화방 종교(1)/ 입국 초 정서지원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중 한국어 교육, 보건소의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 방문아동양육지원, 문화이해교육 등 대다수의 여성이 많이 경험한 서비스에서 부부간의 응답 차이가 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상호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상대방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또한 좀 더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상대방의 일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남편들이 직접 경험한 ‘남편교육’ 부분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 남지역의 남편의 경우 도나 군, 읍 등에서 국제결혼을 한 남편을 대상으로 주최한 특강이나 교육을 받으러 간 경험들이 있었으며,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아 여성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남편교육에 대해 ‘남편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잘 모르고 또한 잘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다문화체험행사 중 비빔밥 콘서트는 다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비빔밥을 먹으면서 음악을 듣는 행사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였는데, 아내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남편은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강의식 교육보다는 감동을 줄 수 있고 가족 또는 부부가 참여하는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보인다.

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가.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입국 초기의 결혼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요구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개선에 대한 요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의 배우자가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같게 혹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은 각자가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사고되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어떤 요구가 더 중요하게 의미화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고민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이주 초기의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 초기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존재가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경우 언어의 취약함 등으로 인해 이후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기회 자체가 차단될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점이다. 이에 대한 요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들에게서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언어의 장벽 역시 이주 초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지점 중 하나이다. 가족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나누고 새로운 한국사회의 일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중 한국어 교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의 확충,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 강사의 자질 개선, 통역 서비스의 제공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주 초기의 국제결혼가정에서 가장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충돌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충돌을 줄이고 한국문화에 좀 더 쉽게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서비스들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데, 대개 한국의 음식과 전통들, 명절, 손윗사람에 대한 예의범절 등을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알리고 교육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습득할 것만을 강조함으로써 상호적인 방식의 문화 교류를 어렵게 한다. 특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한 한국사회의 문화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식의 문화교육이 행해질 필요가 있기에, 이런 점에서 남편들을 대상으로 아내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면접에서도 아내들은 남편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남편

들 역시 아내와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아내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가정이 겪게 되는 특유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이라는 지리적 접근성의 취약함이다. 그 외에 농번기 등 농촌 특유의 노동 사이클로 인한 문제, 노인들이 많아 양육보조자 없이 육아를 여성 1인이 전담해야 하는 어려움, 정보 접근도의 취약함 등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가족들도 충분히 이용할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들이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지리적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화 교육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국제결혼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상담하거나 교육받기를 원한다는 요구가 여성결혼이민자들과 남편들의 면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주 초기 국제결혼가정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주 경험자와의 연계가 제공된다면 많은 결혼이민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입국초기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여 여성결혼이민자 혼자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이에 현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국의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나. 임신 및 출산 전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 직접적인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다. 더구나 결혼이민여성들은 낯선 타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므로 더욱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임신, 출산 전후 사회서비스들이 이러한 결혼이민여성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을 전후한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꼽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언어의 문제이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자국의 언어로 된 자료를 공공기관 등에 폭넓게 비치하고 태교, 산전 운동, 출산 후 아이 양육에 대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 입덧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위해 임신 기간 중 자국의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기간을 거쳐 출산을 하고 나서는 좀 더 실질적인 문제들이 대두하게 된다. 산모는 적절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아이를 위한 이유식, 예방접종 등에 대한 정보와 서

비스들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산후조리의 경우 보통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타국에서 이주해 온 결혼이민여성들이 친정의 도움을 받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며 시어머니는 연로하신 경우가 많아 마땅히 산후조리를 해줄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출산을 전후로 알아야 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산후조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필요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문 산후도우미 제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산후도우미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제도의 도입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의 육아와 관련해서는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보와 언어의 부족으로 인해 발달시기에 맞게 아이 양육법을 배우거나,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엄마에게 지워지는 현실에서, 아직 의사소통에 능숙하지 못하고 한국의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정보의 부족이나 이해도의 낮음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남편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다. 남편들은 자신이 겪는 불편함 외에도 아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내 역시 혼자서도 자유롭게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통적으로 통역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덧붙여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고압적인 태도나 낙후된 시설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인 기대감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더 많은 결혼이민여성들과 국제결혼가정의 구성원들이 산전, 산후의 사회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 자녀양육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노동과 임금을 받아오는 공적인 노동이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 대개의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사적인 영역의 노동을 전담하며, 특히 아이의 양육과 교육의 부분에서 일차적인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 부족을 절감하게 되는데, 따라서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회서비스가 보다 충분히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선 아이의 신체발달단계에 따른 식단이나 운동요법, 생활 습관 교육 등 양육에 관한 정보와 한국의 보육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많은 피면접자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스템과 각종 육아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자녀양육기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의 언어구사능력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보통 이 시기에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언어를 익히기 시작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여성은 자신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아이의 언어 습득 모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아이의 한국어 발음이나 언어 구사 능력이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는 방문학습지원 서비스와 아동양육도우미 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부족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보충하고 아이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학습지원 서비스의 경우 특히 한국어 학습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반면 기간이 5개월로 짧아 기간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아동양육서비스 역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연령을 구분하는 서비스, 융통성 있는 시간 활용,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서비스의 제공 등 개선되기를 바라는 다양한 요청사항들이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수혜 당사자를 대상으로 보완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언어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선택하는 대안은 아이를 보육 시설에 보내는 것이다. 보육 시설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배우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 단독으로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라도 보육 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의 저출산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결혼이민여성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사고되어야 한다.

한편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아이의 학습과 언어 발달 능력에 대한 우려와 서비스 지원 확충 요구는 모든 지역의 피면접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피면접자들을 중심으로 지리적 취약성의 문제와 농번기 등 농촌의 상황을 배려하는 서비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현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와 시설들은 보통 도시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들에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지역적 차이를 배려하고, 보다 많은 결혼이민자들에게 폭넓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가족의 삶의 방식을 고려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제결혼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

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가족 내에서 이러한 역사 체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역사탐방이나 문화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스스로가 느끼는 자존감의 향상 외에도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아동취학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자녀취학기에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막연한 불안감과 실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에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서비스와 멘토링 제도 등의 도입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요구는 자녀의 교육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아이의 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자녀에 대한 방문 학습 서비스와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강한 나라이며 교육을 시키는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높은 교육열을 가지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아 자녀의 취학에 따른 교육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 많은 국제결혼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보충 교육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초기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경우 교육과정이 심화될수록 그 격차를 줄이기가 어렵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자칫 집단적인 저학력 집단을 구성할지도 모를 문제를 예비하기 위해서라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의 교육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실제 면접에서도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구사능력으로 인해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지 못하거나,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여 준비물을 챙겨주지 못하는 일 등을 겪었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아이의 학습을 제대로 지도하리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연령에 맞게 학부모가 알아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교육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아동취학기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여기에는 엄마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자녀들의 언어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한국의 교육 현실에 어두운 엄마의 영향으로 자녀의 학업성취

도가 뒤쳐질 것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구사능력의 습득은 그 시기별로 목적과 의미를 달리 할 뿐, 이주의 전 시기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문제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각 시기별 목적에 걸맞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의 모색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덧붙여 학업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결혼이민자들이 지도하기 어려운 한국의 예의범절이나, 아이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기를 원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이 언제나 수혜자의 위치에만 놓이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정은 이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과 타 국가에 대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들이 한국사회의 불완전한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다양한 자원을 가진 새로운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어색함과 편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언어를 구사하고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가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결혼이민자 가족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공동체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 노동시장 (재)진입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직업교육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구사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때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조할 수 있는 각국 언어별 보조강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자원봉사자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다양한 시스템을 익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접근성 있는 공간에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과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는 단기적인 허드렛일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숙련기술이 없는 여성들은 취업에 앞서 직업교육을 받기를 원하게 된다. 그런데 전문적인 교육은 자주 개설되지 않거나 교육비가 비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남편들은 아내의 취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

한 결혼이민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과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많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이 양육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이 그러하듯 여성결혼이민자들 역시 아이 양육의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숙련 인력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궁극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노동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정책과제

아래에서는 결론으로 위에서 살펴 본 여성결혼이민자들 및 그 배우자들의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되거나 심화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생애주기별로 제안하고자 한다.

가. 입국초기-가족형성기

1) 사전 정보 제공 및 교육의 확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초기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입국 전에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초기적응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을 시작으로 국제결혼 희망자에게 현지에서 사전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좀 더 많은 예산 지원과 이 사업을 3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외의 관련 국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입국 후 가족형성 단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나 부부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의 목적을 외국여성의 한국사회이해에만 두기 보다는 부부의 상호문화이해에 초점을 두어 이제는 좀 더 발전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결과에서도 가족의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언어를 배우려는 배우자나 가족의 태도가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해 보인다.

2) 한국생활안내 도우미제도 체계화

남편과의 인터뷰에서 입국초기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르쳐 주는데 혼자 힘으로는 매우 힘들었음을 발견하였다. 대부분 이들의 직장생활의 불안정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남편의 역할이 부담이 되고 갈등적인 상황

이 될 수 있으며, 여성 입장에서라도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입국초기에 한국생활을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좀 더 체계화하고 보편화된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멘토 결연 맺기 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3) 행정적 도움의 확대

여성결혼이민자가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입국초기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여 혼자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초기의 행정 절차 모두를 전적으로 그 배우자인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적취득 신청을 할 때 그 배우자 역시 행정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이를 알기 쉽게 영상물 등을 통한 교육방법도 제안되었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국적신청과 배우자의 친인척 초청 시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현재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국의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표 7〉 입국초기-가족형성기의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1단계	입국초기-가족형성기	사전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한국어 교육	- 자국 언어로 한국어 교육 -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
			통역서비스 제공	- 이주초기 한국어습득이전까지 출신국의 언어로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
			한국문화 및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이해	- 결혼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부부대상 교육 확대 - 남편대상 교육의 다양화
			상담 및 부부교육	- 국제결혼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한국생활 안내 도우미 제도 활성화	멘토링제도 활성화	- 이미 결혼이주를 경험한 여성과의 연결로 일상생활상의 문제 해결
		행정적 도움의 확대	국적취득 및 초청	- 영상홍보물 교육 - 국적취득시 상담의 내실화 - 서울대사관 방문 절차 간소화(지방거주시) - 배우자 가족 초청시 절차 간소화 및 기간 연장

나. 임신 · 출산전후

1) 임신 및 출산지원 강화

임신·출산을 전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이 정보부족과 언어문제이다. 이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동양육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관련 통역 서비스도 강화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후조리에 있어서도 산후도우미제도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기야 말로 고향의 가족과 음식 등이 가장 그리운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친정가족 초청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수적인 한계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정가족의 방문기간 동안에 질병 등 위기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어려울 때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다. 차라리 국내 거주하는 같은 국가 출신자들로 하여금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외국인 상점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등에서 이러한 상점이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2) 의료기관의 다문화화 추진

일부 국립의료원과 지역의 의료기관이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기 전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등을 지정,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립기관은 물론 외국인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에게 병원평가제 등에서 다문화 인센티브 점수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표 8〉 임신 및 출산 전후의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2단계	임신 및 출산 전후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임신 전과 임신 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서비스에 대한 출신국의 언어로 된 안내책자의 발부 - 상담 및 교육 - 외국인 상점이나 편의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자국 음식지원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산후관리: 산후도우미파견 또는 산후조리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관리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확대 - 농촌지역의 특성상 방문하는 산후도우미보다는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나타남 - 이주초기 한국어습득이전까지 출신국의 언어로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
			예방접종 및 육아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연령대별 육아정보(이유식, 운동법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 - 통역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다문화화 추진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 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지정 모색 - 병원평가제에서 다문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

다. 아동양육기: 아동취학 전·후기

1) 자녀양육지원 강화

현재 아동양육지원이 5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응답자들의 지적이 나타나고 있어, 지원기간의 연장이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역에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도 원활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양육지원을 받을 시 나타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바로 옆 가까운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지라도 이렇게 못하고, 먼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구역의 구분 없이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현재 방문지도사의 아동양육지원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단지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서비스 기간을 몇 개월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이 후의 활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가정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자고 한다면, 담당인력의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결혼이민자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 사회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혼이민가족의 경우 확대가족에 대한 의무가 많거나 경제,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상태가 많아 사회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에 대한 가족 간의 역할 분담, 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서비스의 개선이 요청된다.

2) 아동교육 및 다문화 교육지원 강화

자녀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열성이 것이 사실이다.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도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걱정을 보이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엄마들 보다는 교육에 대한 정보나 한국의 학교체계 등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도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지 자녀들 교육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을 한 교육에 대한 요구도 피면접자들 사이에 제시되었다.

한국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사회의 학부모 모임에는 결코 적응하기 어려움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의 배경에는, 첫째는, 교육환경의 과도한 경쟁심리와 학부모의 낮은 의식수준은 다문화를 수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사교육을 필수로 알고 정보를 나누지 않으려하거나 자신의 자녀교육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다문화에는 관심이 없는 한국부모의 경우 외국인 엄마와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일반 부모 대상의 다문화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의 예의범절과 자녀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활성화, 그리고 자녀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책 읽어 주는 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된다. 자녀의 학교에 중요한 것이 이들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지 않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하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의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9〉 아동양육기 및 취학기의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3단계	자녀 양육기	아동양육 지원 강화	방문아동양육도우미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기간 연장 및 시간 조정- 행정구역 구분 없이 가까운 곳 이용가능토록 조정
			사례관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아동양육도우미 서비스 이후 이용가능한 서비스 안내와 자녀양육에 대한 가정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 담당인력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
			보육시설이용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아이의 성장에 따른 육아정보 제공 강화- 농촌지역 농번기 보육시설 확대 운영
		아동교육 및 다문화공유 지원 강화	취학기의 아동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 및 예절 교육 강화- 책 읽어주는 서비스 확대- 불편한 통학환경 개선(농촌)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의 프로그램 활성화 -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 : 부모, 아동, 멘토링제도 강화
			다문화공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면 홍보 - 다양한 문화자원 유지를 위한 지원: 각국별 자녀 모임 지원 등 - 일반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확대

라. 노동시장(재)진입기

1) 사회참여 통로의 확대와 의미부여

면담 대상자 중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이 되고 한국어 실력이 되는 결혼이민자들 경우 현재 센터나 복지관의 아동양육지도사, 방과후지도사, 학습지 지도사, 상담 통역사, 문화강사 등 자원봉사자 형태나 준전문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교실 등 교육 활동에 열심히 참여함은 물론 가족의 협조가 뒷받침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새로 이주한 결혼이민자가족을 방문하여 한글교육이나 자녀양육을 지도하게 됨으로써 사회참여의 의미도 찾고 급여수당이 가게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서비스의 일자리창출로도 볼 수 있지만, 결혼이민자들 경우는 본국 출신의 이민자의 적응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므로 보람을 갖게 되고 효과적이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나 멘토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가족 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다만, 이러한 역할이 쌍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사 대상의 정기적인 수퍼비전이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센터 담당자가 이들 준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청된다.

2)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방안

여성결혼이민자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중언어 전문가로 교육,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일부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상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다문화 전문가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결혼이민자 적성에 맞는 취업 교육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필요에 비해 취업가능한 일이 적어서 저임금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정규직 취업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노동시장 (재)진입기의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3단계	노동시장(재)진입기	사회참여통로의 확대	취업교육의 질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교육시 각국 언어별 보조강사 배치 - 자원봉사에 의지하고 있는 강사진의 전문성 제고 - 프로그램 수준 체계화 - 취업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통한 고용촉진지원제도 모색 - 수퍼비전의 제공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방안	적성에 맞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취업교육 개발 - 이중언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

마. 전(全)단계

1) 한국어교육의 다양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면접 내용을 이해할 정도로 비교적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어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하였다. 잘 하면서도 ‘부족하게 느끼는’ 점이 개인적인 성격이라기 보다는 가족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어 학습을 통해 노력한 만큼 주변에서 인정과 격려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언어습득이나 마스터는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아마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기 보다는 초급 단계의 교육에 몇 번 참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더욱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초급이나 중급 교육과정 후의 고급과정의 개설이 중요해 보이며, 단계적 교육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개별학습에 대한 안내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문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행정부서, 담당자 대상의 교육 확대

사전조사에서도 보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서 등의 담당자들이 불친절하거나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담당자 외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에 좀 더 경험이 많고 성의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희망하였다. 행정부서나 관련기관의 담당자 대상의 교육이 미흡한 실정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표 11〉 전(全)단계의 정책과제

단계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전(全) 단계	한국어 교육의 다양화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연장 - 강사진의 질 향상 - 체계화된 한글 교육 - 방문학습 기회 제공확대
	행정부서, 담당자 대상의 교육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서의 관련 담당자의 다문화교육 확대 및 강화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다문화교육 강화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철희·김미옥(2000), 「여성장애인의 고용 안정 및 확대를 위한 구직화 과정 분석 연구」, 「재활복지」, Vol. 제4호(1), pp. 1-31.
- 강혜규·노대명·박세경·강병구·이상원·조원일·이병화(2007),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주요 사회 서비스 수요 추계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 김가을(2007), 『비취업 여성의 고용상태 변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오남(2007),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 『사회복지』, 겨울, 통권 제175호, pp. 22-39.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장혜경·김혜영·양명희·최은영(2007),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전제들」,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대위원회, pp. 13-41.
- 김혜원·안상훈·조명훈(2006),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희선(2007),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분석」, 『민족연구』, 31, pp 50-85.
- 나영선·이수경(2000), 『여성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교육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노대명 외(2005),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연구 발전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

- 적 연구」, 『여성연구』 1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현주·강민정 외(2007),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법무부(2008),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총괄 분석』, 인수위 보고자료.
- 양옥경·김연수(2007), 『다문화가족』, 서울시정정책연구원.
- 엄한진(2006), 「전 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 논의」,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대위원회, pp 45-75. 한국사회학회.
- 외국인정책위원회(2007), 『외국인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 윤희경(2007),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진로 탐색 경험 분석: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중장년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봉주·김용득·여유진·강혜규·남찬섭(2006), 『한국사회복지서비스 제도화의 과제: 경험과 전망,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가고용전략과 비전: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빈부격차시정위원회, 7월 14일.
- 이현주·강혜규·서문희·정경희·유동철·정재훈·이승경·노연정·현명이(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현주·박세경·김영순·최은영·이윤경·최현수·방효정(2006),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보건사회연구원.
- 정일선(2006),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2006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최은영(2007),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앙-지방간의 역할분담 방안」, 『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기획예산처 사회복지서비스향상기획단, 5월11일.
- 최현미·이수연(2008),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현황분석과 전문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연구』, 제2호, pp. 1-22.
-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
- 홍승아·김혜영·류연규·Soma Naoko·조순주·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외국문헌

- Alber, Jens. 1995.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rvic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5(2): 131-149.
- Agnew, V. 1996. Counseling and settlement services: The current and future role of mainstream and settlement services. In S. Yelaja, (Ed.), *Proceedings of the settlement and integration of new immigrants to Canada: Conference February 17-19, 1988*(pp. 199-221). Waterloo, Ont: Faculty of Social Work and Center for Social Welfare Studies, Wilfrid Laurier University.
- Anttonen, A. and J. Sipila. 1996. European Social Care Services: Is it Possible to Identit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2): 87-100.

- Anttonen, Anneli and Jorma Sipilä. 1996. European Social Care Services: Is it Possible to Identif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2): 87-100.
- Alber, J. 1995.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rvic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5(2): 131-149.
- Applied Research Center. 2002. Mapping the immigrant infrastructure. Research monograph. Oakland CA.
- Bahle, Thomas. 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and Germany: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1): 5-20.
- Banting, Keith and Kymlicka, Will. (Eds.) 2006.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in, B. 1988. Equality is the issue: A study of minority ethnic group access to health and social services in Ottawa-Carleton. Ottawa: Social Planning Council of Ottawa-Carleton.
- Beyene, D., C. Butcher, B. Joe and T. Richmond. 1996. Immigrant service agencies: A fundamental component of anti-racist social services. In *Perspectives on racism and the human services sector: A case for change*, edited by C. E. James, 171-82.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ommes, Michael and Geddes, Andrew. (Eds.). 2000. *Immigration and welfare: Challenging the borders of the welfare state*. Routledge.
- Brockmann, Michaela and Mike Fisher. 2001. Older Migrants and Social Care in Austri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1(4): 353-362.
- Carens, Joseph. 2000. *Culture, citizenship, and community: A contextual exploration of justice as evenhandedness*. Oxford University Press.
- Casey, J. 1988. Ethnic associations and service delivery in Australia. In *Ethnic associations and the welfare state: Services to immigrants in five countries*, edited by S. Jenkins, 239-274.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heetham, J. 1988. Ethnic associations in Britain. In *Ethnic associations and the welfare state: Services to immigrants in five countries*, edited by S. Jenkins, 107-154.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ow, Julian. 1999. Multiservice centers in Chinese American Immigrant communities: Practice Principles and challenges. *Social Work*, 44(1): 70-81.
- Daly, Mary. 2002.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31(2): 251-270.
- Doyle, R. and L. A. Visano. 1987. A time for action: Access to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members of diverse cultural and racial groups in metropolitan Toronto. Toronto: Social Planning Council of Metropolitan Toronto.
- Esping-Andersen G., D. Gallie, A. Hemerijck and J. Myles.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 Finnan, C. R. and R. A. Cooperstein. 1983. South-East Asian Refugee Resettlement at the local level: The role of ethnic community and the nature of refugee impact. Social Sciences Center,

- Stanford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Menlo Park, California.
- Giddens, A. 2000.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 Cambridge: Polity Press.
- Gold, S. 1992. *Refugee communities: A comparative field study*. Sage Publications.
- Guo, S. 2006. Bridging the gap in social services for immigrants: A community-based holistic approach. Research o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Metropolis. Work Paper Series No. 06-04.
- Hein, J. 1995. *From Vietnam, Laos, and Cambodia: A refugee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Twayne Publishers.
- Henry, F., C. Tator, W. Mattis and T. Rees. 2005. *The color of democracy*. Toronto: Harcourt Brace & Company.
- Holder, B. S. 1998. The role of immigrant serving organizations in the Canadian welfare state: A case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Iglehart, A. and Becerra, R. 1996. Social work and the ethnic agency: A history of neglect.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4(1): 1-20.
-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2003. *World Migration Report 2003*. Geneva: IOM.
- Jenkins, S.(Ed). 1988. *Ethnic associations and the welfare state: Services to immigrants in five count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utto, Mikko. 2002. Investing in Services in West Europea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1): 53-65.
- Kitano, H. 1970. Mental illness in four cultur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0: 121-134.
- Leung, H. H. 2000. Settlement services for the Chinese Canadians in Toronto: The challenges toward an integrated planning. Toronto: Ontario Administration of Settlement and Integration Services.
- Lewin and Associates. 1986. Assessment of the MAA Incentive Grant Initiativ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Washington. DC.
- Ma, A. 1996. The Chinese perception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A survey report. Toronto: The Taskforce on Sustenance and Transformation of Agencies Serving the Chinese Canadian Community.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odley, K. 1983. Canadian multiculturalism as ideology. *Ethnic and Racial Studies*, 6(3): 320-331.
- Morissen, Ann and Diane Sainsbury. 2005. Migrants's Social Rights, Ethnicity and Welfare Regimes. *Journal of Social Policy*, 34(4): 637-660.
- Ng, R. 1996. *The politics of community services: Immigrant women, class and state*. Halifax: Fernwood Publishing.
- Nguyen, T. C. 1991. Report on the Vietnamese community in the City of York. York: York Community Services.
- Reitz, J. 1995.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aspects of ethno-racial access, utilization and delivery of social services. <http://www.ceris.metropolis.net/Virtual%20Library/other/reitz1.html>.

- Sohng, S. and Chun, M. 2005. *Multiethnic, multiracial coalition building: Connecting histories, constructing identities and building alliances*. New York: Center for Global Partnership.
- Sohng, S. and Song, K. H. 2004. Korean children and families. In Rowena Fong (Ed.),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with immigrant and refugee children and families* (pp. 81-99).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ue, S. and Morishima, J. 1982.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San Francisco: Jossey-Bass.
- Uba, L. and Sue, S. 1991. Nature and scope of services for 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s. In N. Mokuau (Ed.), *Handbook of social services for Asian and Pacific Islanders* (pp.3-20). New York: Greenwood Press.
- Van Berkel, Rik and Paul van der Aa. 2005. The Marketization of Activation Services: a Modern Panacea? Some lessons from the Dutch Experienc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5(4): 329-343.
- Wei, W. 1993. *The Asian American move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Weinfeld, M. 2000. The integration of Jewish immigrants in Montreal: Models and dilemmas of ethnic match. In D. Elazar and M. Weinfeld (Ed.), *Still moving: Recent Jewish migration in corporative perspective* (pp.285-298). New Jersey: Transaction.
- Zhou, M. 1992. *Chinatow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인터넷 자료

- 법무부 2007-8-27.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명 돌파’, ‘법무부 뉴스’, 법무부 홈페이지.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확정, 4월26일, <http://www.pcsi.go.kr>, 2006년 8월 3일 검색.
- 세계일보(2007), ‘다민족 사회 ‘코리아 리포트; 2050년 외국인 400만명--10명 중 한명꼴’, 2007년 4월 26일 검색.

주제 2

진정한 통합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민여성 문화교육

김 영 옥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목 차

- 1. 들어가는 말: 생활세계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점
- 2. 법무부가 말하는 사회 ‘통합’의 의미를 질문하기
- 3. 진정한 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문화교육:
비언어적 소통매체를 통한 다문화이해
-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생활세계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점

생활세계는 생활구조, 생활양식, 일상생활,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논의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일상적인 생활실천과 관련해 우리는 생활세계를 "인간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행위공간"(김왕배, 1999)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은 보잘 것 없으면서도 견고한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부분과 단편들이 하나의 일과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르페브르, 1992). 일상사는 구조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반복을 통해 일반성 혹은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사회의 각 층에 침투하여 존재양식과 행동양식을 특징짓는다.(Braudel, 1995) 즉 생활구조 또는 생활세계는 거시적 측면으로서의 사회구조와 미시적 측면으로서의 개인 사이의 의미 있는 연결이 표현되고 이루어지는 장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생활세계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그 성별성을 드러내는 것 또한 생활세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윤택림, 1996) 인간의 행위를 객관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계량화하려는 실증주의에 대항하여 인간의 주관적 의미가 지향된 곳으로서의 생활세계를 강조한 훗설(Husserl)의 뒤를 이어 슈츠(Schutz), 하버마스, 기든스 등에 의해 이론적 깊이를 얻은 생활세계의 개념은 그러나 생활세계의 성별성에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우리가 이주여성들의 문화교육을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재고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은 이주여성들과 한국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소통의 측면, 그리고 이주여성들의 생활세계를 젠더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각일 것이다.¹⁾

또한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그것이 언어교육이든 아니면 문화교육이든)을 기획하고 실천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생활정치와 맺는 관련성이다. 생활정치란 일상적 삶을 사는 개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관심과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공적인 의제로 구성해 내는 삶의 양식과 역량을 의미한다.(이기호, 2003: 175) 따라서 사적 영역에 갇혀 사는 개인들이 자발적 창발성에 의거해 그러한 사적 영역의 문제들을 공동의 관심사로 전환시켜 낼 수 있을 때 그것은 기존의 공·사 영역의 이분법적 분리를 뛰어넘는 참신하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생활세계가 거시적 측면으로서의 사회구조와 미시적 측면으로서의 개인 사이의 의미 있는 연결이 표현되고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생활세계에서 창출되는 생활정치의 가능성일 것이다.

1) 현대인들은 자신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주장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일과표(social time table)대로 생애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생활시간에 따라 생활세계를 파악하는 시도도 있어 왔다.(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박수미/선보영/김진옥, 한국여성개발원 2005; 3-4) 이러한 이해는 이주여성들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지역공동체 문화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 넓은 의미에서의 배경지식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 여성들의 언어 및 문화교육을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는 것은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 궁극적으로 결혼이민 여성들의 역량강화에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그로써 이들이 생활정치에 주권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의 결혼이민 여성들에 대한 언어 및 문화교육이 목표로 삼는 것을 뛰어넘어 그 지평을 보다 거시적으로 확장시킴을 의미한다.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모른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러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공동체의 주체적 성원으로서 이들이 발휘하게 될 다양한 지역 활동 및 시민 활동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생활정치는 이웃 간의 친밀감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각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 상호간의 연대로 이어질 때 그 구체적인 힘을 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결혼이민 여성들에 대한 언어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지역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다양하고 적극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변화에 헌신할 수 있는 구조 마련에까지 그 기대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다.²⁾

이것은 물론 장기적인 변화의 과정을 요구한다. 더군다나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에 대해 한국사회가 (공적으로 표명하는 평등관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선입견들은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 꽤나 지난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들에 대해 선의의 감정을 품고 있는 한국인들조차도 이들을 주변인의 위치, 희생자 또는 약자의 위치에 놓고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상호 영향력을 끼치는 평등한 관계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여성이 일상적 삶을 사는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미’ 의미화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가정의 경우 남편을 비롯해 시댁식구들은 적어도 아이를 한 둘 낳고 2-3년을 함께 살기 전까지는 신부를 믿을 수 없어 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이 돈 때문에 왔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신은 심지어 아이를 낳은 뒤라도 국적을 취득하면 아내가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데까지 이어진다.

“남편은 마음은 좋지만, 조금 무서워요. 남편은 내가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은 아기 낳고 비자 받고 난 후 가버리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그럴까봐 걱정해요. 남편이 이런 생각

2) 이주여성들과 원주민 여성들로 이루어진 대만의 ‘아시아 자매회 TASAT’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TASAT에서 이루어지는 이주여성들의 활동이 이들을 개인적 주체에서 공동적 주체, 그리고 역사적 주체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주체화의 과정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보다 상세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건 무서워요.”

이주여성들의 일상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의 경우는 어떠한가? 물건을 고르면 서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물건 파는 사람은 ‘개 코도 아무 것도 모르는데 좋은 것 나쁜 것은 아냐?’라고 반응을 보인다. 상대방이 이 정도 말까지 이해할 정도로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국인 신부니까 전혀 상황 판단이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추운 겨울 날 시장에서 나물을 사는 한 이주여성에게 노점상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는 ‘아이구~ 불쌍한 것, 잘 살어~’라며 안타까워하신다. 그런데 정작 이주여성 자신은 ‘내가 왜 불쌍해요? 불쌍한 건 할머니인데. 나는 따뜻한 집에 사는데.’라며 당혹해 한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공간은 어떤가? 안동에 사는 한 이주여성은 버스에 올라탔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보며 ‘뭐 하러 이 멀리 왔냐’라고 중얼거리는 것에 자존심 상했다고 말한다.³⁾(황윤주, 2008)

상황이 이러한 만큼 결혼이민 여성들에 대한 문화교육은 좀 더 진정성이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적 삶을 가능케 하는 통합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법무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사회통합 이수제’에서 ‘통합’이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 법무부가 말하는 사회 ‘통합’의 의미를 질문하기

법무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통합’을 제대로, 다시 말해서 그것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이라는 개념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의 이수가 국적과 연동될 때, 그 국적취득이 궁극적으로 어떤 자격(status)을 부여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이수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첫째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그 결과 “취업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둘째 ‘한국어, 한국사회·문화·제도 및 다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의 결여’ 그리고 ‘한국어 초급수준 및 개인발전능력 미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취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이것은 한국으로 온 이주여성들만 듣는 질문이 아니다. 대만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도 ‘왜 그렇게 멀리 왔냐?’라는 질문을 늘 받는다. 거기에 대해 TASAT의 한 회원은 “왜냐구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죠!! 내 꿈에 뭐 이상한 거라도 있나요?” 라고 답변한다. (대만 TASAT 방문 시 인터뷰 내용 중.)

a.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그 결과 “취업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때문

한국에 나와 있는 결혼이민 여성들 혹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재현을 분석한 글들은 이러한 재현 속에서 이들의 목소리와 시각, 그리고 경제적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일관되게 배제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에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의 재현에서 일관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집합적 타자화’이다.(국가나 사회가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통해 이주여성을 ‘돕고자’ 할 때 이들은 일차적으로 동화될 필요가 있는 대상, 그러나 혼란을 겪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집단적 특징으로 범주화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그것은 그들을 각각의 의제를 가진 개인이 아닌 집합적 타자로만 간주하는 사회나 국가의 ‘막힌 귀’에 부딪치게 된다. 차이와 타자성, 다양성,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질 권리 등은 그것이 기존의 체계나 주류의 재생산에 적합할 때만 수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협적인 것으로 또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결혼이민 여성들의 ‘문제점’들은 크게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가정폭력으로 수렴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제 중심으로 제공되는 이주민 정착 지원 사업 역시 일차적으로는 언어 및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해서 문제점 중심으로, 그것도 집단적 타자로 재현될 때 과연 기능적으로 학습되는 한국어나 단편적인 한국문화지식이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인가. 앞에 ‘들어가는 말’에서 예시한 경우들에서처럼 이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들의 존재를 미리 규정해 버리는 ‘문제적 맥락’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주로 한국음식, 전통예술, 예절, 문화유산답사 등 한국문화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미술, 음악 등을 이용한 몇몇 예술치유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문화교육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소극적 접근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대부분의 결혼이민 여성은 한국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문화교육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이질적인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정보를 얻는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문화권의 의미를 넘어서 ‘생존권’과 시민권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이와 관련해 이주여성인권연대에서 발표한 부산지역 이주여성들의 사회통합 수제 관련 의견 중 특히 ‘사회통합 교육에서 배우기를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한 응답은 중요하다. 베트남 67명, 중국 36명, 인도네시아 3명, 필리핀 2명, 태국 1명 등 모두 109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가장 사회통합 교육에서 가장 원한 것은 한국어 다음으로는 한국법률관련, 자녀교육, 직업관련 교육 순이다. (이주여성인권연대, 2008: 18)

질문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합	%
한국어	56	14	—	2	—	72	40.4
한국문화와 예절	9	8	2	2	—	21	11.8
직업관련 교육	2	18	—	2	—	22	12.4
한국법률관련	9	18	2		1	30	16.9
자녀교육	12	9	—	2	—	23	12.9
한국과 모국 외교, 정치 경제 관련	2	4	1	2	—	9	5.0
기타	—	—	—	1	—	1	0.6
합	90	71	5	11	1	178명	100%
%	50.5	39.9	2.8	6.2	0.6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적취득을 포함해 한국에서의 체류안정과 직업을 통한 경제적 기반 마련, 그리고 자녀양육의 문제 등이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교육과 병행해서 혹은 우선해서 확보되어야 할 일이다.

b. ‘한국어, 한국사회·문화·제도 및 다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의 결여’ 그리고 ‘한국어 초급수준 및 개인발전능력 미달’ 때문

법무부가 6월 25일 있었던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UN 인종차별 철폐협약 위원회의 ‘외국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단일 민족 국가의 인종적 우월성 극복’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국내 차원에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 및 제도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8조를 제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여전히 결혼이민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기본소양’을 요구하는 대신 기존의 원주민, 즉 한국국민에게도 낮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기본소양’을 물어야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본소양의 결여, 또는 개인발전능력 미달 등의 어법은 ‘인종적 우월성’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다중적 소통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신 이주민들을 정책적 대상으로서만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언어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 중요성 역시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달리 해

석될 수밖에 없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소통이라는 사회적 측면을 지니는 동시에 자기표현이라는 심미적 측면을 지닌다.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언어발화현장의 맥락이다. 결혼이민자들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선한 의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장에서 이들이 한국어를 ‘최소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다고 해서 과연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기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침묵을 포함해서 떠듬거림, 분절적 언어사용, 몸짓 등 모든 언어적 표현 자체가 언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을 동등한 ‘언어적 주체’로, 동등한 발언권과 표현권을 지닌 성원으로 인정하느냐이다. 표면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그들의 ‘개인발전능력 미달’로 판단하는 것은 언어 자체에 대한 물이해를 드러낸다. 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을 ‘어린이 취급’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원주민으로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이들의 존재성에는 끝까지 ‘어린이 같은’ 속성이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권과 생존권이 그 사회의 주류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것은 곧 그 사회의 폐쇄성과 직결되는 부분’(한국염, 2008))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이들이 한국어나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결핍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이주를 선택하게 만든 글로벌 경제구조, 그리고 이주해 온 이곳 한국사회의 경제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 이주민들에 대해 매우 부족한, 혹은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구성원들) 때문이다.

c. 국민 ‘과’ 이민자의 접합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과 ‘국민의 글로벌 다양성 이해’(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양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정책을 실현시키는 내용이 결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로 축소되는 건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오히려 넓고 길게 볼 때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이다.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접촉, 소통을 강조하지만 여기서 ‘과’는 과연 평등한 만남의 지대(contact zone)을 이루는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민자를 ‘끼워주겠다’고 호혜를 베푸는 주체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 통합의 의미는 철저하게 배제(exclude)와 포함(include)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기제 안에 갇혀 있게 된다. 내부는 전혀 움직이지도, 변화하지도 않은 채 외부에 있는 사람을 내부로 들어오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라면 ‘예외적 상황’은(Ong: Agamben)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 ‘포함되었다’는 인정을 받은 후에라도 항시적으로 다시 외부로 내몰릴 수 있다. 진정한 ‘통합’의 의미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선 자체를 해체하면서 ‘만남’의 효과가 쌍방향적으로 일어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자아’를 변화시키지 않는 ‘타자’와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타자를 ‘타자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관용에 기반을 둔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통합을 지연시키기 위한 알라바이일 뿐이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내부라고 하는 것 역시 균질적인,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민은 과연 누구인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인구로 기입되는 것 외에 국민을 하나의 통합적인 주체로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할 것이다. 한 국민국가 내에서, 혹은 한 사회 내에서 시민권을, 또는 성원권을 느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다. 성별과 계급에 따라서, 신체와 섹슈얼리티, 친밀성의 유형, 문화적 정체성 등에 따라 시민권의 내용이 달라지듯, ‘국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이한 이질성들을 (강제적으로) 숨기거나, 아니면 그 이면에서 끊임없이 (선택적으로) 배제/포함을 작동시키고 있는 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 내에 얼마나 많은 비국민들이 있는가를 동시에 성찰하지 않는 ‘통합’ 논의는 명목상의 구호가 될 확률이 높다.

일차적으로 국민이 되는 방식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 또는 더 나아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성원권을 얻는다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내부에서 성원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membership of a citizenship community) (기존의 시민권 논의가 강조하는 두 핵심요소인) 권리나 의무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들, 실천들 그리고 정체성들의 합으로서의 성원권은 귀속의 느낌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귀속은 고정된 상태를 가리키지 않는다. 또한 물질적인 것만도 아니다. 그것은 감정과 심리적인 차원을 포함한다. 한 사회 내에서 주류에 속하지 않는 집단들은 귀속을 두고 지속적인 협상을 벌인다. 여러 상이한 집단들은 이처럼 시민권을 가진 공동체への 귀속을 상이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귀속으로서의 성원권 이해에 중요한 분석적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시민권이 맥락화된 개념이며 살아내 진 경험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참여의 가능성 여부이다.

Fraser는 ‘균등한 참여 parity of participation’를 핵심적인 사회 정의의 이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균등한 참여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동료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적 조정장치(social arrangement)이다. 이러한 균등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래야 독립적인 목소리, 동등한 존중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사회권, 공민권에 의해 보장된 정치적이고 시민적인 참여는 실천으로서의 시민권 이해에 핵심적인 관건이 된다. 통합의 논의는 이러한 ‘귀속의 느낌’으로서의 성원권을 지평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이러한 시민적 참여로 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체류의 안정을 확보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

든 제반 사항들을 제거해야함을 의미한다. 즉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통합 정책의 핵심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결혼이주를 ‘선택’한 이들의 삶의 기대, 표상 등에 부합하는 인권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김현미/김민정/김정선, 2008)

결혼이민자 여성을 노동권과 문화권, 젠더권을 갖는 인권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이들과 함께 신체 이동의 자유, 체류자격 선택, 폭력에서의 자유/방어, 노동할 권리, 문화적 박탈로부터의 보호 (내지는 문화적 정체성 보존)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 부과되는 언어교육, 문화교육은 사회통합의 명목론만을 강조하는 ‘강제 사항’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d. 이민자 사회통합의 기본방향: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조화’

법무부가 이해하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조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명백하지 않다. ‘이민자의 다양한 문화·가치를 포용(다문화주의)하여, 한국의 전통문화·가치와 결합(동화주의)시킴으로써 세계 일류의 문화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문화주의 정책만을 수립, 시행할 경우 자칫 이민자를 주류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빈곤층으로 전락케 하는 위험성’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논의들, 즉 다문화주의에 내포해 있는 정체성의 정치학/인정의 정치학이 자칫 재분배의 정치학, 즉 계급과 경제의 측면을 소홀히 할 수 있음을 정책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동화주의의 내용이 경제적, 정치적 통합의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세운 동화주의의 내용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치일 뿐이다. 동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척박하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한국의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성별문화, 순혈주의적 민족주의를 의미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3. 진정한 통합을 위한 결혼이민 여성 문화교육:

비언어적 소통매체를 통한 다문화이해

통합은 이주민과 한국인 모두가 함께 서로 스며들어 변화는 과정이다, 따라서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이때의 언어는 활자/음성언어의 소극적인 차원이 아닌 소통의 보다 포괄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표현방식을 섬세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교육은 그것이 일방적으로 이주민들에게만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강요하는 학습의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주민들이 참가하는 과정 중에, 혹은 참가한 후의 결과를 통해, 쌍방향 이해의 과정이 지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은 쌍방향 이

해를 향하고 있지 않다. 지난 2-3년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지도가 향상되었고, 또 이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단체들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최근에는 이주여성들과 지역주민의 쌍방향 다문화 이해를 지향하는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다.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이나 부산의 어울림, 그리고 청주의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결혼이민 여성들을 위해 지자체나 (박물관, 평생학습관, 오페라단, 지역 시민단체, 예술문화단체 등 이주민과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상이한 단체들이 기획하는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중복적이고 일회성을 띠며, 많은 경우 동화를 지향하는 것일 경우가 많다. 문제는 동화를 지향한다고 할 경우에도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얼마큼이나 효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요리강습이나 다도를 비롯한 예절교육, 문화유적 관광, 풍물강습 등은 이주여성들의 직접적인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며 자칫 형식적인 행사에 머물 위험이 많다. 그리고 결혼이민 여성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욕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이들을 ‘문화적 교화’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문화적으로도 열등하다는 편견이 은연중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의식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더 나은 문화를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편협한 ‘자민족중심주의’의 논리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관단체들은 우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체현하고 있는 타문화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교육’을 받아야 함을 깨닫고, 더 나아가 한국의 문화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남편, 시부모, 자녀들을 포함시키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에 다문화 포럼 같은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한다.(여성가족부, 2005) 그리고 이것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관심과 수용성이 충분치 않음을 고려할 때 더욱 필요한 일이다.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곤 동남아시아에서 신부를 구매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의 가족들은 국제결혼을 선택할 당시부터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국내결혼에 대한 낮은 기대와 한국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아온 여성을 부인이나 며느리로 선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신국가의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자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해 준 부정확하고 왜곡된 홍보성 정보를 기초로 결혼을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이주여성에 대해 강력한 동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를 너무 잘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경계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김이선 외, 2006: x-xi) 이것은 향간에 퍼져 있는 ‘도망가는 신부’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중에 작용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혼란을 겪기 쉬우며, 수용의 경직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소외를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족 내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사회 내에서 쌍

방향 문화이해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요청된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들의 공공문화시설 이용도는 8.7 %로서 내국인의 39.9 %에 비해 매우 낮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관람하고 싶어 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모국의 영화(25.0%), 모국의 대중예술행사(22.8%)가 가장 많았고, 한국영화(15.4%). 모국의 공연(11.2%), 한국의 대중예술행사(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이러한 높은 욕구는 이주민들이 낯선 한국에 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일방적인 교육 및 동화의 요구에 비취볼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그들의 욕구는 단지 그들 자신의 향유를 위해서 뿐 아니라 한국인들 또한 그들 모국의 대중문화를 접함으로써 서로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이주민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요소이다. 이들은 모국의 문화수준을 ‘높다’(20.6%)고 생각하기 보다는 ‘낮다’(28.0%)고 생각하며, 많은 경우 한국사회에서의 이주민 차별이 ‘조금 심하다’(53.3%)고 느낀다. 여기에서 모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차별 사이의 상관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주민 정책 평가에 있어 이들이 한국인의 다문화교육 필요성, 한국인의 이주민 문화존중 등을 강조한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한 문화교육과 관련해 이주민들은 생활문화(24.3%), 생활취미(17.8%), 문화예술(17.2%), 한국역사(9.3%) 등의 순서로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냈으며, 관심없다는 의견 또한 전체의 31.3%나 차지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생활에 밀착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주민 정책의 평가〉

		만족/ 그렇다	보통	불만/그렇지 않다	관심없다	평균
공공기관의 이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23.8 %	36.7%	21.6%	18.3%	3.09 점
민간단체의 이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25.2 %	34.2%	22.4%	18.2%	3.12 점
다문화 여건과 정책	한국정부의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정책	30.7%	35.2%	34.0%	—	3.02점
	한국 내에서 모국의 문화향유 여건	11.4%	27.6%	61.0%	—	2.30 점
	한국문화 습득 프로그램의 충분함	17.4%	35.8%	46.8%	—	2.64점
	한국인의 이주민 모국문화 존중	27.0%	37.1%	36.0%	—	2.87점
	한국인에 대한 다문화교육 필요성 *	55.8%	35.8%	8.4%	—	2.41 점
이주민을 위한 별도의 문화공간(시설) 필요성		68.3%	15.9%	15.8%	—	3.73점

* 다문화교육 전혀 필요 없음이 5점 만점임.

결론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문화공유의 장을 확장시킴으로써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가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또한 이들과 지역사회의 교류를 확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자체가 다문화 공동체로 변환되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활자매체가 아닌 신체나 비디오 등을 사용하여 자기 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상호소통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연극과 비디오 워크숍을 적극적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관찰한다.

a. 대만 TASAT: 개인적 주체에서 공동적 주체로, 그리고 역사적 주체로

비디오 워크숍이나 연극, 혹은 신체극 등은 한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주자들을 위한 매우 뛰어난 문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이민자들은 문화실천의 주체가 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 의견,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들을 적극적인 이해와 만남의 장으로 초청한다. 즉 그들이 초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관객들 (즉, 한국인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확실히 인지하게 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좀 더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에서 일상적 삶을 살 때, 일터에서 노동자로 한국인들과 만날 때 그들에게 안정된 위치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유아적 위치에 서게 되는 이들에게 동등한 성원권의 감정을 갖게 도와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한국에 온 동남아시아 출신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한국에 정착할 때 효과적인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 줄 만한 지지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요구되는 아내, 며느리, 어머니의 정체성은 3중의 부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들은 이들 당사자들의 narration이 아닌 외부 관찰자들, 즉 소위 전문가나 활동가들, 정책입안자들의 해석이나 보고, 판단 등을 통해 (정책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들’로 다른 한국인들에게 알려진다는 점이다.

한국보다 앞서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여성 결혼이민을 경험해 온 대만 역시 한국과 비슷한 태도로 결혼이민자 여성을 재현하고 호명했다. 이에 대해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어떻게 대항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대만의 이주운동단체인 <TransAsia Sisters Association>의 활동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여성들과 대만 출신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TASAT는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의 『페다고지(Pedagogy of the Oppressed)』와 아우구스또 보알(Augusto Boal)의 『민중연극론(Theater of the Oppressed)』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중국어

교육과 사회극의 시연performing, 그림, 다양한 포럼, 글쓰기를 통해 ‘외국인 신부foreign brides’를 둘러싼 선입견들, 사회적 편견들, 차별들과 맞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진력해왔다. 2005년 드디어 이들은 『나를 외국인 신부라고 부르지 마세요 (Don't call me a foreign Bride)』라는 책을 발간했고, 이 책은 곧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TASAT 구성원들은 꾸준히 대만인들과 이주민들 사이에 일종의 사이의 감각betweenness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대만인들이나 현재의 이주민 모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주민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유사성을 확인함으로써 가능했다.

또한 이들은 대만을 비롯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가부장제 구조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이러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행하는 가정 내의 보살핌 노동이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대만여성들과 함께 진행되는 이러한 토론을 통해 대만여성들은 이주민 여성들이 대만으로 결혼이주를 결정한 것이 ‘여성으로서 산다는 것’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동시에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삶과 그들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공동의 관심과 경험, 느낌들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여성주의 의식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토론 방식을 통해 상호간에 평등한 역량강화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TASAT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교육 중 진보적인 지역운동 성격이 강한 지역 Yung-Ho Community College, Taipei County 에서 ‘여성그룹’과 함께 행해진 ‘나눔Sharing’은 이러한 토론의 생생한 현장이었다. ‘나눔’에서 이주여성들은 일반적으로 2명씩 팀을 이루어 교육을 진행한다. 2008년 5월 5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해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나눔의 장에서 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이 대만에 이주해 와서 배운 다문화주의와 대만인들도 제대로 알지 못할 다양한 노동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주민들이 대만의 노동시장에서 겪게 되는 차별이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될 때 그것에 대한 대만인들의 이해와 공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대만 지역의 여성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러한 불평등하고 인권침해적인 관습들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호소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 결혼이민 여성들을 포함해 이주여성들의 활동이나 자기 정체성 확보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지역여성들과의 연대이다. 그러나 연대는 명목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상대방의 일상적 경험, 느낌, 의견을 제대로 알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지역여성들 앞에서 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할 때 그 연대의 효과는 매우 크다. 그날 모임에서 홍만기 (베트남 출신, 현재 TASAT의 Campaign and Research Committee에 소속) 씨는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 다문화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문화교육은 문화는 위계화 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 문화가 왜 당신 문화보다 낮게 취급되는지를 질문한다. 내가 대만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당신네 나라 예도 TV가 있느냐, 화장실이 있느냐고 내게 물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왜 대만에 왔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내 꿈이 뭐 잘못된 거 있나요? What's wrong with my dream?’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꿈이 있었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대답한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현장 채록)

TASAT 구성원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대만의 지역여성들과 ‘공유하고’, 더 나은 통합을 위해 상호작용하며, 함께 도모하고 싶다고 호소한다. 가정에서 ‘보살핌’ 노동을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값으로 따졌을 때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며 이주여성들 자신을 비롯해 전업주부인 대만 여성들이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수행하는 노동의 총액을 언급했을 때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 끝에 한 대만여성은 “이주여성들과 나에겐 공통점이 있다. 나는 대만여성이지만 이것을(가부장제에서의 여성의 삶) 깨닫는데 10년이 걸렸다. 전에는 집에 있는 것, 아이들 기르는 것 밖에 몰랐다. 내 부모에게 배운 방식으로 아이를 키웠다. 나중에 커뮤니티 대학에서 배우게 되면서 여성이 다른 여성들과 만나야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했다.

TASAT 구성원들의 이러한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중국어를 비롯해 사회극, 미술,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표현력을 키우고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시켰으며, 자신의 문화와 대만의 문화를 서로 대화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주여성들의 언어 및 문화교육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수동적이고 취약한 배움의 대상에서 출발해 스스로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유입국의 사람들 앞에 나서서 드디어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주체로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대만의 TASAT 경우도 그렇고 한국에서 이러한 자기 확인의 과정을 거친 다른 이주여성들의 경우도 그렇다. 유입국의 사람들 앞에서 서서 ‘교사’로서 자신의 문화와 서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표현할 때의 놀라움과 기쁨에 대해 그들은 높은 자긍심으로 이야기한다. 그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상호인정의 원 안에 드디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주해 온 여성들에게도 (언어 교육 및 양육 상담 등에서) ‘교사’로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 확인의 핵심 경험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주민과 다른 토착민들을 비롯한 소수 집단의 인권을 아시아적 맥락에서 함께 고민하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자기변신을 꾀할 수 있다. (Chio Yadrung from Thailand, 2008)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비디오 워크숍 등 적극적인 자기 표현의 훈련과정을 거쳐 지역 다문화교육 강사로 성장한 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역량강화’ 과정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리고 다른 이주여성들의 경험을 자신이 문화번역자로서 번역 내지는 매개해 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경험이 매우 중요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소통과 진정성에 기반을 둔 통합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일이다.

**b. ‘억압받은 자의 연극’을 실천하는 극단 <해>와 이주여성 자조모임 <다마안>의 만남:
음성/활자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몸 언어의 풍요로움과 깊이**

아우구스또 보알의 ‘민중연극론’과 그 실천을 모델로 삼아 배제되고 차별받는 집단을 찾아가 연극을 통한 자기서사의 가능성을 펼치는 극단 <해>는 그동안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나 이주노동자 공동체 등 여러 이주민 공동체와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극단 <해>를 이끄는 사람들 중 하나인 노지향과 그의 배우들은 ‘Playback Theater’를 통해서 자기서사를 들려주는 사람과 배우들, 그리고 관객들이 함께 공존하는 현장을 뛰어난 감정이입과 공감의 공간으로 변형시킨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들은 기억 속에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는 에피소드들, 가슴에 품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들려주고, 거기에 제목을 정해준다. 그러면 현장에 있던 배우들은 즉흥적으로 그 에피소드들이나 이미지들을 하나의 드라마로 보여준다. 따로 연출하는 사람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당사자와 그 당사자에게 말을 건네는 노지향이 연출부를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들은 자신들이 교감한대로 동작을 만들어내 당사자가 생략하거나 여백으로 남겨둔 부분, 혹은 미처 다 떠올리지 못한 부분을 채워나간다. 공간은 대단히 친밀하고 밀도 높은 공감의 현장이 된다. 자신의 (아픈/슬픈/기쁜) 기억을 풀어놓는 당사자들이나 즉흥극을 펼치는 배우들, 그리고 그 모든 진행 과정에 동반자가 되어 간접적으로 극의 진행을 돕는 관객은 모두 어떤 감정의 흐름, 혹은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형태를 얻고 발화하게 되는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현장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닮아감, 닮아가면서 이해함, 이해하면서 치유됨의 중첩된 경험에 동참하게 된다. 서로가 서로의 내면에 스며들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접혀 있는 여러 감정의 갈래들을 스치게 되고 그럼으로써 너/나의 날카로운 경계는 사라지고 나는 너를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이러한 깊어진 자아 이해를 통해 너를 더욱 진솔하게 이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수자라고 간주된 ‘억눌린 자’에 대한 이해가 일종의 시혜의 형태로, 일방향으로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공감과 연민, 감정이입의 적극적 기운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강요되지 않은 상호 배품의 관계를 맺게 도와준다. 필리핀 이주여성 공동체인 ‘다마얀’이 인천 여성의 전화와 함께 연 두 번째 페스티벌에서도 극단 <해>의 몸 시연은 깊은 공감의 경험을 가능케 해 주었다.

이 즉흥극이 문화실천의 형태로서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를 어눌하게 구사하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으로 제목이 있는 한편의 드라마를 무대에 올릴 수 있다는 것, 둘째, 배우들이 감성 풍부한, 대단히 섬세하면서 겸손한 몸동작을 통해 보여주는 이해의 폭이나 깊이, 방식, 색깔 등을 보면서 관객들은 즉각적으로 다문화 감수성의 힘과 영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셋째, 배우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면서 (아주 중요한 몇몇 단어나 상징적 문장이 아니면 배우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색깔 있는 천이나 몇몇 악기, 네모난 통 등의 소도구를 활용해 언어 중심적이지 않은 소통과 교감을 실천함으로써 관객들은 실제로 소통은 소통하고 싶다는 열망과 노력, 즉 상대방의 마음이 뿌리내리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시공간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능력 등에 힘입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낯선 나라에서 이주해 와 ‘통합’이라는 무겁고 힘든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해야 하는 이주민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내가 당신을 이해해 주기 바라는가? 당신 나와 소통하기 바라는가? 당신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네. 당신이 빨리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나와 당신은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지.’라고 한국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이주민들에게 주장할 때마다, 그만큼 안과 밖, 우리와 그들의 경계는 견고해지고, 그만큼 통합의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Playback Theater’는 언어의 큰 도움 없이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즉흥극이다. 그러나 만약 어느 정도의 언어 구사가 가능하다면, 몸의 언어와 소리 언어를 모두 활성화시켜 토론연극이라는 다른 즉흥극을 수행할 수도 있다.

아우구스또 보알의 연극론은 연극이 특정 전문인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막고 모든 사람이 배우나 연출가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정치적으로 의제가 될만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 모든 장소가 중요한 연극 무대가 된다고 강조한다. 아우구스또 보알 자신이 배우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지역민들과 즉흥적으로 무대를 만들고 시간의 제약 없이 벌이는 토론은 ‘억압받는 자’, 혹은 ‘일반인’의 연극이 어떻게 해방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보알의 ‘민중연극론’에서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는 전문인이 아닌 관객으로서 보알은 이를 관객-배우라고 부른다. 배우가 해방을 표현하는 행동을 할 때 그 행위는 관객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므로 곧바로 관객을 위한 카타르시스를 유발한다. 그러나 똑같은 행동을 관객-배우가 한다면, 그 행위는 그를 제외한 나머지 관객들의 이름으로 행하

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카타르시스가 아닌 역동화(dynamisation)를 이루어낸다.(보알, 2003: 75)

토론연극은 카타르시스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세계를 변혁하려는 욕망을 자극”해야 한다. 토론 연극에서는 연극의 민주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든 관객-배우가 “스톱”이라고 외침으로써 그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 토론 연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대 위에서 관객-배우들을 해방시키는 것, 관객-배우들을 자극하여 배우로 바꿔내는 것이다. 연기하는 그 혹은 그녀로 말이다.

다음으로 소리 언어가 부재한 몸의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연극방식 중에 특히 거울 시리즈 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이주여성들과 한국의 지역 여성들 사이에 일방적 동화 식 통합이 아닌 진정한 소통과 교감,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해 주는 뛰어난 훈련 방식이다. 여기서 주체-이미지와 이미지-주체는 서로를 모방하면서 정서 및 감각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럼으로써 고갈된 상상력을 다시 활성화 시킨다. 이 이미지 연극에서 한 팀이 된 각자는 이미지이자 동시에 주체로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상대방이 하는 동작을 따라해야 할 의무도 갖게 된다. 이때 어느 한쪽이 전제 군주처럼 굴어서는 절대 안 된다. 각자가 자기 움직임에서 완벽한 자유를 느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공감하여 가능한 한 충실하게 그의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컨대 자유와 공감이 필수적이다. 이 전체 연습의 목표는 따라하기 어렵거나 따라할 수 없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다.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며 느릿느릿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없다. 핵심은 모방의 동일성과 충실성이다. (같은 책, 196) 이러한 이미지-주체/주체-이미지 동작의 훈련을 통해 결혼이민 여성과 한국 지역 여성은 서로 상대방의 의지와 감각에 따르면서 자신의 의지와 감각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 자신을 서로의 거울 이미지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깊은 공감을 통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결혼이민 여성들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인정이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맺기라고 할 때 이러한 신체 훈련은 단순히 명분을 앞세운, 거의 강요되다시피 하는 ‘통합’의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일상생활문화의 차원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뛰어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극단 <해>는 지난 2006년 통과의례 페스티벌 때의 이주노동자들과 3일간 공동작업을 수행했고, 지난 2006년 여성문화예술기획의 주관 하에 필리핀 이주여성들과 함께 속초에서 2박 3일 과정으로 워크숍을 했다. 이 워크숍 과정은 참가자들 모두에게 해방감과 자신감을 돌려주었고, 소통의 기쁨을 맛보게 했다. 그 두 과정 모두를 비디오로 기록했던 막심은 자신이 함께 한 그 어떤 문화프로그램도 이런 상호이해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한다.

막심은 2006년 속초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며 만났던 필리핀 여성과 지금도 지속적인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프로그램 주관단체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워크숍에서 경험했던 자신감, 신뢰의 감정, 소통 가능성, 해방감 등은 한국의 지역 여성들과 외국에서 온 여성들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로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을만큼 충분한 자원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식과 고민이 요구된다.

c. video workshop을 통한 적극적 자기 발화

언어란 소통의 차원 뿐 아니라 표현의 차원을 지닌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언어는 활자 언어에 국한될 수 없다. 사진, 그림, 몸짓, 영상 이미지 등도 분명 언어이다. 이렇게 볼 때 이주여성에 대한 언어교육 및 문화교육의 뛰어난 매체 중 하나가 video 작업이다. video 교육은 이주여성들이 단순히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생산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음에 나는 당진과 횡성 두 곳에서 2년에 걸쳐 있었던 이주여성들의 video workshop을 소개함으로써 이미지 언어교육이 다문화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동안 미디어 액티비즘을 표방하는 mediAct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결혼이민 여성 비디오 워크숍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영상물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일대 일 교육을 실시하여, 이민자들에게는 소통의 기회를 열어주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민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한국사회 내 다문화 환경의 성숙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07년 당진에 사는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2008년 횡성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비디오 워크숍은 치유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풍경 드러내기의 과정으로서 활자언어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이민 과정을 스스로 언어화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편, 워크숍 과정에 함께 참여한 이주여성들과의 소통과 공감, 연대를 꾀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언어를 비롯해 여러 상이한 문화적 갈등과 충격에 직면하면서 고립과 소통의 부재, 그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이 여성들은 카메라라는 비언어적 매체를 만나게 됨으로써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이주 여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감정과 관심, 희망과 좌절을 나눌 수 있는 동료 그룹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3-4주 간의 워크숍 과정이 끝난 후 각자 완성한 필름을 발표하기까지 오랜 시간 서로 허심탄회하게 경험을 나누면서 이미지 공간image-scape / 이미지 서사image-narration를 만들어 나간 시간들은 자신들이 한국사회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는 그들의 고립감을 공동체적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었다.

· 특히 치유에 초점을 맞추었던 당진 비디오 워크숍

참석: 진상 (중국, 한국 온 지 6개월), 지니 (베트남, 한국 온 지 18개월), 보현 (베트남, 한국 온 지 8년), 미미 (베트남, 한국 온 지 1년), 조이 (필리핀, 한국 온 지 3개월), 은희 (베트남, 한국 온 지 1년), 최연순 (연변, 한국 온 지 13년), 로잘리나 (필리핀, 한국 온 지 12년), 벽아 (통역 스태프, 베트남 유학생)

워크숍 진행 장소: 당진 문화원

기간: 2개월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그 주변 환경, 가족, 이웃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은 한국사회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가난하고 열등한 나라’에서 팔려/온 사람이라는 편견과 싸워야 했던 그들에게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안겨 주었다.

이 워크숍을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진행시킨 문화원의 백숙현 팀장은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테크닉이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미디어 워크숍이라고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서로 가슴과 가슴으로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지, 그리고 영화로서의 완성도나 이런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지요.) 누가 그 동안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나요?. 그런 속내 묻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가 그 워크숍 하면서 그런 얘기 다 하고, 정말 한 번도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죠. 무엇보다도.”

(2008년 3월 29일 인터뷰)

당진 문화원 한국어 교육에 모인 이주여성들은 비교적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은 외딴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우선 2006년 실시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서로를 알게 되었지만 이 비디오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 나가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비디오 워크숍을 통해 가장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보현 씨와 로잘리나 씨는 이러한 ‘주목’을 통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백숙현 팀장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늘진 얼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걸 알죠. 너무나 밝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변했다는 거를..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 첫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 여기 와서 등록을 할 때에 그 첫 만남을, 그니까 너무나 깊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잊혀지지가 않아요. ... 표정 변한 게 다 나타나죠. 언어도 모르고 낯선 환경 속에 딱 던져졌을 때의 그런 공포감.. 그런 두려움. 그런 거를 저는 첫 만남 때 느꼈고..”라고 말한다.

- 보현 씨

가정이 너무 가난해 9살 때 초등학교 교육을 중단해야 했던 베트남 여성 보현은 눈물이 많던 수줍고 마음 약한 여성이었다. 베트남에 있을 때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하며, 자신의 삶에 미래가 없는 데에 대해 ‘눈물만 흘리고 있던’ 그녀는 한국으로의 결혼이민을 매우 중요한 변화의 기획으로 삼았지만, 한국에서의 삶 역시 그녀의 눈물을 마르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워십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상황과 느낌을 ‘말로 설명하는’ 일에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후 베트남에 가서 ‘눈물 점’이라고 본인이 말했던 눈 밑의 점을 뺐고, 지금은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강사’로 당진 근처의 초등학교에 나가 베트남 문화를 소개한다. 국적을 취득할 때 당진 문화원의 문화 프로그램 팀장이었던 백숙현 씨의 성씨를 받아 백 보현이라는 한국 이름을 스스로에게 주었을 정도로 백숙현 팀장과의 관계가 중요한 그녀는 (그녀와 로잘리나 씨는 백숙현 팀장을 언니, 친구, 또는 자기 아이들의 어머니로 여긴다) 스스로도 근처에 있는 베트남 ‘동생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다문화가족 상담가로서의 역할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책임’과 상호인정이 중요해진,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 역할을 요구하는 이 새로운 삶의 국면은 특히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그녀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자신이 9살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기에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다’고 또 다시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는 앞으로 베트남 문화를 열심히 공부해 한국문화에 접속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이미 일정 부분 한국문화에 익숙해진 사람의 시선으로 베트남 문화를 보게 될 것임을 예감하며, ‘문화 번역가’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이제 막 한국에 도착한 베트남 ‘어린 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삶을 매개하는데서 두드러진다. 그녀는 한국의 농촌식 가부장제와 협상해 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는 거의 ‘한국여자’로 자신을 이해하는 위치에서 힘든 남편에게 친절으로 송금 보낼 것을 주장하거나 가정을 제대로 일궈보려고 애쓰는 대신 불평이 많은 어린 베트남 여성들의 ‘철없음’이 몹시 걱정스러워 나름대로 적극적인 개입도 한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비판의 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 장벽 때문에 고생하는 근처의 베트남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녀는 언제나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주소가 되었다.

(가장 중재하기 힘든 경우가 ‘며느리가 왜 내 아들과 손도 안 잡고 잠자리를 하지 않느냐’고 묻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하는 베트남 여성의 경우이다. 더군다나 그 남편이 ‘장애’가 있는, 말할 때마다 침도 조금씩 흘리는 남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까지 개입되어 서로에게 어떤 말로 (‘통역’이 아닌)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로잘리나 씨

한국에 와서 살면서 첫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거의 문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로잘리나는 당진 문화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이 비디오 워크숍에 참석함으로써 비로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전혀 한국어를 배우거나 사용할 기회가 없어 침묵의 어둠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던 그녀는 이 비디오 작업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말을 걸기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이 당진 문화원은 그녀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친숙한 장소가 되었다. 이곳에서 다른 이주여성들과 공동작업을 하면서 이곳은 그녀에게 친숙한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문화원 행사가 있으면 함께 워크숍에 참석했던 보현 씨와 같이 윗놀이도 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투포환도 던져본다.

그녀는 필리핀에 있을 때 부인을 때리는 남편을 많이 봐 왔다. 그래서 이제껏 한번도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은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좋은 삶 (good life)은 지금처럼 그녀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이다. 남편의 사진을 보고 한국으로 결혼해 올 생각을 할 때 그녀는 good life를 기대했다. 거의 10 여년을 소통 없이 침묵의 어둠 속에 갇혀 지냈던 그녀는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 딸을 보면서 세대의 차이도 느끼는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머니는 매우 엄격하셨다. 바깥에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녀는 다니던 대학을 1년 만에 그만두고 처음에는 빚을 갚기 위해, 다음에는 동생들 대학에 보내고 싶어 각각 낯선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4년, 5년을 이주 노동자로 일을 해야 했다. 처음 싱가포르에 갈 때는 23살이라는 나이가 이주노동자로 입국할 수 없는 어린 나이어서 나이를 조금 높여야 했다.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을 대학 보내고 싶어 홍콩에 가서 5년이나 일했지만 두 동생은 모두 결혼을 하는 바람에 대학을 마치지 못했다. 그녀가 이야기 하는 도중 가장 강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었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의 삶을 두 동생의 삶 속에 몽땅 투자했던 것이 아닐까. 두 동생이 대학을 나왔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았을 텐데, 결혼을 먼저 해 버리느라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그녀의 청춘, 혹은 영원히 지연되기만 했을 뿐 한번도 와 주지 않았던 그녀의 미래를 본다.

로잘리나는 SBS하고 KBS 9시 뉴스에 나왔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찾아가는 나눔 영화관> 이 여기에 와서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영화상영회를 했어요. 문화연대에서 그쪽에 정보를 줘서 취재를 나온 것. 그서 영화들은 먼저 봤으니까 로잘리나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해서 9시 뉴스시간에 방송되었다. “중요한 인물만 9시 뉴스에 나가는 건데 우리 로잘리나가 그냥.. 양대 뉴스를 다..” 라고 백 팀장은 말한다.

로잘리나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는 느낌을 가진 뒤로 인생이 ‘전달만

해 졌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 뒤로 (그전에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삶에서) 그녀는 한국사회에 좀 더 통합되었다고 느낀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아, 나 당신 TV에서 봤다. 라디오에서 들었다’라고 말을 해 준다. 그러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TV도 못보았는데, 라디오도 못 들었는데, 라고 말한다. 그들은 ‘당신 참 용기있다’고 말해준다. 나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그들의 이러한 ‘인정의 반응은’ 그녀에게 힘을 북돋아준다. ”내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정말 너무나 멋집니다. (For my first in my life.. It's very wonderful)“

“로잘리나가 사는 데는 시골이고, 더군다나 구씨들이 사는 집성촌이다...옛날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게 많이 남아있는 텐데, 그동안은 로잘리나의 존재감이 없었지.. 그런데 이제 로잘리나가 뉴스에 나오니까 갑자기 로잘리나한테 아는 체를 하고..

... 말을 건네고 봤다고 아주 좋다고 그러니깐, 그때는 그림자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림자 같게 하나의 그, 우리가 그림에서 튀어나오듯이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것은 로잘리나가 새로 획득한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백숙현 팀장이 기뻐하는 말이다.

특히 ‘자기 드러내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형성 비디오 워크숍

자신의 이주과정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해 성찰하는 ‘자기 드러내기 / 자신의 목소리 내기’를 시도함으로써 이 워크숍에 참석했던 여성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결혼이주를 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의 기대, 실망, 좌절, 협상 등은 무엇이었는가를 담담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들은 한국사회에, 한국인들에 대해 ‘나를 당신들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나의 관점에서 보아 달라’고 제안한다. Video 제작이 끝났을 때 이들 중 몇 명은 앞으로는 좀 더 확고한 자기 결정권과 한국사회에의 소속감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예를 들어 일본인 여성 Hiroko는 한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왜 하지 못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은 ‘힘내라’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살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며 ‘한국 아줌마’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영화를 끝맺는다. Hiroko씨는 앞으로 video producer로서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한다. 교육을 담당했던 김진열 filmmaker는 그런 Hiroko씨와 함께 앞으로 공동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나와의 인터뷰 때) 밝혔다. Hiroko씨가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video는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이다.

김진열 감독은 카메라가 소수자들에게는 특히 자기 긍정을 가능케 하는 ‘도구’임을 강조하면서 ‘카메라를 든 여성’은 사물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나의

시선'으로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힘든 실존적 상황에서 카메라는 일종의 '위로'의 역할도 해 주는데, 이것은 신뢰에 기반을 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깊은 속내가 펼쳐질 수 있는 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카메라 앞이 아니었으면 서로 은폐시키거나 피해 갔을 일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펼쳐 놓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준다. 그래서 디지털 다이어리처럼 카메라는 일종의 '일기 쓰기'적 형태를 지닌 자기언어표현의 모습을 띠는 동시에 훌륭한 소모임의 추동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횡성의 경우 카메라의 이런 기능은 특히 워크숍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숨겨진 갈등이 드러나는 계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점에 횡성에 도착했던 이들은 식사도 같이 하고 외출도 같이 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집단을 형성하고 있지만, 일상의 공유가 반드시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성으로 진척되는 것은 아니듯이 이들 사이에도 오히려 날카로운 긴장감이 늘 터져 나올 때를 기다리는 작은 폭탄처럼 부정적인 에너지로 고여 있었는데,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관계성의 속성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조금쯤은 공론화될 수 있었다. 지역사회로의 통합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주여성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강요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왜곡된 형태를 띠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서로를 모방할 경우 (이것은 비디오 워크숍에 참석한 횡성 이주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양상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상호 역량강화로 진행되기보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무의식적인 분노가 누적되고 서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이주해 와 살 때 필요한 통합은 단순히 기능적이거나 물리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과 관련된다. 통합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정체성의 획득이기 때문이다.

횡성 이주여성 비디오 워크숍은 각각의 이주여성들이 한국 지역 사회에 관해 하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는 계기였던 동시에 이주여성들 사이에서 제대로 발화되지 못했던 불편한 느낌들, 관계의 구조적 모순 등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였다. 그러니까 비디오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시작'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워크숍이 끝난 다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종의 '소모임' 형태로 남아 서로 역량강화를 해 줄 수 있는 집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이 횡성 비디오 워크숍이 남긴 질문이다. 히로코 씨처럼 계속 비디오 작업가로 남아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개별적인 성과 외에도 집단적인 미래가 기획될 수 있을 때 이주여성들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시민적 주체로서의) 주체화 과정, 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는 말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매우 지난하고 때로는 절망적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잘 할 수 있어도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물어볼 경우, 이들은 종종 ‘결코 완벽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절망감으로 토로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의 교육과 함께 비언어적 소통/표현 매체를 문화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주민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주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고민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생활 속에 깃들여 있는 문화, 즉 삶의 일상적 수행과 그 속에서 구성되는 자아와 타자의 상호 인정 관계 등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스럽게 비교문화적 이해(cross-cultural understanding)를 전제로 하는 한편, 보다 성숙한 비교 문화적 이해를 추구하게 만든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이주민들이 문화생산의 주체가 되는 단계로 진일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 상호 간의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와 교류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적 동종성에 대한 환원주의적 가정에 기반을 두는 문화적 다원주의는 집단의 정체성을 문화와 결합시키면서 그 집단을 열등하게 만드는 담론들과 결합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는 평등주의적 절차의 틀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공적 영역이 ‘동화되지 않은 타자’에 대해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으로 다른, 동화되지 않은 타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경계, 타자성의 구조를 만들어낼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체성을 해체함으로써 그때 드러나는 다양한 이질성들과 차이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공유된 경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민 온 여성들은 각기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등의 문화적 특성을 지닌다고 여겨지지만 이것 또한 위험한 집단화이며, 이들을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영토와도 종족과도 연관성이 없는 소수자 그룹으로 집단화하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결혼이민자로서 겪는 차별적 경험이 있으며, 그러는 한 결혼이민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왕배(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 서울: 한울
- 박수미/선보영/김진옥(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황윤주(2008), 「결혼이민자 여성 농촌지역 유입과 ‘적응’ 경험」, 숙명여대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 이주여성인권연대 외(2008), 「법무부의 사회“통합”이수제를 다시 묻다」, 자료집.
- 한국염(2008), 「사회통합프로그램 추진, 이주여성 인권지향적이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이기호(2003), 「생활정치 관점에서 본 한일간 시민운동의 비교연구」, 『시민사회와 NGO』 창간호.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Ong, Aihwa(2007), *Neoliberalism as Excep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Agamben, Giorgio(2002), *Homo sacer : die souveraene Macht und das nackte Leben*, aus dem Italienischen von Hubert Thuri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 Fraser, Nancy·Honneth, Axel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London & New York: Verso.
- 김현미/김민정/김정선(2008),
- 김영옥 외(2005), 『사회문화예술프로그램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조현성 외(2008),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파울루 프레이리(2007), 『페다고지』, 남경태 옮김, 서울: 그린비
- 아우구스토 보알(2003), 『배우와 일반인을 위한 연기 훈련』, 이효원 옮김, 서울: 울력
- _____ (1985), 『민중연극론』, 민혜숙 옮김, 서울: 창작과비평사
- TASAT(2005), *Don't coll me a foreign Bride*, Taiwan
- Yadrung, Chio(2008), My Journey of Empowerment as an Immigrant Woman in TransAsia Sisters Association, Taiwan, <http://cc.shu.edu.tw/~e62?HRIM/cf06/panel43e.html>.
- Alund, Aleksandra(1999), “Feminism, Multiculturalism, Essentialism”, in: Yuval-Davis, Nira·Werbner, Pnina(ed.), *Women, Citizenship and Difference*, London: New York: St. Martin's Press.

주제 3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장 미 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 차

- 제 1장 서 론
- 제 2장 이론적 배경
- 제 3장 다문화사회의 미래
- 제 4장 다문화사회를 향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현상과 인력부족이라는 국내적 문제와 전지구적인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간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사회에서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주민, 외국국적 동포 등이 증가하면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시점이야말로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화가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점검해볼 시점이다. 이처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나타난 일부 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2006년에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 남성들의 만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주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면에서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사회적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서 치루어야 하는 부담보다는 사회적 수익이 크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면서 한국사회가 치루어야 할 사회적 위험과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아 온 감이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체 인구비중 중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해가고 있는 서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소요, 폭동,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외국인들의 실업문제, 외국인주거지역의 슬럼화 현상, 원주민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나 배타적 태도,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현상, 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사회적응 문제, 빈곤화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리라고 본다. 사회 내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기는 다문화간 갈등은 후기근대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O'Brien, 1996: 1070). 아울러 현재 한국의 이주정책의 특성으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합법외국인과 불법외국인을 이원화시켜 차별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배제하고 있는 대상에 따른 정책의 분화성을 지목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다문화정책이 현재처럼 진행된다면 중국에는 국가가 부담해야될 소지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내의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사회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인종적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며, 가족 내에서 사용되는 어머니의 언어와 학교생활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음식예절이나 혼례, 제사의례와 같이 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사회적 규범 자체도 새로운 성찰과 선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극소화할 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포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다문화적 포용성을 지닌 사회란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위나 자원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지칭한다(전성우, 1993; Philips, 2003; van der Maesen, 2005). 인종과 상관없이 한 사회 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인종과 집단들이 서로 어울리고 공존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포용력을 갖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언어와 문화, 인종이 다른 소수자라는 이유로 나머지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배제당한다면 그 사회는 사회내의 특정 성원들을 ‘배제시키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면, 사회 성원들이 자신의 인종이나 국적, 문화적 차이와 무관하게 그가 사회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제도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향후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 예측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2절. 다문화 사회의 미래와 사회적 문제

교통의 발달과 국가간 교역의 증대로 인해 21세기는 이주의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주하고 있다. 2006년도 UN의 자료에 따르면 출생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비중은 2005년을 기준으로 35년 전에 비해서 두 배로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규모면에서 보면 전세계 인구 35명당 1명은 출신국을 떠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 각 국가별 소득과 생활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는 한 좀 더 나은 생활환경과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전지구적인 차원의 국가간 인구이동 다시 말하면 이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현재 전세계인구 중 35명당 1명이 국제이주를 경험하였다. 전세계의 이주인구 중에서 아시아지역의 이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는 35%였던 것이 2000년에는 25%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이주인구의 유입국은 사회인프라의 건설이 한창인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Kymilicka, 1996), 1980년대부터 새롭게 산업화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지역의 주요 이민 수용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으면서 이들 국가로의 이주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상황, 지역분쟁, 종교분쟁, 이주에 대한 본국정부의 태도나 정책 등이 이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이주민의 직업구성의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건설업에 집중되었다가 서비스업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부문으로 변화하면서 여성이주자의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World Migration, 2005: 290).

〈표 1〉 인구 증가 및 감소에 대한 국제 이주의 기여율 1970~1975와 1995~2000

주요지역	1970~1975				1995~2000			
	순 이주율 (1,000명당)	자연증가율 (1,000명당)	인구증가율 (1,000명당)	순 이주의 자연증가율	순 이주율 (1,000명당)	자연증가율 (1,000명당)	인구증가율 (1,000명당)	순 이주의 자연증가율
선진국	1.0	6.8	7.8	14.7	2.2	1.2	3.4	183.3
개발도상국	-0.4	24.0	23.6	-1.7	-0.6	16.7	16.1	-3.3
아프리카	-1.2	27.8	26.6	-4.3	-0.5	24.0	23.5	-2.1
아시아	-0.1	33.9	33.8	-0.3	-0.4	14.5	14.1	-2.8
라틴아메리카 와 카리브해	-1.1	36.5	35.4	-3.0	-1.2	16.8	15.6	-7.1
북미	3.0	6.7	9.7	44.8	4.6	6.1	10.7	75.4
유럽	0.3	5.6	5.9	5.4	1.4	-1.2	0.2	
오세아니아	6.4	14.3	20.7	44.8	3.0	11.1	14.1	27.0

자료 :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2 Revision, Volume I; Comprehensive Tables, United Nations publications, Sales No. E. 03. XⅢ. 6, 2003.

전세계적인 이주의 증가는 개별 국가의 수준에서 보면 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인종이 점차 다양화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이동은 유입국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의 충당, 경제성장과 고용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만성적인 빈곤과 실업률, 일할 수 있는 적은 기회, 낮은 생활수준에 시달리는 유출국의 입장에서는 자국내 송금의 증가로 인한 국가적 수입의 증대와 개인적 빈곤의 해소라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므로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구유출국과 유입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de Hann 1999, Sakeldon, 2002; Ellis, 2003).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로의 이주 희망이유는 자국 내에 있을 때보다 좀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 보다 나은 생활수준 및 정치적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민의 급증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는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들에 대한 다수집단의 인종편견과 차별로 인한 소수인종집단의 사회부적응, 다수와 소수 인종집단간의 사회갈등과 부적응의 심화라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정부 주도 하에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이민 및 조기유학, 고아수출, 파병 등의 방식으로 국가간 인력이동의 양식이 다양화되고, 이주하는 인구의 크기도 과거에 비해서 증대하는 이주의 전지구적인 확대를 보편적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 다음 이 미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은 다문화주의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국사회도 다문화화를 사회통합의 이념과 정책으로 삼아서 국제적 이미지를 고양하고자 한 점도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촉진시킨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희정, 2007: 75).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한 이유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 정부와 시민운동단체들 간의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정부가 시민운동단체들의 주장과 견해를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도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다(김희정, 2007: 15). 마지막으로 법무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간의 세력 확대 와 경쟁의 과정속에서 출입국 및 외국인력활용정책에 불과했던 외국인 정책을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다문화 정책으로 확대된 것들이(이혜정, 2007: 238-239)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러한 변화는 단일민족에 기초한 동질적인 문화집단으로서의 한국사회라는 오랜 통념을 해체해 나갔으며, “소수자 또는 주변인들의 발언권 확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에 본격적인 균열을 내었고, 결국 ‘한국사회를 하나의 균질적인 문화공간으로 바라보았던 지배적 인지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받고 있다(이상길, 안지현: 2007: 110).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문화로의 소수문화의 특수성을 배제하는 다수문화 보편주의의 성향을 띠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없는 다문화주의인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하나의 관리 기제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정부와 대다수의 한국인이 다문화주의 도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의 권리나 지위문제보다는 다문화주의 실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내지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 대상을 명백하게 합법 외국인과 불법 외국인으로 이분화하여 관리·통제한다는 측면과 문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은 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윤인진, 2008: 85).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종의 체류와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한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단일민족주의, 혈통주의, 순혈주의적 사고방식은 변화하지 않고 남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고압적 자세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들 중에서도 유럽계 백인에게만 호의적이고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지역적 차별주의적 태도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결국 다문화담론과 정책은 만연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다른 문화가 지닌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저출산과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라는 현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중 문제의 해법으로 떠오르면서 일반적인 이주민과 분리되어 다문화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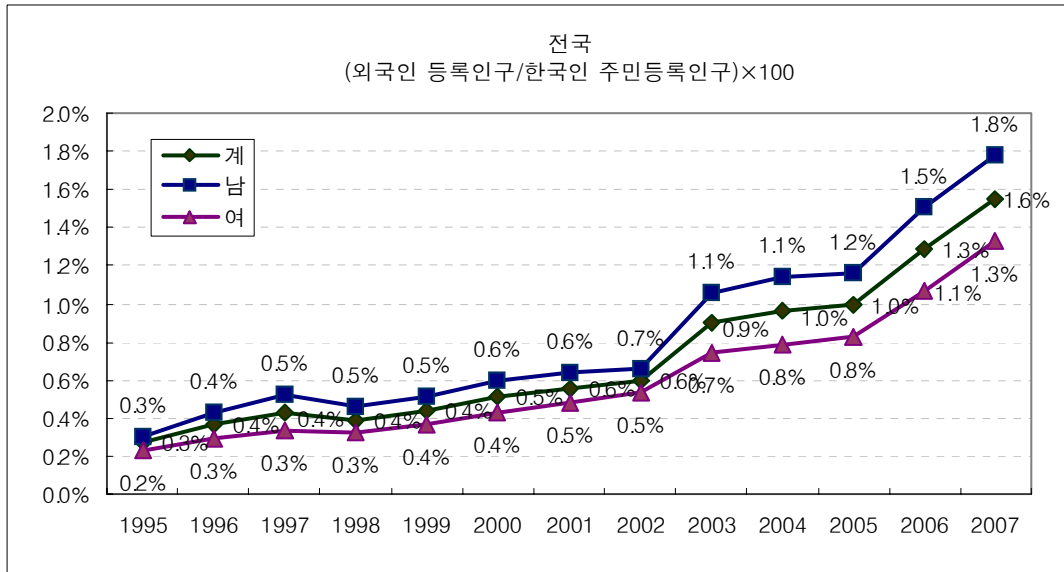
과 정책의 주요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족에서는 부계부권중심의 가족주의가 남아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로부터 더 잘 사는 나라로 사랑과 돌봄이 수입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폭이 둔화된 반면에 인구대비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은 2006년을 기준으로 1.88%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6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910,149명으로 전년도보다 21.8%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으로 인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증가를 들 수 있다. 1983년 2.1명이던 합계출산율은 1999년에 1.42명으로, 2005년도에는 1.0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50년 한국의 전체인구는 4,235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구전체가 고령화됨으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인 유입으로 대체하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었던 과거의 한국사회는 점점 더 다인종으로 구성된 사회(multiracial and multiethnic society)로 변모해갈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과 사회적 보호프로그램을 실시해왔던 정부 정책 변화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불황과 같은 급격한 경기변화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의 부족과 같은 상황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IMF위기 이후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거나 외국인 노동력의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주요 체류자격의 연도별 변화추이로 유학생, 취업목적근로자(단순인력, 전문인력)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체류외국인	49,507	269,641	491,324	747,467	910,149
인 구	44,553천명	44,553천명	45,985천명	48,294천명	48,297천명
인구대비(%)	0.11	0.60	1.07	1.55	1.88

※ 인구 및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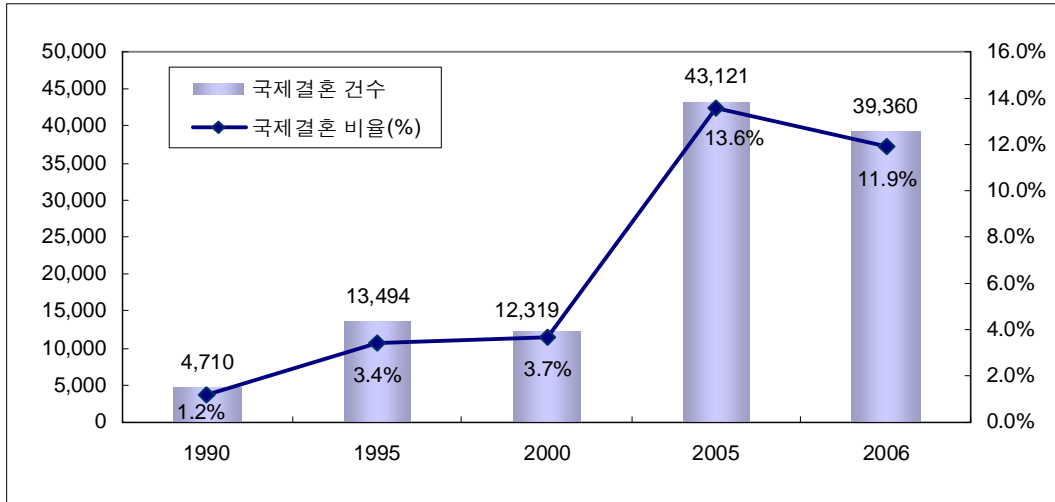


이주민 변화의 또 다른 축은 사회적으로 낙후된 농민과 도시저소득층 미혼남성과 결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의 증가추세는 다음의 <표 3>에 잘 드러나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06.4.1 ~ 4.30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를 제외한 90일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합·불법체류 구분 없이 조사, 국적 취득자 포함)이 시·군·구별로 평균 2,2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는 **주민등록인구의 1.1%**에 해당하는 **536,62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외국인근로자가 47.6%**인 255,314명, **국제결혼이주자가 12.2%**인 65,243명, 국제결혼가정자녀가 4.7%인 25,246명이었고, 외국인 중 국적취득자는 39,525명이었다. **외국인근로자는 남성이 67%**인 반면,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84.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적별 분포의 변화추세를 보면 최근 들어 특정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집중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국적이 52.4%(조선족 36.4% 포함), 동남아 국적이 23.7%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76.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는 동남아 출신자(여성 97.5%)가 '06년 12천명에서 '07년 22천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81.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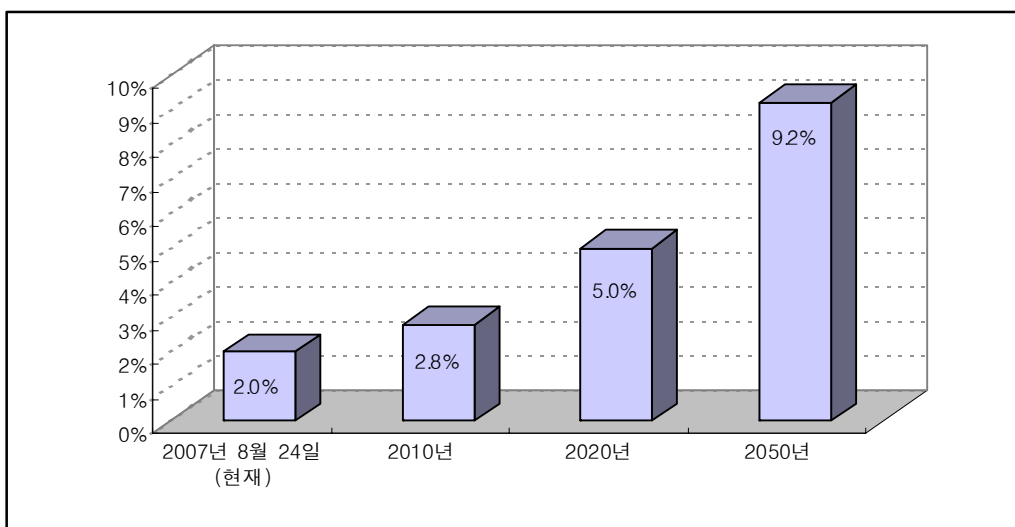
〈표 3〉 국제결혼 증가추이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총 결혼건수	399,312	398,494	334,030	316,375	332,752
국제결혼 건수	4,710	13,494	12,319	43,121	39,360
국제결혼 비율(%)	1.2	3.4	3.7	13.6	11.9



자료 : 통계청, 1995~2007년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201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2.8%,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2%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은 양적인 비중이 증대해가는 이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배제됨으로써 인해서 야기될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해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1〉 한국사회 인구전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추계

제 2장에서 살펴보게 될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담론들은 이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한 선진사회의 경험에서 나온 고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만일 사회전체의 구성원이 다수의 민족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재의 변화양상에 성공적으로 대처한다면 한국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가진 새롭고 활기찬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대처에 실패한다면 현재보다 심각한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단계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점을 예측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1절. 다문화주의의 개념

비교적 최근 들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경우 현재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적고 아직 이들 가족의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내 아동의 사회적응문제는 현재까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이 성장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때까지 한국사회가 성공적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사회갈등의 요인이나 혹은 사회적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다문화주의란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 또는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세계주의”나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을 지칭하며, 현상적으로는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을 가리킨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1)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윤인진, 2008: 73), 2)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Taylor, 1992), 3)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형평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Tropper, 1999), 4)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 보다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정상준, 1995: 81), 5) 주류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문화에 기반을 둔 다수집단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 간의 평화스런 공존을 추구하는 것(강회원, 2006) 등을 다양하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다문화주의의 출현은 1960년대 들어서 소수집단의 이해가 정치적 영역에서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도록 한 정체성의 정치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한다(Robbin, 2000: 9).

내용상 다문화사회와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듯이 국가에 따라서 다문화정책을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 범주화가 가능한데,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1)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는가, 2) 학교의 커리큘럼에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가, 3) 대중매체에 인종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4) 이중적 시민권(dual citizenship)¹⁾을 허용하고 있는가, 5) 이주자들의 문화적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이 존재하는가, 6) 이중언어교육이나 모국어교육을 위한 지원기금이 존재하는가, 7) 차별받는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존재하는가(Banting & Kymlicka, 2006)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국가들을 구분할 때 가장 강한 의미에서 다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를 들 수 있다.

〈표 4〉 다문화정책의 강약에 따른 범주화

다문화정책의 강도	해당국가(OECD)
강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	벨기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영국
약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자료: Banting & Kymlicka(eds.), 2006.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우리가 다문화정책의 강약에 따라 국가를 분류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외국인 이주민들이 단순히 주류사회로의 일방적인 통합되어 있는가만을 문제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류사회로의 통합만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를 재문화화시키는 동시에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에 대한 주류사회의 이해와 개방성이다.

1) 이중적 시민권이란 이주민이 자신의 출신국가와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드린다는 점에서 한민족으로의 동화(Naturalization)시키는 정책과 구분된다.

2절. 연구의 체계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대책과 농어촌지역 남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임기의 젊은’ 여성을, 그리고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부 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젊고 건강한’ 노동력에 한해서 제한적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송출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내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취업난이나 인구과밀의 문제 그리고 개인이나 개별가구 수준의 빈곤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민수용국인 한국이나 송출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all-win-no-lose)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유입된 외국인들은 언제까지나, 한국의 인력난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젊고 건강한’ 인력으로 남아 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이주정책은 잠재된 미래의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노령화되거나, 가족과 결별하여 단신으로 체류함으로써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담은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책무로 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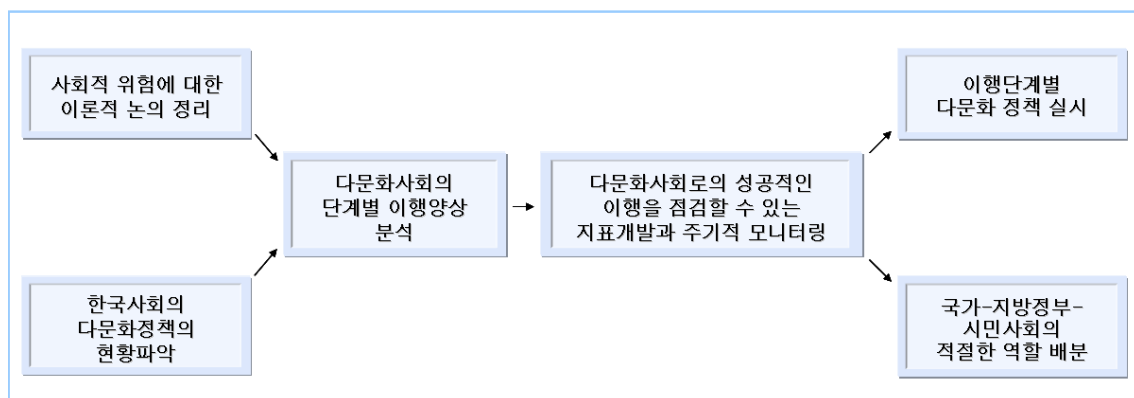
부계혈통주의와 혈연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미묘하게 공존하면서, 외국인 신부에 대해 우호적인 현재의 시각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각은 전체 이주민에게 확산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외국인 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타자화된 외국인들이 미래 한국사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확률은 높아진다. 그리고 현재는 수적으로 미약하고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데다 한국에서의 체재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신들이 겪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주민들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들이 사회내의 주류집단에 포섭되지 못함으로써 인해 사회통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질 것이다.

아직 이주초기인 한국사회의 경우 결혼이민자이든 외국인 근로자이든 개인단위로 입국이나 체류를 허가하고 있으나, 서구의 경우에서처럼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들이 본국의 가족들과의 결합권을 주장하게 되거나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다양한 경로로 결합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전체적인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게 되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규모는 얼마이며 이들이 각각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거주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주로 생겨나는 사회적 위험은 점차 통제불가능한 형태로 변모할 것이다.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면, 이주로 인해서 파생될 사회적 위험성은 국가 사회 전체가 떠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으로 구분해볼 때 예측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만일 성공적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문화 가족내에서 1)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족내 폭력 증대, 2) 다문화 가족내 의사소통의 단절, 3) 다문화 가족 자녀의 사회 적응 실패, 4) 다문화 가족 자녀가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사회전체의 문제집단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사회적응의 실패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본다면 사회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정체성, 가치, 규범에 동화되지 못하고 소수집단으로 전락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의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인해 인종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응집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주도하에 많은 시민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민족가족이 증가하고 이들 가족내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특성, 현재 한국의 이주정책이 초래할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한 예측에는 소홀히 해온 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겪게 될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단계별로 살펴보고, 단계별 위험관리의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지방정부-시민사회가 담당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다문화사회 사회위험의 연구체계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는 전지구화의 진전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용주의적 해결책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진정으로 지향해야하는 인권, 개인의 자유, 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관용과 같은 가치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편이다.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이주단계별로 구성해보면, 이주민이 전체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가시적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를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1단계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여러 민족이 함께 국가형성의 단계를 거친 국가를 제외하고 같은 인종이 함께 살던 동질적인

사회에 다른 인종이 등장하면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던 민족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혼란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압력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진정한 관용의 태도를 갖기 어려운 상당수의 주류사회의 시민들은 낯선 이민자를 타자화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과 차별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한국사회의 경우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환대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 태도라는 모순된 자세를 보이게 된다. 이행의 초기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타문화와 다른 인종에 대해 관용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인종적 소수집단은 자신감과 자부심이 부족하고 열등감에 가득 찬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변화에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인이 대중매체에서 불평등하거나 왜곡된 이미지로 비쳐질 경우 대중의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주초기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면서 파생될 장기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주초기에 독신으로 이주해왔던 이주민들이 체류기간의 연장에 따라 서서히 이주한 국가에서 가족을 형성하면서 출신국별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해 나가고 이들만의 집단적 거주지가 출현하면서 한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의 2단계를 거치게 된다. 한국사회는 본국의 가족과 재상봉권을 주장하거나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이주의 이행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순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주의 2단계에서는 다문화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장기간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가족구성원간의 무관심과 정서적 유대관계의 약화, 언어장벽으로 인한 가정 내 의사소통 기능의 약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보다 진전되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소수의 인종 공동체 주거지가 형성되었을 때 이 지역들이 사회내에서 게토화되거나 빈곤층 거주지역으로 고립될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인종에 따른 소득격차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불평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다문화가족내에서 성장한 2세가 사회에 진출하고 이주민 공동체가 재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사회가 정착하기 시작하는 3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주의 1단계와 2단계에서 생겨난 사회적 위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다문화사회는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주민 2세의 경우 가족 내에서 사회화를 통해 습득된 것과 주류사회의 문화 사이에서 인종적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에 대한 조세, 의료비와 교육비,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부담도 증대하게 된다. 이미 서구에서는 복지국가로의 이행과 다문화사회의 진전 사이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의가 시작하고 있다(Banting & Kymlicka, 2006). 가장 극단

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3단계의 사회적 위험으로는 주류집단으로부터 고립된 소수민족 집단의 범죄와 실업문제가 가시화되고, 한 사회 내에서 인종간 마찰이 증대하면서 사회적 일체감이 해체되고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이 집단적인 인종소요와 같은 형태로 표면화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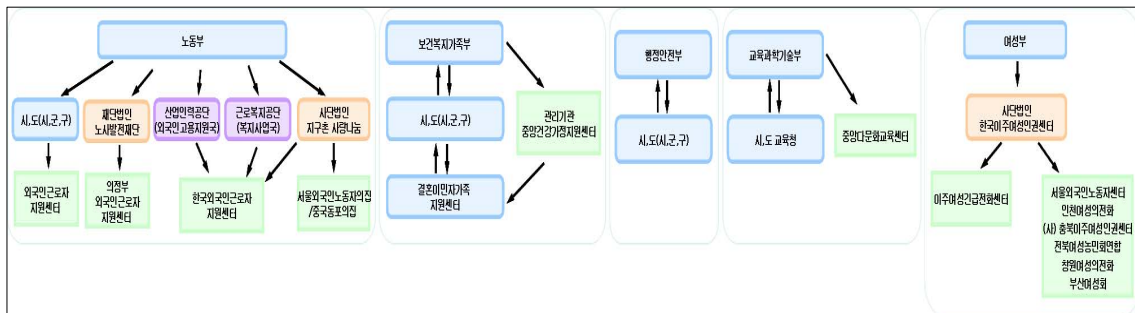
다문화사회로의 이행단계	현상	예측할 수 있는 사회문제
1단계: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	이주민이 전체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가시적 비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통용되던 민족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혼란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심리적 저항과 차별적 태도 -행동의 다양성이나 가치관의 상이에 따른 규범의식의 저하
2단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단계	다문화가족의 형성 -체류기간의 연장에 따라 독신의 이주자들이 서서히 가족을 형성, 출신국별 이주민 공동체 형성 (집단적 거주지 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내 가족구성원간의 무관심과 정서적 유대관계의 약화 -언어장벽으로 인한 가정 내의 의사소통기능의 약화 -다문화가족의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체현상 -소수의 인종공동체의 사회적 고립 혹은 사회적 빈곤계층화 -인종에 따른 소득격차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불평등 심화 -사회적 일체감의 해체
3단계: 다문화사회의 정착단계	다문화가족내에서 2세가 사회진출하면서 이주민 공동체 재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 2세의 인종적 정체성의 혼란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부담의 증대(조세, 의료비와 교육비,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부담) -이주민 2세의 경우 가족내에서 사회화를 통해 습득된 주류사회의 문화사회에서 혼란과 갈등, 이들 집단의 범죄와 실업문제 가시화 -인종간 사회적 마찰의 증대 -사회적 일체감의 해체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표면화(집단소요 등)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가중

〈그림 3〉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과 예측되는 사회적 문제

제 3장 다문화사회의 미래

1절. 한국사회 다문화정책의 현황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나 다른 인종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포용적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책수준에서 볼 때 현재 국가의 정책적 수준에서는 ‘다문화정책’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고 각 부처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관련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이주자를 오직 일시적 체류자로만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은 출입국관리에 한정시킨 종래의 정책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이주민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등장하게 된 보다 중요한 계기는 국제결혼의 급증과 함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사회적응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각 부처간의 경쟁으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개방성의 증진과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지위의 제한적 허용이라는 서로 지향점이 다른 정책이 실시되기도 한다.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의 실시와 같은 프로그램에 있어 동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주민 관련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다루어져야 할 수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주민 관련 정책은 상당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 다문화관리체계의 현황

현재의 다문화업무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부와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이주여성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부에서 분담하고 있다. 노동부는 각 지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고용지원국,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사업국을 통해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80개의 시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 도 교육청을 통해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전반적인 다문화교육을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다문화 가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책연구소에서 수행되었던 다문화관련 연구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소의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의 <외국인 100만 시대, 다문화이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시대의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 실태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등이 있다. 이외에도 대학연구소인 서울대 여성연구소와 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와 한양대 다문화연구소, 한성대 이민·인종문제연구소 등에서 다문화현상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민간기관으로는 한국여성재단이 이주여성가족친정방문사업 ‘날자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이주민 대상으로 상담, 라디오방송, 다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고용허가제 정착지원 및 상담통역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이주민 지역생활문화축제와 다문화캠프를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문화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는 다문화열린사회가 있다. 그 외에도 푸드뱅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와 이주여성사랑방과 어머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푸른시민연대, 다문화청소년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 자녀 지원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무지개청소년센터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와 이주여성긴급전화센터 1577-1366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있다.

〈표 5〉 다문화위험 관련 일선기관

구분	기관	기능	홈페이지	설립연도
일선 기관 (정책 집행)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 외 국이주민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전 수조사) 실시, 동남아 여성결혼이민자 부모 초청행 사 개최,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등	http://www.mopas.go.kr/gpms/index.jsp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민원처리, 출입국정보 제공, 고용지원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시·도 교육청	교육부-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 는 다문화교육 실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보건복지가족부 관리 하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기관)와 80개의 시군구센터 운영 중, 결혼이 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종합적 가족 지원 전달체계	http://tmfc.familynet.or.kr/	
	서울글로벌센터	거주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행정민원 (ex. 비자, 운전면허발급, 세무 등)을 상담해주고 비즈 니스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기관	http://global.seoul.go.kr/	2008년 01월 23일
	지방노동사무소	노동부-결혼이민자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통역서비스 제공	http://seoul.molab.go.kr/	
	고용지원센터, 여성워크넷	노동부-결혼이민자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통역서비스 제공	http://www.jobcenter.go.kr/ http://women.work.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외국인근로자 한국어시험, 취업교육, 취업 생활 지원, 전용보험제도 운영	http://www.hrdkorea.or.kr/index.html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노동부-자치단체-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 및 기업의 원활한 인력활용 등을 지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및 취업/창업 정보 제공	http://wrw.seoulwomen.or.kr/	2002년 9월 10일 개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자 통계산출, 출입국 관리 업무	http://www.womenfund.or.kr/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다문화시대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http://www.kihasa.re.kr/	1989년 기능통합 및 개칭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http://www.nypi.re.kr/	1993년 확대개편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http://www.kli.re.kr	1988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 외국인 100만 시대, 다문화이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http://www.kedi.re.kr/	1972년 8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 방안 연구	http://www.kice.re.kr/	1998년 10월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http://www.kcti.re.kr/	2002년

구분	기관	기능	홈페이지	설립연도
	국제노동협력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http://www.koilaf.org/	1997년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서울대학교)	- 효율적인 다문화 교육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인식 조사 연구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방향 연구	http://cmc.snu.ac.kr/	2007년 7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	http://www.kwdi.re.kr	1983년 4월
민간 기관	한국여성재단	124개 여성단체가 모여 설립한 민간 여성공익재단, 이주여성가족 친정방문사업 '날(NAL)자프로젝트'	http://www.womenfund.or.kr/	1999년 12월 06일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 라디오방송, 다문화학교 운영	http://www.afwc.or.kr/index.asp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노동부-(재)노사발전재단-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고용허가제 정착 지원, 상담통역사업, 교육사업, 문화복지사업, 지역네트워크 구축	http://www.ufc.or.kr/	2007년 7월 25일 센터 개소
	(사)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건강권, 인권 옹호활동 수행 의료지원, 교육활동, 홍보출판, 조사연구, 행사/연대활동, 해외지원사업	http://www.mumk.org	1999년 9월 창립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시 성동구-(사)세계선린회-교육사업, 문화사업, 상담사업, 의료사업, 지역복지사업, 지구촌 학교, 소모임	http://www.smwc.or.kr/	2001년 12월 14일 개관
	(사) 다문화월린사회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 실현, Migrants' Arirang, 이주민지역생활문화축제, 다문화캠프, 외국인 노동자 문화가이드북	http://www.multicos.co.kr/	2006년 3월 설립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푸드뱅크사업, 지역복지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http://www.miwel.or.kr/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노동 생활 상담, 교육사업, 제도개선활동, 복지사업, 문화활동, 이주여성상담실	http://migrant114.org/	2001년 2월 개소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노동자사업, 인권평화교육사업, 결혼이민자사업	http://www.foa2002.or.kr/	2002년 6월 창립모임
	안산이주민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안산외국인 노동자 쉼터, 외국인노동자농장 운영, 인권보장활동, 협동운동, 복지활동, 교육활동, 문화친교 활동, 국제 연대활동	http://www.migrant.or.kr	199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서울 서남노회와 부천노회에서 설립
	푸른시민연대	어머니학교, 이주노동자센터, 이주여성사랑방 운영	http://www.epurun.org/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이주 정책 개발, 이주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 증진, 질서 있는 이주를 통한 사회 경제적 발전 도모	http://www.iom.or.kr/	1951년 PICMME 창설 이후 ICEM으로 개칭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 확보, 39개 상담지원센터 운영	http://jcmk.org/	1995년 7월 2일 창립
	아시아재단	국제 교류, 정책 세미나, 연구 조사	http://www.asiafoundation.or.kr/	1954년 한국사업 시작

구분	기관	기능	홈페이지	설립연도
	무지개청소년센터	지역사회 종합지원사업(다문화청소년지원센터, 새터민,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자녀 지원), 종합정보 서비스사업, 정책개발 및 연대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사업	http://www.rainbowyouth.or.kr/	2006년 센터 설립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상담활동, 교육활동,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실 및 컴퓨터교실 운영, 쉼터 운영, 의료활동, 공동체활동, 대안학교 추진, 아자이주아동센터 운영, 문화활동, 연구활동, 종교활동, 연대활동	http://cafe.naver.com/migrant114	1996년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소 운영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노동부-교육, 무료진료, 상담, 행사 지원, 정보공유포털(http://migrant.kr/) 운영,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인터넷 방송(http://www.mntv.net/) 운영	http://www.migrantok.org/	2004년 12월 23일 센터 개소
	(사) 지구촌 사랑나눔	노동부-다문화복지센터 운영		2000년 2월 11일 설립인가
	서울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사) 지구촌 사랑나눔-노동상담, 의료상담, 생활상담, 교류/문화사업, 쉼터운영, 한글/컴퓨터교육	http://www.g4w.net/	1994년 04월 10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 시행, 정책개발 및 건의	http://www.mwkw.org/	2005년 창립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1차 한국어와 한국문화 온라인 교육, 2차 배우자 출신국가의 문화 교육	http://e-campaign.kdu.edu/	2007년 전남, 경북 시범도로 시행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관리 위탁-상담, 모성보호, 쉼터, 교육/문화, 의료, 국제결혼가정지원, 정책과 홍보 이주여성긴급전화센터(1577-1366) 운영 (http://www.wm1366.or.kr/)	http://www.wmigrant.org/	2002년 비영리단체 등록 2005년 사단법인 설립인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기관-상담, 쉼터 운영, 교육, 의료, 법제도 개선운동	http://ijunodong.prok.org/	1997년 9월 2일 창립
	인천여성의 전화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기관-상담, 쉼터운영	http://www.hotline21.or.kr/	
	(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기관-미술교실운영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기관-여성농민의 자조적 조직	http://www.jbyeonong.org/	1992년 창립
	창원여성의전화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기관-상담, 쉼터운영, 이주여성멘토링학교		
	부산여성회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기관-여성의 권익보호 활동	http://www.busanwomen.or.kr/	1995년 창립
	(사)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국제학교 운영	http://www.damunhwa.or.kr/kr/	
	(사) 국경없는 마을	다문화 공동체 운동단체, 다문화사회교육원, 다문화컨텐츠개발원, 국경없는마을훈련원 운영	http://www.bvillage.org/	2006년 7월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회복지관에서 운영,		

구분	기관	기능	홈페이지	설립연도
학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한국여성에 관한 제반 연구 수행 이주여성	http://ewhawoman.or.kr/kwi/index.php	1977년 3월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다양한 여성관련 주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조사연구 와 이론개발	http://igender.snu.ac.kr/	2001년 9월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모델 개발, 다문화가족 네트 워크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http://www.mcfc.or.kr/	2006년 8월
	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 현상 및 공존을 위한 각종 대안마련과 지식 의 축적과 교환을 진행 중임	http://multiculture.re.kr/	2007년 8월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기관	http://kola.korea.ac.kr/klcc/	1986년 3월
	한성대학교 이민·인종 문제연구소	각국의 이민현상과 인종문제에 대한 연구	http://home.freechal.com/multiculturalisme/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다문화관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여성문제에 관련된 서적간행, 연구 자료의 조사 및 수집, 심포지엄, 학술세미나 개최 및 전 세계 여성 관련 학술교류	http://asianfem.sookmyung.ac.kr/	1990년 9월

각 부처의 현행 이주민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다문화정책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문화이해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다문화축제와 지역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이주민과 내국민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07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관련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국 80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이주여성이나 자녀들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일반학생,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나 학급별로 다문화시범학교를 지정하여 다문화가정 2세들의 증가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방안을 강구 중이다.

최근에 발표된 다문화가족관련 정책을 정리해보면 2006년도에 14개 부처 및 위원회에서 발표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교육인적자원회에서는 한국을 문화적 용해의 장(Cultural Melting Pot)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 아래 문화 민주적 통합(Cultural Democratic Integration)을 다문화정책의 향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회비전 2030>에서는 세계와 교류

하는 다문화사회, 다시 말해서 차별과 배제가 없는 다문화사회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가 지향해야할 바라고 선포하였다.

2절. 다문화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 지표

그렇다면 한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평가·측정하고, 어떻게 위험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할 것인가?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수집이 필요하나, 현재는 초보적인 출입국통계자료, 양적규모, 지역적 분포에 관한 통계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의 국제이주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국내이주보다는 해외로의 이주에 관한 통계가 먼저 수집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81~2005년 사이에 외교통상부에서 수집한 이주목적별 해외이주신고자 통계자료와²⁾ 통계청 통계정보국 행정정보팀에서 국가별로 수집하고 있는 한국재외동포 현황(1993~2005년)이 있다.

외국인의 이주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통계청에서 2005년도에 실시된 인구총조사(전수부문) 성/연령별 외국인(시도별), 국적/성/연령별 외국인(전국), 성/국적별 외국인(시도), 국적/성/직업(대분류)별 외국인(전국), 국적/성/교육정도별 외국인(전국)의 통계들이 수집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통계는 이주민의 성별/국가별/연령별 분포를 알 수 있는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외에도 각 시·군·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리실에서 구·시·군별 외국인등록인구(1992~2007년)를 파악하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통계로는 통계청에서 1990~2006년까지 수집한 외국인배우자 국가별/국제결혼 연도별 통계자료(1990~2006년)가 있다. 그리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통계연보>에는 보다 자세한 이주현황이 파악되어 있다. 출입국자 현황, 수, 연도 및 월별 추세, 체류자격에 따른 분류, 남녀의 연령에 따른 분류, 국적에 따른 분류, 출국 외국인의 체류기간별 분류, 국적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출입국 현황, 체류자격별 현황, 단기 및 장기 외국인 현황, 국적취득, 상실 및 이탈 현황, 외국국적 동포의 연도별 및 체류자격별 동포 현황, 난민 통계, 연도별/지역별/국적별 결혼이민자 통계,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등이 현재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주로 이주민의 양적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전반적인 이주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보다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나 정책적 지원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센서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통계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정국가 출신이나 각 인종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

2) 출처, 「외교백서」 각년도.

은 적을 수밖에 없다. 소수의 사람들만 표본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출신국가별 인구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과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나 분석을 하는 데 난점이 있다(Robin, 2000: 11).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주민들과 관련된 정책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인구센서스에 이주민과 관련된 조사항목을 추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이며, 이 경우 조사항목에 필요한 통계항목을 포함시켜 보다 자세한 이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부처별 독자적으로 이주민관련 통계를 생산할 경우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주민관련 통계수집업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이주민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현황, 경제, 교육, 가족, 건강, 문화 정도의 영역별로 분화된 통계가 필요하며, 출입국현황이나 이주민의 양적인 분포에 관한 정보를 넘어서 교육, 직업분포,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알려주는 보다 다양한 통계지표가 수집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정도별 외국인과 직업별 외국인의 분포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다문화관련 정책의 수요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진전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이주민관련 통계지표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기초자료만 수집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보다 상세한 지표의 생산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의 가족형태별 분포나 전체 혼인건수와 이혼건수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다문화가족의 이혼사유별 이혼율이나 구성비를 알려주는 통계지표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내의 평균 사망률이나 유병율과 이주민의 사망률이나 유병율 비교를 통해서 이들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어떠한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의 문화관련 통계는 진정한 다문화사회의 이행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한국어구사능력에 대한 지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많은 다문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주민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초통계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해 나갈 때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전되어가는 정도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표 6〉 다문화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해 생산이 필요한 지표

영역	지표명	조사대상	자료생산부처	현재의 생산여부 및 생산주기와 단위
이주 현황	연도별 및 체류자격과 국적별 출입국 현황	합법체류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외국인유학생,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생산 자료생산주기: 매년
	외국인인구	외국인	통계청 인구총조사(2005년) -전수부문	생산 자료생산주기: 1992~2007년
	구시군별 외국인등록인구		각시군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리실	생산 생산단위: 시도
경제	외국인의 취업률	외국인 (국적별, 성별)		미생산
	직업별(대분류) 외국인	외국인 (국적별, 성별)		미생산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외국인 (국적별, 성별)		미생산
교육	교육정도별 외국인	외국인 (국적별, 성별)	통계청 인구총조사(2005년) -전수부문	생산단위: 전 국
	연간 다문화교육 교육이수일수	초·중고 재학생		미생산
가족	다문화가족의 가족형태별 분포	외국인 (국적별, 성별)		미생산
	국제결혼 연도별 통계	외국인배우자 국가별	통계청	1990~2006년
	외국인과의 혼인율	외국인 (국적별, 성별)		미생산
	외국인과의 이혼율	외국인 (국적별, 성별)		미생산
	다문화가족의 이혼사유별 이혼율 및 구성비	외국인 (국적별, 성별)		미생산
건강	외국인의 사망율	외국인 (국적별, 성별)		미생산
	외국인의 유병율	외국인 (국적별, 성별)		미생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외국인 (국적별, 성별)		미생산
문화	외국인의 한국어구사능력	외국인 (국적별, 성별)		미생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외국인 (국적별, 성별)		미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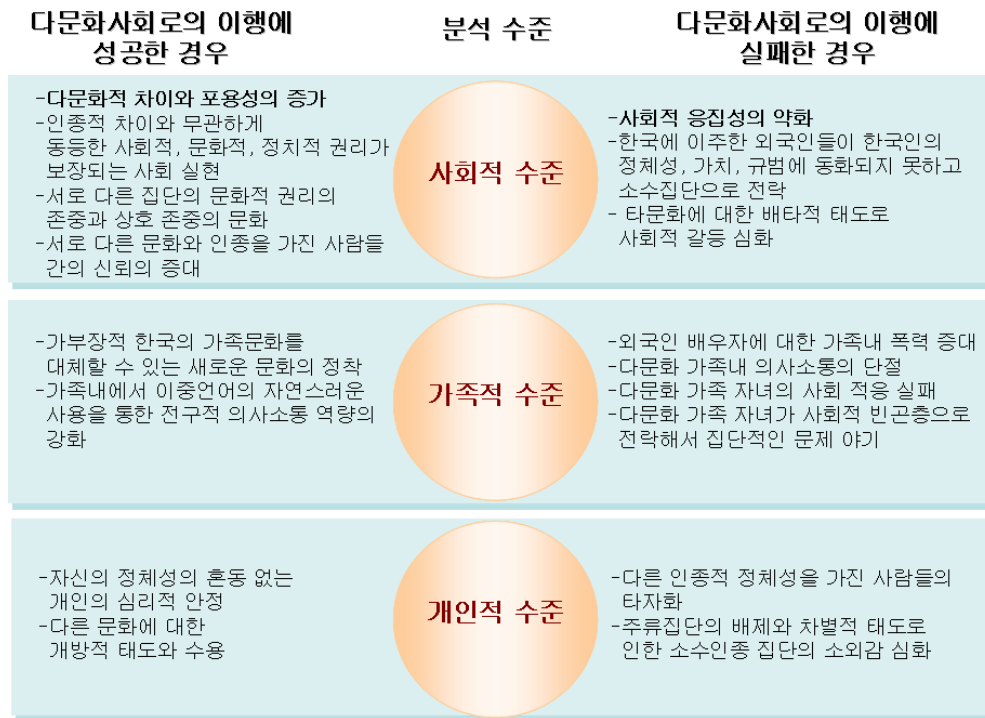
제 4장 다문화사회를 향한 정책적 대응방안

1절.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회통합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개인적 수준, 가족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으로 나누어 성공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예측해보았다. 우선 개인적 수준에서는 주류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인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타자화시키고 이들에게 배제와 차별적 태도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소수인종 집단의 소외감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가족적 수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족 내 폭력이 증대하고, 다문화 가족 내 의사소통이 단절되며, 다문화 가족 자녀의 사회 적응이 실패할 수 있다. 만일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폭력적인 가족 내 분위기와 사회 내에서 차별받는 집단의 일원으로 성장한다면, 이들이 성인이 된 뒤에는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집단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정체성의 혼란과 소외감, 가족적 수준에서의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연쇄적으로 사회적인 위험요인의 폭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만일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가치, 규범에 동화되지 못하고 소수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주류사회의 시민들이 여전히 소수민족의 문화에 대해 차별적이고 배타적 태도를 갖는다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는 한국사회 전체의 사회적 응집성의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면, 한국사회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수준에서 모두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집단은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의 혼란 없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것이며, 다수집단은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이를 수용할 것이다. 가족적 수준에서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내에서 가부장적인 한국의 가족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며,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통해 전지구적 의사소통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사회전체의 수준에서는 다문화적 차이와 포용성이 증가하고,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적 권리의 존중과 상호 존중의 문화, 인종적 차이와 무관하게 동등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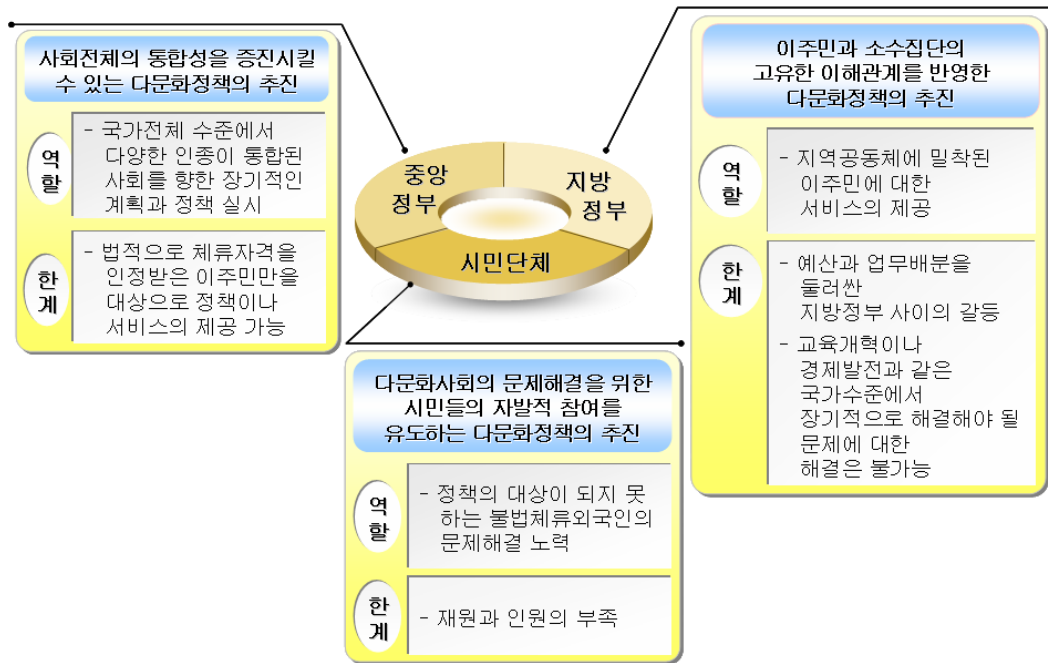


〈그림 5〉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의 성공과 실패시 예측될 수 있는 현상

2절.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정부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과 일부 직종의 인력부족현상의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담론화되었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들의 실행과정에서 국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관주도형 다문화주의(오경석, 2007; 김희정, 2007; 이선옥, 2007)'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완전한 관주도형은 아니라 국가-시민사회간의 흡수, 상호공조(collaboration), 거버넌스(governance)(윤인진, 2008: 87)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가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담론과 정책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우리는 한 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정치적·제도적 환경을 창출해 가면서, 이와 동시에 지역의 개발과 발전 과정에 지역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핵심적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함으로써 위기 또는 기회에 대한 참여적 대안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협력적 다문화 네트워크 모델이 추구하는 바라고 본다. 협력적 네트워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각각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은 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상대적인 이점과 제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림 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간 협력적 역할 분담

이주민대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가 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인정받은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시민단체의 경우는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외국인들도 문제해결집단으로 보아 보다 포괄적인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해법의 제시가 가능하다. 실제로 국가는 이주민력의 활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같은 목표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저숙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고용허가제와 제한된 출입국정책을 통해서 외국인의 노동권에 대한 제약이 강한 편이며 이로 인해 불법이민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정책의 영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시민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주변화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수인종집단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자원과 인원과 같은 문제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면에서 분명한 제약점을 지닌다. 상대적으로 국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다문화사회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서, 시민사회는 국가에 비해서는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가진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해서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을 시도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상호공생

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면서 파생되는 사회위험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비교해보면, 지방정부가 지역공동체에 밀착된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앙정부와 다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육개혁이나 경제발전과 같은 국가수준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문화갈등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업무배분을 둘러싼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도 다문화의 진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절. 다문화사회의 미래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

한국사회의 경우는 아직까지 가족단위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 개인에게만 단기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정책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족단위로 정주할 수 있는 이주민은 새터민과 일부 외국국적 동포 그리고 한국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이 주류가 될 것이다. 출신국이나 지역별 혹은 종족별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주의 2단계로 접어든 외국과 달리 한국사회는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1단계에서 3단계로의 변화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예상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해체현상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다문화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인 이주의 1단계에 서 있다고 가정할 때, 이주의 1단계 정책을 단기적 다문화정책이라고 한다면,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이주의 2단계와 다문화사회가 정착되는 이주의 3단계의 정책은 보다 중장기적인 다문화사회의 위험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의 단계별 위험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이주의 1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가치 그리고 습속을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이주민들의 경우 언어의 제약으로 국가나 NGO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행 1단계의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중복되고 있는데, 이들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에서 이혼이 급증하는 등 다문화가족내의 결속력이 해체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신상과 결혼 후 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현행과 같이 중개업체에

의해 국제결혼이 양산된 뒤 사후적으로 다문화가족내에서 발생하는 가족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결혼당사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사증 사전인터뷰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의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인터뷰에 참가하는 남녀 배우자에 한해서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에 치중된 감이 있으나, 이들의 보다 원활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다 넓은 맥락의 한국적응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거, 교통, 사회, 보건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은행거래, 쇼핑, 가게 관리, 기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조언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단기간의 초급과정에 국한된 한국어 교육의 경우 초급부터 고급까지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보다 완벽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현재는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대상을 거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한정시키고 있는데,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배우자인 남편을 대상으로 부인의 출신국의 문화를 알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 이외에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초기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기정책들 중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복잡한 국적취득 절차와 한국어 습득 이전까지 출신국의 언어로 번역된 행정서비스의 안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임신과 출산기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산전 및 산후관리서비스와 산후도우미 파견, 예방접종 및 육아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다문화가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점은 보건이나 의료와 관련된 용어들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여성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출신국의 언어로 된 안내책자나 통역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신규이민자와 이미 정착해 있는 이민자가 공존하기 시작하는 이주의 2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기존 이주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활용, 서로를 연결하여 의료, 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서비스연계(Service bridging)체계를 제공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인 정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주의 2단계에서는 이민자들의 사회적, 직업적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주택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주택문제가 심각한 국가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거공간을 둘러싼 일반시민과의 갈등이 증

폭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의 소지는 상황이 비슷한 한국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이주의 2단계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 주류사회의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주류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성취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본격적인 취학연령에 다다르게 되면,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다문화가족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보의 제공 및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보다 난이도가 높은 한국어교육 기회의 제공,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나 방학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동시에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여성들이 어린 자녀의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 대부분이 취업을 통해 경제적 수입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취업시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초기시 실시하는 정책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외국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분리되고 배제된다면 이러한 정책조차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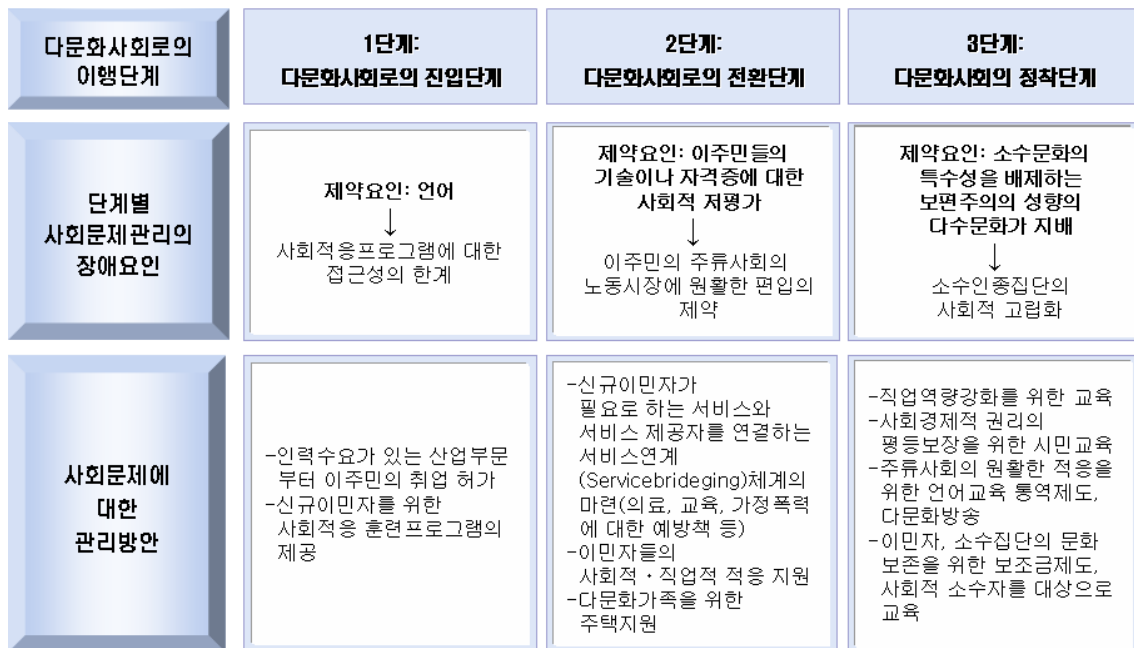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이들이 주류사회의 구성원들과 결혼하면서 다문화가족이 본격적으로 재생산되기 시작하는 이주의 3단계에서의 위기관리의 핵심은 이들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이 가진 기술이나 자격증에 대해서 주류사회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능력에 적합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한다는 점이 이주 3단계의 위기관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전환단계에서의 성공적인 위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부담은 다시 국가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태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보장을 위한 시민교육, 주류사회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일반국민 대상의 문화교육 등이 꾸준히 실시되어야 한다. 문화교육의 핵심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그 위에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자유롭게 발현하고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의 기본적 지향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이 이주민이 아니라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시민 전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현재 단기과정 위주로 되어 있는 이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단계별로 분화시키고 각 단계를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

강사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은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한국사회 전체의 사회통합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농촌을 비롯한 특정지역의 저출산문제와 같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현안 문제의 단기적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와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체계적인 방향으로 이주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등 이주민 관련통계들이 분리되어 생산되지 않도록 이주관련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경제상태와 장기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인력 수요예측과 이에 대응하여 국내의 인력수요에 부응해서 체계적으로 이주민의 적정규모와 인력의 질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림 7〉 다문화사회로의 이행단계별 사회문제 및 정책적 대응방안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관용을,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때, 타인에 대한 관용을 가지는 것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데 있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소수 이주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력,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부와 NGO 사이의 성공적인 역할배분과 공조체제 확립,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는 보편주의적 시민권 확보와 문화적 특수주의와 존중사이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정체성과 문화

적 차이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감수성과 자세,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tolerance)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진정한 다문화주의란 법률적 제도적 정비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교육을 통해 전적으로 다른 정체성, 삶에 대한 철학, 세계관과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이 만들어짚으로써만 가능하다.

* 향후 필요한 연구과제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점검지표 개발
- 한국사회,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변화와 미래예측

참고문헌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4.
- 김비환. 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한국법철학회』 10(2): 317-348.
- 김혜숙. 2000.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주의: 열린 주체 형성의 문제.” 『철학연구』 76: 203-229.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 and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pp. 58-79.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67-93.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pp. 22-56.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상길, 안지현. 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51(5): 58-83.
- 이선옥. 2007.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한울아카데미. pp. 82-107.
- 이재정. 2003.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모색.” 『민족연구』 11: 103-116.
- 이혜경. 2008.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42(2): 104-137.

- 정상준. 1995.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여름호: 79-95.
- 최현.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147-227.
- 한국사회학회.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 Beck, U. 1986. 『위험사회』 (1997). 홍성태 옮김. 새물결.
- Banting & Kymlicka(eds.) 2006.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Oxford.
- De Haan, A. 1999. "livelihoods and poverty: The role of migration-A critical review of the migration literatur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6(3): 1-47.
- O'Brien. 1996. "Migration and Its Risk." *The International Migrant Review* 30(4): 1067-1077.
- Franks, E. 2003. "A livelihoods approach to migration and poverty reduction." paper commissioned by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
- Kymlicka, W. 1996. *Multicultural Citizenship*. Clarendon Press. Oxford.
- Robinson, A. M. 2000. "We the People: One nation, Multicultural Society." *Library Trends* 29(1): 6-48.
- Ronald, S. 2002. "Migration and Poverty."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17(4): 67-82.
- Taylor, C. 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ropper, H. 1999. *Theoring multiculturalism: A Guide to the Current Debate*. New York: Blackwell.